

권두칼럼

지역연구 특집 1

부산의 도시외교 - 새로운 제안 중심으로

지역연구 특집 2

부산 영화 & 영화제를 말한다

지역연구 특집 3

문화로 접근하는 부산의 도시재생, 영도

이슈 분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진단

4.15 총선 분석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과 세계에 미친 충격

규슈통신

부산의 3색 종교 순례길

그리스 크루즈 여행

부산 문화를 논하다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터뷰

CEO포커스

박병대 송월(주) 회장 인터뷰

People & Story

안기성 목사 월간 '길벗' 창간발행인 인터뷰

부산의 이색 단체

김영환 한국정책공헌연구원 이사장 인터뷰

경제논단

地域社會 지역사회



地域社會

통 권 2020년 창간호
 발 행 인 장제국
 편 집 인 장지태
 발 행 일 2020년 6월 5일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315호
 T e l 051) 320-1708
 F a x 051) 320-1691
 E-mail pusamo21@dongseo.ac.kr
 인 쇄 처 CCA
 인 쇄 인 정형권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004 권두칼럼

코로나19 사태가 남긴 것

장제국

COVER STORY



007 지역연구 특집 1: 부산의 도시외교 - 새로운 제안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축적의 외교 인프라 구축 필요

장제국

상하이-광저우-선전-칭다오 등 주요 도시와 교류 확대를

신정승

인구 500만 부산-후쿠오카, 자유무역도시 초국경 경제권으로

정구중

극동러시아와 교류·협력 발판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길

배수환

상생 번영의 파트너십 통해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

김영선

045 지역연구 특집 2: 부산 영화 & 영화제를 말한다

25회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어제, 오늘, 내일

김은영

문화와 산업이란 두 마리 토끼

김용성

062 지역연구 특집 3: 문화로 접근하는 부산의 도시재생, 영도

‘오래된 젊은 섬’ 영도의 재발견

장지태

“도시재생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 이르는 ‘보전적 개발’ 중요”

이승욱

“영도는 일과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지”

김철우

“살아 있는 부산을 알리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나리

094 이슈 분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진단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경과 및 현황과 방향

박재울

동네소멸시대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초의수

[칼럼] 지방 쇠퇴는 나라 전체의 공멸 부른다

오영환

- 118 **4.15 총선 분석**
지역경제 초도화... 여야 떠나 의원들 힘 모아야 박석호
- 124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과 세계에 미친 충격**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 근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장철훈
- 131 **규슈통신**
코로나19와 일본 마츠바라 다카토시
- 135 **부산의 3색 종교 순례길**
명상하듯 성찰하듯 걷는 자유와 평화의 길 박창희
- 147 **그리스 크루즈 여행**
서구문명의 근원과 인간의 존재를 향한 지중해 여행 김기홍
- 155 **부산 문화를 논하다**
“문화예술인-시민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에 매진” 강동수



- 163 **CEO포커스**
대한민국 대표 타월 브랜드에 더해 신소재 복합체 전문 기업까지 박병대
- 171 **People & Story**
50여 년간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다 안기성
- 176 **부산의 이색 단체**
“공직생활 노하우와 경험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터” 김영환
- 182 **경제논단**
新 산업혁명의 시대, 부산-후쿠오카의 새로운 협력 방안 배수현

코로나19 사태가 남긴 것

장 제 국
동서대 총장

“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온 불완전한 글로벌리즘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

미중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급속도로 번져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자랑하던 세계는 삼시간에 국경을 걸어 잠그기 시작해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어렵게 되었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세계 경제를 목도하며 지구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는 현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여전히 예측불허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각종 첨단 통계기법과 행동과학을 활용하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80년대 말 동서냉전 붕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듯이,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올 세상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첨단 의학이 지금과 같이 발달해 있지만 인류를 이 정도까지 공포에 빠뜨리게 할 줄은 몰랐다. 아직도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 개발은 깜깜무소식이다. 속수무책의 세상임에 틀림없다.

둘째, 우리가 즐기치게 신봉해 왔던 글로벌리즘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편중된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도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는 전무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각기 국경을 봉쇄하기에 바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난과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등 야만이 난무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방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정보를 차단하고, 개인의 이동 등을 철저히 공권력으로 통제하여 코로나19가 전 중국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발생지 우한은 이미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상태이다. 비교적 코로나19 대응이 잘 되었다는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언론 매체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와 인권이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존중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생명이 중요한가 아니면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가라는 양자 택일의 논쟁은 언제나 전자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 가치를 내세우며 정부의 격리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할 정도이다.

넷째, 미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조차 사회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수 자본주의를 강하게 신봉하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1,200달러를 이미 지급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만간 추가로 1,200달러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일인당 10만 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정책을 마구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팬데믹 이전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작금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면수업이 어려워진 초중고와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법규가 정한 온라인 수업 상한제나 15주 대면 수업 규정 등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그간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반대하던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온 불완전한 글로벌리즘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국제협력과 인류에 정신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제(regime)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아무리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굳건히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공권력과 접하게 될 경우, 자유와 인권은 심대히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가치를 저버리면 삶은 무의미해진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걸맞은 규제완화와 법제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비슷한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높다고 감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전 지구적 규모의 전염병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게 던지고 있는 시사점을 잘 살피고,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마침 제21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소모적인 정쟁이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이제 그만두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려 나갈 지를 깊게 고민하는 미래지향적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01

COVER STORY : 지역연구 특집 1

부산의 도시외교 - 새로운 제안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축적의 외교 인프라 구축 필요

장제국

상하이-광저우-선전-칭다오 등 주요 도시와 교류 확대를

신정승

인구 500만 부산-후쿠오카, 자유무역도시 초국경 경제권으로

정구종

극동러시아와 교류·협력 발판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길

배수한

상생 번영의 파트너십 통해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

김영선

지속 가능한 축적의 외교 인프라 구축 필요

장 제 국

동서대 총장



들어가며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이다. 비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340만 명이라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웬만한 유럽의 국가 규모를 능가한다. 지리적으로는 태평양과 아시아대륙을 잇는 시작 지점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 극동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부산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말하자면, 부산은 동북아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의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산은 앞으로 이러한 조건을 잘 활용해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부산의 세계화는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 독자적 발전 역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뉴욕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외국 자본과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용이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보다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구상된 전략적 도시외교는 중앙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 본고는 부산의 도시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총론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부산의 도시외교 현주소

부산과 같은 지방도시의 외교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외교 무대는 지방과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외교의 경우, 주로 문화교류와 관광객 유치 등에 치우쳐 있다. 물론 도시외교를 통해 일부 해외 자본의 유치가 성사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빈번한 것은 아니다. 부산의 경우, 전 세계 26개 도시와 자매협력관계를, 11개 도시와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여느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속성과 축적성의 결여

우선, 지속성과 축적성의 결여이다. 국제관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는 상대 도시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의 축적과 같은 외교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쉽게도 부산의 도시외교는 단발성, 단절성, 홍보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의례적으로 해외자매도시를 순방하며 의전적 외교를 수행하고, 동행한 상공인들과 지정된 현지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패턴화 된 단발적인 도시외교가 주를 이룬다.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나 부산-후쿠오카 포럼에 참석해 시장이 인사말을 했다는 정도의 홍보성 기사에 머문다.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다녀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비슷한 의전외교가 진행되고, 외교 담당부서의 잦은 물갈이는 외교의 연속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의 도시외교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시정에서 그 우선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외교를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다.

2) 도시외교의 뚜렷한 비전 부재

둘째, 도시외교의 뚜렷한 비전 부재이다. 물론 부산시는 그간 '세계도시 부산', '동북아 중심도시 부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 구현' 등과 같은 비전을 내세워 왔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지가 불명확한 것 같이 보인다. '세계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부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려면 중국과 일본 도시와 연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웃나라 도시와의 연계를 구상한다면 '중심'이나 '허브'라는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의 거대도시들이 부산이 중심이 되는 구상에 흔쾌히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도시외교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 도시외교의 방향이 구체성을 가지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구호성에 머물 수밖에 없다.

3) 도시외교의 목표와 실행방안 간 불일치

셋째, 부산시가 내걸고 있는 도시외교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실행방안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이다. 부산시의 도시외교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미래산업국, 관광마이스국, 문화체육국 등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직제상에는 성장전략국 도시외교정책과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는 도시외교를 통하여 도시의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도시외교를 통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도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면, 우호도시와의 협의회 체결, 국제행사 개최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남방도시외교의 경우, 아세안(ASEAN) 우호도시들에 대한 한글학교 지원, 인도네시아 자매도시 '수라바야 크로스 컬처 페스티벌'에의 공연단 파견 등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또한, 신북방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부산발 유럽대륙 철도 사업' 등 남북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산이 북방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도시외교를 통한 "미래성장"이라는 비전의 참신성과 유효성은 높이 살 만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외교 인프라의 구축

미래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외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신뢰관계의 구축과 인적 네트워크의 축적이다. 이는 도시수장 간의 단순 교류나 협정서 조인 등의 단발성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부산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국의 재계, 학계, 정계 등의 핵심인사들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교류가 축적되어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담당부서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어렵게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소멸되는 구조를 가지고서는 결코 도시외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시간과 비용, 꾸준한 노력이 소요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시외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부산시가 내걸고 있는 “미래성장 기반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부산-자매도시 시장회의 설치와 운영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은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도시 브랜드 격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산시도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는 국가차원의 행사이므로 부산은 2차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국제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연례행사를 기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부산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부산의 자매도시 시장들을 초대하는 ‘(가칭) 부산-자매도시 시장회의’를 설립해 운영해 보자. 이러한 회의기구를 통해 해외 도시 시장들과의 깊은 친분을 쌓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 또는 일회성의 성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간 국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도시의 수장이 움직일 때는 지역의 대표적 상공인들도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공인들 간의 포럼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 직속 글로벌 도시 자문회의(Global Busan Advisory Group) 설치

세계 각국의 세계적 도시문제 전문가들을 부산시장 직속의 글로벌 도시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부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은 부산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부산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향력 있는 도시전문가들이나 각종 세계 우수 언론을 통해 부산을 권위 있게 해외에 소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2006년 9월 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부산-후쿠오카포럼의 창립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동서대학교

3) 글로벌 도시포럼의 설치

지역의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정기적인 글로벌 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적 도시전문가, 금융인, 미래학자, 대학교수 등이 부산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부산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많은 글로벌 핵심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부산과 연을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포럼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면 새롭고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부산국제교류재단 역할의 확충

현재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 청년해외체험 등과 같은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차체에 재단을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 버금가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예산지원 형식에서 벗어나 재단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지원, 부산단체에 대한 해외회의 개최 지원, 세계 석학 초청 지원, 시민단체 국제교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해외 주요 인사들의 부산 방문 촉진, 부산 시민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5) 도시외교 담당부서의 위상강화와 영구 기구화

부산시의 경우, 시장에 따라 도시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소멸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전문적인 지속성과 축적성이 결코 담보될 수 없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경우, 지식할 조직으로 지역외교국을 두고 있고, '외교감'이 지역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부산시에도 외교부에서 파견된 국제관계대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장에게 직보하는 지역외교국을 영구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부산은 일본 후쿠오카, 중국의 상하이,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 도시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유레지오리'는 도시 간 연계로 유명하다. 국경이 접해 있다 보니 매일 아침 국경을 넘어 이웃 도시로 출근을 하는가 하면, 도시 간의 비교우위를 잘 활용하여 특정산업 분야를 함께 육성하기도 한다. 부산도 이웃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경제특구 구상

2006년 창립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그간 부산과 후쿠오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초국경 경제특구 구상의 실현을 주장해 오고 있다. 220km의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가 있다.

우선, 양 도시 공히 서울과 도쿄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방도시라는 점이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양국의 두 지방도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어질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양 도시는 동북아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서울과 도쿄 간의 갈등은 고스란히 부산-후쿠오카 간 교류와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어도 한일관계만큼은 부산과 후쿠오카가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양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동북아 최초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면, 경제적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화제성에서도 부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산 소재 중국 관련 단체·포럼과의 협력 확대

중국 상하이의 경우, 부산의 자매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위상이 부산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하이의 발전상을 고려한다면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서대 중국연구센터의 경우, 2016년 11월 중국 상하이 통지대 중국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산-상하이 협력 포럼’을 창립한 이래 부산과 상하이의 학계, 상공계 등을 망라한 인사들 간의 교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양 도시 간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략적 협력구상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앞으로 양 시정부의 간부들과 언론인 등도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양 도시 간 협력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부산에는 부산대 중국연구소, 부산차이나 비즈니스 포럼, 부산한중우호친선협회 등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다. 부산시는 이들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연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3) 극동러시아와의 연계

극동러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스크 등이 극동러시아의 주요 도시이다. 극동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북한을 관통할 수 있는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에서 유럽대륙으로 잇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극동러시아와 환동해연안 도시들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 국경 지역을 아우르는 이른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1990년부터 오랜 세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과 일본 니이가타(新潟)에 위치한 ‘공익재단법인 환동해(일본해)경제연구소(ERINA)’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특히 ERINA는 매년 초 한국은 물론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북한 등으로부터 학자, 관료들을 니이가타시에 초청하여 ‘동북아시아 경제 발전 국제회의(NICE)’를 개최하고 있다. ERINA는 극동러시아, 북한 등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장기간에 걸쳐 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이러한 기관과 긴

밀히 연계해 부산의 극동러시아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연구원과 ERINA가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4. 아시아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도시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불꽃축제, G-Star 등 부산에는 아시아의 젊은이들의 큰 관심을 끌 만한 많은 볼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행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비싼 경비를 들여가며 이들 행사 참여를 위해 부산에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부산이 이들 눈에 선망의 도시가 되어 장기간 체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두 가지 정도 제안한다.

1) 유학생 3만 명 유치 계획

우선, 외국인 학생들이 부산 소재 대학에 대거 유학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한 방법이다. '유학생 3만 명 유치계획'을 첫 단계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 소재 각 대학의 개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 아시아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본 벳부시의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도시임에도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이 4,000명이 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 오이타현(大分県)과 벳부시(別府市)는 일본의 명문사학 리즈메이컨(立命館) 대학을 유치해, 총 사업비 300억 엔 중 오이타현이 150억 엔, 벳부시가 42억 엔을 거출해 아시아태평양대학(APU)을 설립했다. 2010년 오이타현이 내놓은 '대학유치를 통한 파급효과 검증' 보고서는 연간 211억 엔의 지역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즈메이컨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기업들로부터 장학금을 출연 받아 장학기금을 마련해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일본 기업체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부산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부산으로 모일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센텀시티 아시아 문화콘텐츠 창업밸리 구축

또한, 센텀시티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콘텐츠 창업밸리를 만들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아시아의 우수한 젊은이들의 창업놀이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창업밸리에는 벤처캐피탈은 물론이고,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윈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 아이디어맨들의 집합소로 육성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우수 젊은이의 유치는 물론, 동북아 창업 메카로서 부산의 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영화인력 양성 프로그램, 한류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부산이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매력 만점의 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본고에서는 도시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 인프라 구축, 이웃 국경 도시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아시아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부산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총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이 단순한 슬로건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부산이 중앙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략적 도시외교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 1월 '부산시 도시외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부산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의 발생은 이 위원회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의 국제화 전략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표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상하이-광저우-선전-칭다오 등 주요 도시와 교류 확대를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장
前 주중대사



들어가며

우리에게 중국은 이웃나라로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위한 도시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유익한 일이다. 부산은 한국 제1의 항구이며,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서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인들과 대화해 보면, 대체로 부산이 깨끗하고 해변을 갖고 있는 아름답고 개방적인 항구도시여서 또 오고 싶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며, 일부 인사들은 부산국제영화제에 관심을 보이곤 한다. 이런 점에서 부산은 중국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태환경 보호, 교통문제에 대한 대응, 방역과 의료, 교육, 상·하수도 운용 등 도시 거버넌스(governance)에서의 협력, 그리고 물류, 녹색성장이나 4차산업 발전 등 경제협력과 더불어 부산이 자랑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활용한 문화교류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부산과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는 공공외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1. 부산의 대(對) 중국 도시외교 현황과 어려움

부산의 대 중국 도시외교에 대한 현황은 일단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물론 웹사이트의 기록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부산시의 대 중국 도시외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간 부산시의 대 중국 도시외교는 자매도시인 상하이(1993년)와 우호협력도시인 베이징(2003년), 선전(2007년), 톈진(2007년), 충칭(2010년)과 광저우(2019년)시와의 교류 위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중국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 현황에 대해 자매도시인 상하이는 2008년부터, 우호협력도시들과는 최근 우호도시가 된 광저우를 제외하고는 우호협력관계에 서명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의 활

동에 대해 기술해 놓고 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부산시의 활동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름대로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부터는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활동 내용을 분류해 보면 부산시나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 대표단 상호 방문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무방문이 41건이지만 상당 부분 다자 포럼, 박람회 참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실무공무원 연수를 위한 상호 방문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척과 관련된 것은 부산 측에서 중국 도시들을 11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교류가 8회, 예술단 교류가 6회로서 비교적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2016년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이는 아마도 자료들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정치적 이유로 양국 도시들 간의 교류에 큰 장애가 조성되었던 것도 상당히 작용했었을 것이다.

근년 들어 외교에는 중앙정부 이외에도 도시나 민간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 외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이듯이, 도시외교의 중심은 시 정부이다. 특히 중국은 전통적으로 관료의 힘이 강했고, 이러한 관료의 힘은 현 중국공산당 체제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이나 시 고위간부들과의 교류가 도시외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부산시의 도시외교 기록에 중국 도시들의 시장이나 시 간부들과의 교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 정부 간의 교류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그간 전개했던 시 정부의 활동도 시민들 간 경제와 문화교류 등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연결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이후 부산시의 대 중국 도시외교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 몇 가지를 중국이란 국가의 특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주요 지방 도시들의 인구와 경제력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산과의 교류와 협력에 과거와 달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의 자매도시인 상하이인 인구가 2,400만이고 지역 총생산액도 작년에 5,700억 달러를 넘어 부산의 7배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중국 제1의 도시는 상하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의 대외교류에서는 부산과의 교류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많지 않은 부산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대칭적이지 못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와 제도를 갖고 있어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자체장이 선출직으로서 자신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도시외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시진핑 등장 이후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고위 당원들과 관료들의 행동이나 발언, 해외 출장 등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면서 중국 도시들의 외국과의 교류가 위축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부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0년 후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뚜렷해지고, 이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드와 같이 한중 간의 정치안보 이슈가 지방 도시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새로운 요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선 정경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이슈를 도시들 간의 협력과 연계하지 말자는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2. 대 중국 도시외교를 위한 제언

이와 같은 부정적인 흐름과 여건은 앞으로도 부산의 대 중국 도시외교에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서 이와 같은 여건에 어떻게 적응하여 중국의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으며, 필자로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싶다.

첫째,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북아를 넘어 최소한 동아시아를 염두에 두는 발상이 바람직스러우며, 내용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어느 외국의 도시도 부산과의 활발한 교류에 매력을 느끼게끔 부산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부산의 장점과 더불어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PO 같은 전 세계적인 대규모 국제 행사들의 부산 개최는 부산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부산시민들이 중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예를 들어, 서울의 외교부나 주(駐)부산 중국총영사관과 협의하여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부산에 내려와 부산의 여문지도층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준다든가, 중국의 문화예술 공연이 보다 자주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지원하면서 총영사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를 담당할 부산시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중국 내 도시들은 2019년 기준으로 인구 3백만이 초과하는 곳이 29개 이고, 이 중에 500만을 넘는 도시도 15개에 달한다. 부산시가 이런 도시들 모두를 대상으로 도시외교를 전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국 내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현재 자매도시인 상하이 외에 베이징, 톈진, 충칭, 선전, 광저우 등 5개의 우호협력도시를 갖고 있고, 이들 도시는 모두 정치적, 경제적 위상 면에서 중국 내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부산으로서는 중국 최고의 도시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9년 새롭게 시작한 광저우를 제외하고 부산이 시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친선 방문 이외에 이들 우호도시들과 그간 과연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하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최대의 도시로서 인구나 총생산 면에서 부산의 7배에 달하는 거대도시이며, 중국 내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으로서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맺어져 있는 자매도시 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하이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현대화되어 있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상하이시 정부와의 고위교류가 기대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면 국과장 등 실무 레벨에서 교류를 확대하면서, 대학이나 연구소, 각종 단체 등 민간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부산의 기존 우호도시들인 베이징이나 톈진, 충칭과도 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겠지만 부산이 이들 도시에 비중을 두고 도시외교를 전개하기에는 명분도 약하고 그럴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

저우나 선전은 중국 남방지역에 위치한 제조업과 물류의 중심도시로서 경제적 위상도 클뿐더러, 해양실크로드 구상과 대만구(大灣區) 개발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물류와 해양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이며,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외에도 부산이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우호도시를 더 늘린다면, 산둥성의 칭다오(靑島)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칭다오는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산둥성 내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인구 500만이 넘는 도시다. 최근 칭다오는 동북아 지역 내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한국 도시들과의 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중부내륙이지만 장강 물류의 중심이며 중국 내 10대 도시의 하나로서 2019년 인구 900만, 지역 총생산 2,300억 달러인 우한(武漢)과의 교류와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인명의 희생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매우 큰 국가 중심도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에 부산이 우한에 관심을 표시하고 협력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중국 도시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게 될 경우, 부산시와의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중국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양 도시 정부 관계자와 학계, 기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부산시 또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산하에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중국우호협회를 만들어 중국 각 도시의 인민대외우호협회와 함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보는 것도 차선책으로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중앙에서는 외교부, 지방에서는 각 지방정부 외사관공실의 민간 형식의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자회의 플랫폼을 통하여 도시 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며, 부산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내지는 한중 도시들 간의 협력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산이 주동이 되어 새로운 도시협력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APEC이나 EAS 회의 등은 양자 간 갈

등이 있는 국가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부산은 한중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도시들 간의 교류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다자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도시들과의 교류를 진행시킬 수 있다. 물론 다자회의 기간에 부산이 원하는 방향에서 중국 도시 지도자들과 유익한 양자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잘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이상으로 부산의 대 중국 도시외교와 관련, 나름대로의 제언을 해 보았다. 현재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부산시장이 공식인 상태에 있어 당분간 부산시의 도시외교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다면 부산이 새로운 활력을 갖고 중국과의 도시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정승 프로필

주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외무부 중국과장, 주 중국 공사와 외교통상부 공보관 겸 대변인, 아시아태평양국장, 주 뉴질랜드 대사,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주 중국 대사를 역임했다. 2010년 12월 국립외교원의 중국연구센터를 창설, 2015년 6월까지 초대 소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로서 동아시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인구 500만 부산-후쿠오카, 자유무역도시 초국경 경제권으로

정 구 종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고문
前 동아일보 도쿄지사장



들어가며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해양을 거쳐 세계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관문이다. 특히 한일교류에 있어 부산은 최근세까지도 유일한 통로였다.

16세기에 일본 사절단은 부산으로 들어와 조선의 조정을 예방하였다. 임진왜란 후 17세기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정부는 조선과의 국교회복과 화친을 청하여 친선 사절단의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5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조선통신사 일행이 12회나 일본으로 건너가 250여 년간의 한일 교린외교를 지속하게 한 출발점도 부산이었다. 우리 민족의 수많은 사연을 싣고 부산-시모노세키 간의 바닷길을 오가던 관부연락선은 부관페리로 이어졌고, 부산발 한일 도시 간 하늘의 직항로도 확대되었다.

부산은 복잡 과밀한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여유를 지닌 도시로 주목 받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국제게임전시회 G-STAR 등 국제적 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부산이 갖는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사람과 문물, 문화가 오가는 도시 간 교류에는 정부의 관여 없이도 '도시외교'가 살아 움직여왔다. 부산과 일본 규슈 각 도시 간의 도시외교는 일찍부터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한일의 대표적 해협도시 사이의 교류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6년 창설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한일 초광역 경제권 해협도시를 잇는 21세기적 도시외교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 포럼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와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간의 학술교류가 진행되던 중 두 지역 간 민간포럼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부산-후쿠오카 양 도시의 경제, 학계, 매스컴 대표들이 참여하여 발족되었다. 두 도시는 각각의 시청 안에 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업상담 및 산업·관광·기업정보 교류 등의 협력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히 펼쳐옴으로 해서 정부를 대신하는 민간교류와 도시외교를 실행해 왔다.

부산은 이 같은 한일 도시 간 소통과 협력의 실적을 바탕으로 21세기에 걸맞은 도시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을 발신기지로 한 한일 도시외교의 실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코로나19 방역과 한일 도시 간 국제협력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세계 각국은 마스크, 인공호흡기, 의료용 보호장비(PPF)가 모자라 폭증하는 환자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서로 도울 생각보다는 자국 우선의 담을 쌓고 있다. 동맹국이나 준동맹국 간에도 마찬가지로 의료공조가 경직돼 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국가 간보다 지역 간 방역협력이 활발하다. 프랑스 파리 15구의 구청장은 4월 10일 자매도시인 서초구청의 조은희 구청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배우자고 요청했다. 조 구청장은 마스크 수급과 IT기술에 접목된 확진자 위치확인 동선 공개 시스템(GPS)을 설명하여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31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서울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자매우호도시들의 요청에 따라 아테네, 이스탄불, 테헤란의 시장들과 각각 통화, 우리 도시의 선제적 대응책을 설명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등 해외도시들과 비디오 세미나를 제언, 해외 도시정부 대표 및 IT기업 관계자들과의 영상대화를 통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감염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의 도시 간 협력은 의료장비의 직접적인 공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래리 호건 주지사는 4월 20일 주의 수도 아나폴리스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으로부터 50만 회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장비를 확보했다”고 발표,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는 인구 605만 명 중 1만3000여 명이 감염됐으나 그동안의 검사건수는 7만 건에 불과했다. 호건 지사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다량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계 배우자 유미 여사가 직접 한국업체와 교섭하는 등 정부 채널과는 관계없이 지역에서의 ‘도시외교’로 확보한 것이다.



세계 각국 주요도시 시장들이 모인 'U20(Urban 20) 시장(市長)회의'가 2019년 5월 21-22일 도쿄에서 열렸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 부산, 일본 해협권 도시들과 코로나19 방역 노하우 공유를

부산시는 후쿠오카 등 일본의 자매도시를 비롯하여 해협권 도시들에 코로나 19 방역 노하우와 의료기기 제공 방법을 공유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16일 긴급사태를 전국에 확대 선언하고 감염자 확산저지를 위해 요식업소, 대소형 점포들에 휴업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으로 코로나19 국제협력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들이 지역 간 협력에 나서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양국 경제인들이 진단키트를 포함한 의료기구를 한국에서 일본에 들여올 수 없을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민간차원의 협력 움직임을 소개했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희망하는 두 나라 국민을 위해 공동으로 전세기를 수배하고 상대국 전세기에 자국민을 탑승시킨 사례를 들면서 위기 때 협력하여 신뢰 관계를 되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이 참고할 만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일 간에 역사갈등으로 정부 간의 통상적 외교가 막혀있는 지금이야말로 각각의 도시가 앞장서서 코로나19 방역 역량과 의료기기의 제공 및 공유 등의 협력에 나서야 할 좋은 기회이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 일대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검사·진단 노하우와 감염자 추적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후쿠

오카, 오사카, 나가사키 등 해협권 우호도시들에게 공유할 것을 제안하기를 촉구한다. 동시에 아직도 부족 상태인 일본에 진단키트, 관련 의료장비의 지원을 주선하여서 도시외교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

3. 국제적 도시 네트워크조직 참여로 도시외교 외연 확장 필요

1) Urban20 시장(市長)서밋, 부산도가맹을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도시외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레벨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도시 네트워크 조직이 도시외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연계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도시의 연계가 세계를 바꿔 나간다”면서 재능있고 인재를 몰려있는 곳에 자본과 기업이 찾아온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도시 간 국제적 기관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아젠다를 공유함과 함께 해결을 향해 공동 협력하는 데 나서야 한다. 신생 도시 간 협의기구의 하나인 U20(Urban20)에는 2019년 말 현재 28개 도시가 가맹되어 있으며 제2회 U20 시장서밋이 2019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발족한 U20 시장서밋은 도시의 경험 및 의견을 국가 레벨의 G20 회의에 반영시켜서 도시의 과제에 국가적인 관심과 해결에의 협력을 촉구하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가 가맹했고, 한국은 서울이 가맹하고 있는 바 부산시도 U20 시장서밋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U20과 같은 도시 네트워크에서 의제로 제기하여 해법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 나갈 과제는 △자원 리사이클의 촉진, △도시와 지구의 환경문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공동구축, △재해로부터의 복구 및 리스크 완화에 관한 의견 교환, △도시치안문제 등 각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숙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일 간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부산과 서부 일본의 도시들은 근래에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해양폐기물들이 왜, 어디에서 해류를 타고 몰려드는지 루트를 찾아서 해양오염 추적지도를 만들고 한일 도시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양오염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역 간 협력체제를 만드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2) 부산-후쿠오카 자유무역도시 구상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공동구축 문제도 시야와 발상을 새로이 하여 한일 두 도시 간에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도시 간 산업활성화 구상 가운데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관세특별구역으로 설정하여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자는 청사진도 있다. 부산시와 후쿠오카시는 2009년 8월 후쿠오카-부산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두 도시의 시정 안에 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두 도시 간 기업상담 및 산업·관광·기업정보교류 등의 협력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후쿠오카-부산 포럼의 이시하라 스스무(石原進) 일본측 회장은 2012년 도쿄에서 열린 한일포럼에서 “후쿠오카와 부산을 합치면 인구 500만에 GDP가 1,100억 달러 규모로서 동북아에서 서울 다음가는 7번째의 지역경제권을 형성한다”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내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후쿠오카-부산을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후쿠오카를 관세특별구역으로 하여 지방이 스스로 지역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설정은 국가정책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두 도시가 적극 나서서 정부를 설득하면 어떨까 하고 그는 말했다.

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부산-규슈 대학과 기업 간에 적극 전개를

한일 간 도시외교의 미래를 향한 추진사업으로서 청년세대의 인재양성, 일자리 찾아주기 등 한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부산과 후쿠오카 등 자매 도시 간에 적극 전개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2017년 9월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2차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부산의 젊은이와 규슈기업의 연계”를 테마로 하여 일손 부족에 고민하는 규슈의 기업들에 부산의 젊은이들을 연결하여 주는 문제를 한일의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스미토모 상사의 규슈대표는 ‘규슈기업의 55%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는 규슈경제백서를 소개하고 규슈에 유학 중인 “한국의 젊은 세대 인재는 일본어 능력이 우수하고 성취의욕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기업에서의 한국 젊은이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

시할 것을 권했다.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부산의 젊은이들의 후쿠오카 기업방문 프로그램과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지의 중소기업 등이 2012년부터 부산의 인재를 채용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제12차 포럼에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규슈지역 기업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 총장은 2018년 제13차 포럼에서도 부산-후쿠오카 대학 간 컨소시움에 28개 대학(부산 13, 후쿠오카 15)이 참가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컨소시움을 통해 양 지역을 잘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의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중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 지원 사항」이 주요업무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글로벌 도시 간 교류협력 등 도시외교사업으로 연계하여 해결의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 간의 외교가 국익을 가장 큰 목표로 하듯이 도시외교 역시 지역 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데 공감 있어야 한다. 일본의 일손 부족과 한국청년 일자리 찾아주는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미래지향적 도시협력사업의 중요한 테마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의 대학가 신촌에서 한국 유학생 출신의 일본인 여성 카스카이 씨(春日井萌·28)는 일본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대학생을 위해 안내역을 하는 카페를 운영 중이다. 작년에 취업 지도한 한국 학생 약 백 명 거의 전원이 일본기업에 취업하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작은 노력과 지원이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충을 덜어주는 힘이 되고 있다. 부산, 후쿠오카에서도 이 같은 일손 부족과 일자리 찾기를 연계하는 청년지원활동을 권장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시는 2012년 시의 기본계획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방침을 밝히고 외국인 인재수용 및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에는 외국인의 기업(起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비자제도를 정부에 건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후쿠오카 기업의 일손 부족에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으로서 외국 인재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라 하겠다.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의 나카무라 유미(中村由美) 연구원은 아시아의 인재들이 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서 후쿠오카시의 도시발전에 활용하지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은 규슈 기업들의 일손 부족과 부산지역 대학의 인재 해외 취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 부산대, 부경대, 동

서대 등 동남권 5개 기관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기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동서대는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 해외취업연수사업인 K-Move 스쿨 6개 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대학들의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시외교 차원에서 일본의 자매도시들과 「한일 산·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본의 도시들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가며

현대는 지방도시의 시대이다.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로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행정역량과 국제행사의 성공적 경험 및 노하우를 살려서 해외의 도시들, 특히 일본의 유관도시들과 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행사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거나 정책이 바뀌면 도시 간의 교류도 단절되고 만다. 도시외교를 전담할 상설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부산이 가진 역동성과 가능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정구중 프로필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주일 특파원, 도쿄지사장, 편집국장, 출판담당 이사, 동아닷컴(donga.com)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법학박사로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일본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현재 일본연구센터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2009년부터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극동러시아와 교류·협력 발판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길

배수한

동서대 교수
러시아 정치학박사



들어가며

국내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1995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다. 이때부터 중앙정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도시외교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산은 1963년 직할시 승격 이후 1990년까지 자매도시 숫자가 5개일 정도로 도시외교의 역량은 미미하였다. 극동지역 최대 항구도시이자 러시아 태평양함대 거점 군항인 블라디보스토크시와 부산이 손잡게 된 것은 1992년이 되어서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2년 뒤의 일이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최초의 북방정책의 작은 산물이었고, 부산은 최대 수혜자였다. 현재까지도 부산항과 연결되는 극동러시아 항만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복합운송 루트로 이어져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극동지역 러시아 항만들의 발전도 눈부시다. 2005년부터 10년 동안 이 지역 항만 평균 물동량은 250% 증가하였다. 다른 지역 러시아 항구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다. 이 지역은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러시아 항구들은 작고 노후화된 부두로 인하여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일본보다는 보완 역할이 가능하며, 항만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을 러시아는 더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 정부도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에서 '9-bridge'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양국 간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산업단지·농업·수산업 분야의 협력이다. 극동러시아가 한국을 크게 반기는 이유이다.

부산과 극동러시아 간의 원활한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산시도 환태평양권 관문도시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정부의 북방정책의 장점을 살려 도시외교를 강화해왔다. 유라시아로 향하는 실리적 도시외교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유라시아 지역과의 우호협력 사업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부산시 산하 국제교류재단 내의 '한러협력센터'를 '유라시아협력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외교위원회도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극동러시아 지방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한국 기업이나 정부를 찾아와 적극적인 협력 사업들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자자체 중 유일하게 유라시아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주도형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중국, 일본에 비해 러시아의 중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산하 국제교류재단에 2006년부터 ‘한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한러협력센터’(유라시아협력센터로 명칭 변경, 2016년)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 ‘유라시아 도시포럼’에서 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2017년에는 ‘북방경제도시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왔다. 즉, ‘유라시아 협력센터’와 ‘북방경제도시협의회’는 부산시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싱크탱크이다. 이에 본고는 지난 10년간의 ‘유라시아협력센터’와 러시아 극동지역과 협의해 온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향후 간단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유는 양측의 고민들은 10년의 연구 성과물에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다만 이를 실행해 옮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1. 부산-극동러시아 도시외교(2011-2019)

1)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

1992년 부산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섯 번째 자매도시로 인연을 맺게 된다. 그 뒤 십여 년 동안 부산과 극동러시아는 소규모 보따리상과 수리조선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5년 허남식 전 시장이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하여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부와 경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2006년 부산시 산하 국제교류재단 내에 ‘한러협력센터’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시작된다. 당시 부산에는 1,000여 명 러시아인이 상주하였고,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부산 러시아스쿨, 부산대 러시아센터 등이 문을 여는 등 다양한 러시아 관련 커뮤니티가 활동하였다. 매년 감천항을 통해 수많은 러시아 선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비롯해 부산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약 30%가 러시아인일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러시아 또한 자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부산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은 활기를 띠게 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만·물류·에



2019년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후 볼쇼이 카멘 지역 복합물류단지 즈베즈다 조선소 현장을 방문했다. 출처: 이데일리

너지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이 세계도시로 응비하고자 하는 부산의 비전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10년 간 진행된 부산-극동러시아 간의 경제포럼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이후 극동러시아 지방정부와 부산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이 주요한 의제였다. 그리고 극동지역 관광인프라 개선 및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유치에도 러시아는 많은 관심을 표방하였다.

두 번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한러협력센터'는 지난 포럼의 경험을 축적하여 한 단계 높은 주제를 설정하여 경제협력의 다각화를 모색해 나갔다. 2014년에는 한·러 의료관광 활성화와 북극항로 협력방안을 처음 논의하였고, 필자도 한·러 비자 면제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지평을 더 넓혀 남·북·중 3각 협력방안 중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다. 2016년에 부산과 극동러시아 간의 수산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부산 향토기업들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한러협력센터'의 가시적인 성과물은 향후 '유라시아 협력센터'로 확대 개편되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넘어서 부산 꿈은 유라시아로서 나가게 된다.

2) 유라시아 도시포럼

세 번째 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유라시아협력센터'로 개편되어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이 '유라시아 도시포럼'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6년 동안 축적된 부산-극동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이 유라시아 국가로 외연이 넓혀진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지자체 외에 중국의 동북 3성(省) 지역이 추가되어 지방정부 간 도시외교에 대한 담론들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2018년에는 '남북상생 시대의 유라시아 협력방안'들이 주목을 받았고, 2019년에는 부산역 광장에 조성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을 부산과 유라시아에 접목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3) 북방경제도시협의회

부산시 신북방정책을 위한 다른 축은 2017년에 구성된 '북방경제도시협의회'이다. 부산시 성장전략본부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주요한 협의체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의 지자체와 관련 기관, 기업들이 동북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것이다. 1차 회의에서 북방 물류루트 활성화사업, 환동해권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 중국 내륙 도시의 화물과 관광객을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항을 통하여 부산항으로 연결하는 항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향후 북극항로 개발에 앞서 환동해권 해양물류 이슈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9년 '북방경제도시협의회'는 장소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기고 외연도 확대시켰다. 2년 만에 국제규모의 외형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부산시가 중심이 되고, 경상남도,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교토부 등 7개 지자체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동북아해사로국제해운유한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12개 기관 및 기업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부산과 연해주에 각각 합작법인이 설립한 전용 물류센터, 러시아 수산회사와 공동투자로 부산 신항에 설치한 수산물 냉동물류센터, 러시아 불쇼이 카펜 지역에 조성한 조선지원 물류센터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2. 대(對) 극동러시아 도시외교를 위한 제언

극동러시아 지역 도시외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십 년간 수행한 ‘유라시아 협력센터’와 ‘북방경제도시협의회’가 축적해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부산의 도시외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부산-극동러시아 지역 간 교류협력의 장에서 논의되어 온 분야는 크게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1) 물류분야: 무역활성화를 위한 물류·교통 인프라 육성
- 2) 관광분야: 관광인프라 투자, 의료관광 확대, 환동해권 크루즈 산업 활성화
- 3) 해양수산: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산분야 협력
- 4) 국제협력: 남·북·중 3각 협력(나진·하산 프로젝트),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
- 5) 인적교류: 유라시아 도시포럼, 북방경제도시협의회 → DB화, 네트워크 활용

1) 양국 합작 물류센터 성공 위한 관심·지원 필수

첫째, 물류분야 활성화이다. 지정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산과 극동 러시아 도시들은 물류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이 분야 진출을 위한 의구심들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이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한·러 합작)들 중심으로 부산과 연해주 지역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방경제도시협의회’의 산물로 추진되는 물류센터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양국 지자체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류산업에서 사활여부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양국이 합작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성공은 향후 더 넓은 영역의 사업과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때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2) 환동해권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의료관광 확대

둘째, 관광분야이다. 2000년 속초항에서 러시아 자루비노를 거쳐서 훈춘과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관광 상품이 선보인 바 있다. 2014년 이 항로는 중단되었고, 2019년에 재개되어 속초-러시아 슬라비안카-일본 기타규슈 항로로 겨우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이탈리아 국적의 10만 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포츨나호’가 부산에서 출항하여 속초에서 수도권 여행객들을 흡수한 뒤 블라디보스토크-일본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인천항

로에 투입된 적이 있다. 당시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가 연간 1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호황을 누렸었다. 정말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은 크루즈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식과 부담으로 아직 국제적 수준의 정기항로를 갖지 못하고 있다. 비록 부정기적인 항로라도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남부 지역과 연계된 환동해권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4개국 해당 지자체의 의식변화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러시아인 부산 의료관광이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다. 작년 가을 부산 서구는 부산시와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관광 시장을 공략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까지 힘을 보태어 팸투어를 구성하여, 부산 지역 최신 의료시설과 수준 높은 서비스 현장과 새로운 관광상품까지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보여줘 큰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부산의 장점을 살린 가성비 높은 고품격 의료서비스 체제와 안목을 조금 더 넓혀 글로벌 관광(일본 큐수지역 연계)까지 접목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빼앗긴 고객들을 충분히 다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3) 불신 낫은 '협력 단골메뉴' 해양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셋째, 해양수산분야이다. 이 분야는 양국 간 가장 많이 회자되었고 실망만 안겨줬던 분야다. 나호트카 항만개발사업, 나지모프 수산가공단지 사업이 그것이다. 양국이 극동지역에서 협력사업을 논할 때 이 프로젝트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단골메뉴였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위협'을, 러시아는 '말 뿐인 한국 사업가'들이라고 상대를 비난해 왔던 대표적 불신 사례다. 다행스럽게 최근 러시아 최고 수산물 가공회사인 도브로플로트사와 공동투자로 부산 신항 물류부지에 수산물 물류센터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이 또한 '북방경제도시협의회'의 산물이다.

최근 포디아폴스키와 볼쇼이 카멘 지역에 해양수산과 물류, 제조가 가능한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지역 언론의 제의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가 러시아 측과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양국 경제부총리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 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분야와 물류·제조 산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단지 조성이다. 물류센터 설립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양측의 사업역량을 단

번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업구상이다. 이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이처럼 해양·수산과 물류·제조를 연계한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러시아 연해주에 지속적으로 기획해 볼 가치가 있다.

4) 중단된 두만강개발계획 재가동해 북 개방과 남·북·러 경제협력 모델로

넷째, 국제협력사업 분야이다. 부산시는 2019년 12월부터 '남·북·러 수소 생산·운송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 지역의 저렴하고 많은 갈탄을 이용하여 생산지에서 수소를 생산·액화한 뒤, 바닷길로 운송하여 국내외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 최대 환적항만인 부산이 수소 벙커링 사업과 공급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석탄 가스화, 수소 운송·저장, 기술고도화는 국내 연구 기관들의 협력으로 추진하며, 남북협력방안 자문은 북한자원연구소가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부산 지역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북한과 연계된 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가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난관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최근 30년이 지난 해묵은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을 받아 출범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이다. 한국과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이 참가하는데,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이 TRADP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IT)로 격상해 두만강 연동 개발계획의 범위를 확장하여 개발하자고 주장했던 사업이다. GIT는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삼았지만, 2009년 북한의 탈퇴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중단됐던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다시 꺼집어 내어 북한의 개방과 남·북·중·러 경제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해 본다.

5) 인적교류 자산 DB화 등 활용 극대화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다섯째, 인적교류 활성화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극동러시아와 협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러협력센터’, ‘유라시아협력센터’, ‘북방경제도시협의회’를 통한 많은 성과물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다만 수십 년을 투자해서 쌓아온 많은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주관 기관들의 전문성은 항상 부족해 보였고, 모든 행사는 늘 이벤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논의된 귀중한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는 DB화하여 관리의 체계화, 공유, 공개 등을 통한 활용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기 바란다.

기관장과 지방의원들의 자매도시 연례적인 순방, 외유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곤 한다. 그것 자체를 닷하고 싶진 않다. 다만 매년 같은 의제, 단골메뉴, 기념촬영을 위한 MOU 체결보다도 귀국 후 실제 투자와 협력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발생-분석-피드백-개선은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의 열쇠이다.

나가며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외교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도시 간의 핫이슈들을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만남의 장을 열어주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부산의 도시외교가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사할린을 넘어서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알마티로 더 넓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한다.

배수한 프로필

러시아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동서대 민석교양대학 교수로 학생처장을 거쳐 현재 총장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정보원 한-러포럼 정책자문 교수, 부산일보 독자위원, 국제신문 매니패스트 교수평가단장, 한국시민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2001),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2006)가 있다.

상생 번영의 파트너십 통해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

김 영 선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들어가며

지난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정상회의가 11.25-27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부산 회의를 통해 지난 30년 간의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및 한-메콩 관계의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지향점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 공동체 실현의 비전 및 목표와 같다는 점에 한국과 아세안의 지도자들이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이 추동력을 얻게 됐다.

1. 두 차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로 아세안협력 중심도시로 부상

부산은 2014년 제2차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2019년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됨으로써 한-아세안 우호협력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정상회의 이외에도 아세안 정상들이 특별연설을 한 'CEO 서밋', 산업기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마트시티 페어, 스타트업 엑스포,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한-아세안 푸드스트리트, 한-아세안 패션위크 등 각종 부대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신남방정책 선도도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교기관을 통한 국가외교가 중심이나, 요즘은 비(非)국가외교, 특히 도시외교의 가능성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가 도시외교를 전담하는 부서(성장전략국 도시외교정책과)를 설치하고 도시외교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전문가그룹인 부산시 '도시외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의 국가의 교와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인 동시에 국가외교가 부재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남방정책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부산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 여타 지방정부의 도시외교와는 차별화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아세안 협력의 풍부한 외교적 자산 최대한 활용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추구하는 한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 부산은 한-아세안 협력을 선도할 중요한 외교적 자산들을 갖추고 있다. 아세안의 주요 도시들과 항공(*7개국 14개 도시에 직항노선 개설) 및 해운 교통편이 연결되어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2019년 약 54만 명의 아세안인이 부산 방문). 많은 부산 출신 기업인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고, 부산에는 아세안 출신 결혼이주자, 근로자, 유학생들이 약 2만 명 규모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부산시는 1994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필두로 베트남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필리핀 세부 주(州), 미얀마 양곤, 태국 방콕 등과 자매·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도시 간 네트워크 외교에 적극적이다. 민간 외교 상시채널로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및 태국의 명예영사가 활동 중이다. 부산외국어대는 다양한 동남아언어 전공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외국어대 아세안 연구원 및 동아대 아세안연구소 등 여러 대학에서 동남아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부산이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 부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4년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2017년 설립된 부산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문화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아세안의 10개 대화상대국 중 아세안의 문화를 소개하는 아세안문화원이 개설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또한 2019년 개최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한-아세안 영화기구 등이 설립될 경우, 부산은 한-아세안협력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자산들을 활용하여 부산이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산의 도시외교가 나아갈 방향,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부산형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를 위한 제언

1) 비전과 방향성, 추진 전략과 체제 구축

첫째, 부산형 신남방정책의 비전, 지향점 및 추진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의 가치, 제도, 협력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목표와 전략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국가들에게 왜 높이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신남방정책은 미·중·일 등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완화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경제 관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한국의 이미지가 자기중심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탈피하여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대(對) 아세안 협력도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궤를 같이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과의 교류·협력도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방역·보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부산으로서는 자매·우호 도시 및 협력중점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방역·보건 인프라 지원, 의료물품 제공, 의료 역량 개발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자원을 가용할 필요가 있다. 부산이 도시외교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http://www.busan.com>

2) 추진 체계-체제 강화해 일관성 유지해야

둘째, 부산형 신남방정책의 추진 체계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협력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국제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만큼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중요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망라된 'Team Busan'을 구성하여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외교위원회를 확대하거나, 신남방 분과위 또는 도시외교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세안/동남아 관련 학계 전문가, 언론계, 아세안 국가 명예영사, 아세안 출신 이주자·학생대표 등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특위대책반 및 외교부 등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외교부 파견 국제관계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도시외교 전문가,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연구원에 부산-아세안 협력 담당관(지역전문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신남방 도시와의 다각적인 국제네트워크 강화

셋째, 신남방 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간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자매·우호도시 이외에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마닐라, 비엔티엔 등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태도시정상회의(APCS), 아태도시관광기구(TPO) 등 도시 간 국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활용하여,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의 시범도시들과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 주도로 2018년 구성된 ASCN은 아세안 10개국의 26개 시범 스마트도시의 니즈(needs)와 추진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어 협력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상호 간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윈-윈 협력관계 구축

넷째,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협력사업에 그치지 말고 협력의 메카니즘과 플랫폼을 건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지난해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한-아세안 영화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대 도시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방역·의료산업 및 ICT기반 언택트(Untact) 경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조선, 항만, 금융, 관광, 스마트시티, 물류 및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만큼 상대 도시별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도 아세안 개도국 수원(受援)도시의 니즈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부산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수산, 항만, 교통, 영화영상, 스마트시티, ICT,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인적개발사업 및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스포츠대회 등 메가 이벤트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상호 이해와 신뢰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기반

다섯째,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가 불가결하다.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대학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많은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아세안 자매·우호도시와의 청년 교류, 특히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젊은 시절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학습과 체험을 통해 현지 문화와 관습을 올바르게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부산-아세안 포럼'을 정례화하여 부산-아세안 협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협의하고 제안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학, 연구소 및 관련단체의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아세안 문화주간'을 정례화하여 한-아세안의 각종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부산을 아세안에 올바르게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예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영어방송(BcFM) 또는 영어 유튜브를 통해 아세안인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산하 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아세안·동남아 전문가 및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아세안문화 전문가가 부재하다. 단순히 행사나 이벤트를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세안과의 문화 교류·협력을 협의하고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기능도 가져야만 진정한 한-아세안 문화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 거주 아세안 출신 결혼이주자, 근로자 및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문화원 인접 부지에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가며

코로나19 사태는 엄청난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의 한계점으로 인해 탈(脫)세계화, 지역화 또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모색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체인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자국 중심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교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확실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협력 분야나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 비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부산은 아세안 국가에 이미 많이 진출해 있고 아세안과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 아세안 협력의 풍부한 자산과 차별성을 보유한 부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 부상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을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부산의 도시외교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선 프로필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대변인, 주인도네시아 대사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아세안 관계 및 동남아시아 정치를 연구 중이다.

현재 한국경제신문에 '김영선의 ASEAN 토크'란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02

지역연구 특집 2

부산 영화&영화제를 말한다

25회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어제, 오늘, 내일
문화와 산업이란 두 마리 토끼

김은영
김용성

25회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어제, 오늘, 내일

김은영

부산일보 논설위원



1996년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는 20여 년 동안 급성장했다.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BIFF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힘든 영화제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유네스코 펠리니 메달 수상(2007)¹⁾과 영화창의도시(2014)²⁾에 선정될 만큼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2014년 제19회 BIFF 때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2014, 한국, 77분, 이상호·안해룡 감독) 초청 상영으로 부산시와 갈등³⁾을 빚으면서 BIFF는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다. 이후 4년 만인 2018년(23회) 정상화됐지만 영화제 성장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BIFF가 창설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다. 영화제와 감염병, 무관한 것 같지만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올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영화 관람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멈췄으며, 영화제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10월 7~16일로 예정된 25회 BIFF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의 슬로건 '새로운 시작, Always BIFF'처럼, 지난 25년의 BIFF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25년을 준비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내외 영화제 상황을 살펴보고, BIFF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짚어 본다.

1. 코로나바이러스에 국내외 영화제 '취향'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코로나19 첫 영화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4월 30일 개막 예정이던 JIFF는 한 달 정도 미뤄진 5월 28일~6월 6일 개최한다. 그런데 경쟁 부문 심사위원과 초청작 감독 등 최소의 인원만

1) 유네스코 펠리니 메달은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상으로, 1993년 서거한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이름을 딴 것이다.

2) <http://www.unescobusan.org/>

3) 부산국제영화제(BIFF)비전2040특별위원회가 2019년 봄에 펴낸 <부산국제영화제 2014~2018 외압 사태 백서> 참조.



출처: 부산국제영화제

참여하는 '무관객' 영화제로 치러진다. 개·폐막식은 열리지 않고, 해외 게스트는 아예 없다. 이준동 JIFF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최적화된 영화제 플랫폼을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포장외박에 들리지 않는다.

전주 영화제의 교육지책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영화제들이 맞닥트린 위기 상황을 극명히 보여 준다. 2020평창국제평화영화제(6월 18~23일)는 예정대로 개최하되 해외 게스트 초청을 비롯한 인적 교류는 전면 취소하고, '드라이브인 상영회' 같은 야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7월 9~16일),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13~18일), 2020서울국제여성영화제(9월 10~16일),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9월 17~24일) 등 다른 영화제들도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한다.

해외 영화제 사정도 녹록지 않다. 올해 처음으로 예정된 제73회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8월 5~15일)는 취소를 결정했다. 대신, '로카르노 2020'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봉이 막히고 경제적 손실을 본 감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67회 호주 시드니 영화제(6월 3~14일), 제69회 멜버른 영화제(8월 6~23일)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안시에서 열리는 제60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6월 15~20일)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국제영화제(6월 25일~7월 4일) 역시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

영화제를 개최하더라도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크다. 매년 5월 열리는 프랑스 칸 영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두 차례 연기했다.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칸 영화제를 포함한 영화계 주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칸 필름 마켓은 6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모스크바, 베이징, 홍콩 영화제 등은 칸처럼 일단 연기를 선언한 상태다.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9월 2~12일)가 거의 유일하게 일정대로 개최할 예정인데, 영화계 연대 차원에서 칸 영화제와 협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 25회 BIFF는 순항할 수 있을까

BIFF라고 고민이 없지 않다. 현재로선 정상 개최를 최우선에 두고, 플랜B, 플랜C, 플랜D를 동시에 준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예산이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BIFF 예산의 약 55%를 차지

하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⁴⁾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스폰서십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BIFF 사무국의 핵심 인력인 프로그래머와 중추 스태프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래밍, 각종 부대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일정 연기는 더더욱 어렵다. 매년 5~10월 국내의 주요 영화제들은 1~2주간격으로 이어진다. 자칫 일정이 겹칠 경우 여러 영화제가 동시 개최될 수 있고, 그만큼 작은 규모의 영화제는 관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정 중복을 피해 온 그동안의 관례를 따른다면 겹치는 일은 아주 드물겠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하고도 취소하지 않은 칸과 부산 영화제의 일정 중복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상영작 수급이 제일 큰일이다. 앞으로 10월까지 다섯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해외 유명 감독과 스타 배우 초청은 말할 것도 없고, 상영작 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프리미어(Premier·최초 상영)⁵⁾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칸이나 베니스에서 먼저 선보이고 이후 다른 영화제에서 소개되던 기존 형식의 파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BIFF는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서 주요 상영작들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BIFF 프로그래머가 전하는 말로는 “칸 영화제 첫 상영을 고려하는 영화들이 다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보통 8월 중순쯤이면 부산 영화제 상영작 95%가 확정되는데, 올해는 (변동이 커) 눈여겨보는 영화들을 쌓아두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3. BIFF 24년, 그동안 어떤 변화했나

BIFF가 성공한 영화제라는 데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 외형 확장이 영화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 1996년 첫 개최 당시 22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 규모는 2019년(24회) 6배 가까운 128억 원으로 커졌다. 출품된 영화 편수는 첫 회(31개국 169편)와 24회(85개국

4) 조영미(2020.04.10.) “부산 6대 영화제 예산 삭감 철회를”, 《부산일보》.

5) 자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 제일 먼저 상영하는 것을 ‘월드 프리미어’, 자국을 뺀 다른 나라에서 제일 먼저 상영하는 것을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구분할 수 있다.

299편)를 단순 비교해도 거의 배 수준으로 늘었다. 14회(2009년)는 70개국 335편(총 803회 상영)을 상영해, 역대 최다 편수를 기록했다. 참가한 게스트나 언론인 역시 몰라보게 많아졌다. 첫 회 초청인사 27개국 224명은 17회(2012년) 1만 1,519명(프레스 2357명 포함)을 기록했고, 24회는 프레스를 제외하고 8,882명을 헤아릴 정도로 급증했다.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흔히 영화제 규모는 상영 작품 수와 프리미어 작품 수로 가늠하는데, 프리미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제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2019년 BIFF의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평균 135편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영화제를 통틀어도 이 정도 규모의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를 유치하는 영화제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수

| 연도 | 월드 프리미어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총합 |
|------|---------|------------|-------|
| 2009 | 98 | 46 | 144 |
| 2010 | 101 | 52 | 153 |
| 2011 | 86 | 45 | 131 |
| 2012 | 93 | 39 | 132 |
| 2013 | 94 | 40 | 134 |
| 2014 | 96 | 36 | 132 |
| 2015 | 94 | 31 | 125 |
| 2016 | 94 | 30 | 124 |
| 2017 | 99 | 31 | 130 |
| 2018 | 115 | 25 | 140 |
| 2019 | 118 | 27 | 145 |
| 평균 | 98.9 | 36.6 | 135.5 |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자료 재작성

BIFF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영화산업에도 기여했다.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 독립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영상 콘텐츠를 사고파는 아시아 필름 마켓 형성, 예비 영화인을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2011년 10월 6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려 화려한 조명쇼가 연출되고 있다. 수영만 시대를 마감하고 16년 만에 전용관인 영화의전당을 마련했다. 출처: 부산일보

전찬일(2010)⁶⁾은 “부산 영화제가 한국 영화라는 미지의 내셔널 시네마를 세계 여러 나라에 활짝 열어젖힌 기념비적 ‘창’이요 ‘장’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익준의 <똥파리>의 경우, 단연코 부산 영화제가 아니라면, 생짜 신인 감독이 빛은 저예산 독립영화가 세계 20여 개 해외 영화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십수 개의 상을 거머쥐는, 기념비적 개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고 주장했다. 10년 전 <똥파리>의 화제성은 2018년(23회) BIFF 뉴커런츠 부문에 초청돼 넷팩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김보라 감독의 <벌새>가 넘어섰다. 2019년 12월 말까지 이 작품은 전 세계 영화제를 순방하며 무려 4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4. BIFF를 지탱한 ‘아시아·관객’의 힘

1996년 출범 때부터 내세운 ‘아시아 영화 허브’는 BIFF가 추구하는 변함없는 정체성이다. 아시아 영화를 전면에 내세운 BIFF만의 정체성이 다른 영화제들과 차별화하며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정체성으로 “부산만의 지역성, 곧 로컬리티(locality)의 추구”를 꼽는데, 이른바 세계화와 지역성을 아우르는 ‘세방화(Glocalization)’ 전략이다.⁷⁾

6) 전찬일(2010). “PIFF(BIFF)를 위한 변명-아시아의 영화제들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 <오늘의 문예비평> 2010 봄 통권 76호

7) 김시무(2015). “지역문화로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와 한계”.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2015년 11·12월호 (통권 54호).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장면
출처: 부산일보

BIFF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프로그램머였던 고 김지석은 BIFF 20년 비하인드 스토리를 엮은 『영화의 바다 속으로』(본복스, 2015) 서문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다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초창기 영화제가 자리 잡은 이후에도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아시아영화펀드(ACF), 아시아영화마켓(AFM),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BIFF 컨퍼런스 와 포럼(BC&F) 등을 출범시켰다. APM이나 ACF, AFA, BC&F 모두 아시아 최초의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인마켓’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영화제의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고, 이들 행사는 부산 영화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JIFF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무관객 영화제를 열고, 칸 영화제 필름 마켓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지만 관객이야말로 영화제를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이다. 김지석(2007)⁸⁾은 부산 영화제 발전 과정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을 ‘관객 중심의 영화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관객이야말로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강력한 힘이며, 영화제 출범 당시 영화제를 치를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부산의 부족한 인프라를 메워준 것이 바로 관객의 열정이었으며, 부산 영화제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영화제’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2017년 칸 영화제 출장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나온 영화제 출장기를 엮은 책 『김쌤은 출장 중』(BIFF, 2019)에서도 “칸 영화제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임은 틀림없지만, 관객과 함께하는 영화제는 아닌 셈”(2013)이라며 BIFF를 띄운다. 영화제가 게스트의 스케줄에 너무 얽매이다가 관객과의 소통을 소원하게 만든 도쿄영화제(2009) 사례도 언급하며 그는 영화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되물었다.

한데, BIFF 24년 발자취에 있어서 관객 숫자는 그리 폭발적이지 않다. 1996년(1회) 18만 4,071명에서 출발해 2015년(20회) 22만 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21회) 16만 5,000명으로 6만 명이 감소했고, 이후 다시 19만 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가 2019년(24회) 18만 9,000명으로 하락했다. 강소원(2009)⁹⁾이 언급했지만 “첫해부터 거의 최대한의 관객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간 상영 편

8) 김지석(2007). “부산국제영화제와 콘텐츠 : PIFF가 남긴 문제와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07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5권 제1호.

9) 강소원(2009).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와 그 성격과 의미에 관한 연구 1: [개/폐막작], [아시아 영화의 창], [뉴커런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아시아영화연구》 2권2호.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멀티플렉스 극장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객석 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행정과 문화’ 충돌 넘어서는 과제

BIFF가 성공한 또 다른 요인 중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간섭 없는 지원의 원칙’을 암묵적으로 지켜온 것(황은정·이용숙, 2017)¹⁰⁾도 빠트릴 수 없다. 국가가 부산 영화제의 문화 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영화제리는 문화 활동을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본격화된 BIFF에 대한 국가개입은 적극적 중립성에서 벗어나 문화 공공성 제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BIFF2014~2018 외압 사태 백서

‘BIFF 외압 사태’에서 보듯 공공성을 훼손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정당한 근거 없이 큰 규모로 삭감하고, 부산시는 행정조직을 부산 영화제의 문화 활동을 육성·진흥하기보다 부산시의 의견을 조직위 측에 관철하면서 영화제의 예산, 인사 및 조직 운영 등에 걸친 다방면의 직접 개입을 하며 공공성의 실질적 실현을 저해했다.¹¹⁾

역설적이지만 BIFF 외압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나온 김동신(2012)¹²⁾의 연구는 부산 영화제의 성공을 BIFF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적, 재정적, 행정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당시 BIFF 조직위의 촉매자 역할이 부산시, 부산시민,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 주체를 연결하고 통합해 결과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게끔 했다고 본 것이다.

윤소민과 정지은(2017)¹³⁾은 “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조직위원회, 시민 단체 등의 협업 관계

10) 황은정, 이용숙(2017).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적 명성의 동인-다규모적 중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27권 2호(통권 60호):

11) 송유정, 이용숙(2018). “국제영화제와 국가의 역할 : 적극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24권 제1호.

12) 김동신(2012).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위원회형 비영리조직의 역할탐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3호.

13) 윤소민, 정지은(2017).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영화제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제35권 제3호.

가 중요하다”면서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영화제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지는 것이다. 이는 비단 BIFF에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술한 국내 영화제들이 지자체 지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급하다. 영화제의 프로그램 구성은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면서,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6. 25회 영화제와 그 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이 BIFF 운영 등 문화정책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지 않도록 특히 올해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2018년 민선 7기 영화·영상 정책(5대 전략과 18대 추진 과제) 발표를 통해 BIFF의 항구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BIFF 위상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다변화된 영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고,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BIFF와 영화의전당 간 통합법인 수립 전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BIFF 상시 조직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해묵은 숙제이지만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스물다섯 BIFF 덩치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커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영화산업 없는 영화도시’ 책임을 오롯이 BIFF에 떠넘길 일은 아니다. 물론 영화제 전체 예산 중 부산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토론토국제 영화제가 전용관 운영 비용을 포함해서 자체 수입 비중이 47.9%, 스폰서십이 30.1%, 정부지원금은 9.5%에 지나지 않고, 기부금이 12.5%를 차지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박기남, 배근호, 2019)¹⁴⁾는 사실은 직시할 만하다.

BIFF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대표 영화아카데미 육성이나 교육 플랫폼 운영, BIFF 상영작과 GV 같은 프로그램 등 25년 자료 아카이빙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정 구역 안에서 BIFF 역대 상영작을 자유롭게 접근해

14) 박기남, 배근호(2019). “부산국제영화제-영화의전당 통합방안연구 최종보고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볼 수 있는 ‘로컬형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구축 계획은 부산 영화제 로선 또 다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위기도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 안전과 건강이 직결된 만큼 무리해선 안 되겠지만, ‘위기가 기회를 낳는다’고 올라가 BIFF를 정상 개최할 수 있다면 새로운 25년을 향하는 BIFF에겐 엄청난 자극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유럽을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2월 베를린 영화제 개최 이후 이렇다 할 유수의 영화제가 열리지 못한 데다 칸이나 베니스마저 축소 내지는 취소될 가능성이 커서 ‘K방역’에 이은 ‘K국제영화제’가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외 초청 게스트의 경우,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을 확인하는 건강증명서를 지참하면 우리 외교부와 방역 당국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자가격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특별입국 허용 같은 특단의 방역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축제다. 올해만큼은 BIFF 구성원이나 부산시민, 국내외 영화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영화의 도시, 부산’을 견인해 온 BIFF가 지난 25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25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올해 영화제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BIFF 외압 사태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BIFF 인맥들 간의 통 큰 화해와 연대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김은영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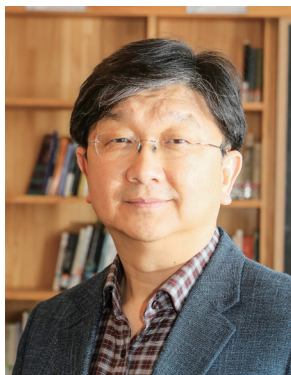
1989년 부산일보 입사. 교육팀장·국제부장·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및 선임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 후쿠오카 니시니혼(西日本)신문사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新문화지리지-2009 부산의 재발견』(2010), 『부산, 과거의 창으로 미래를 말한다』(2013)를 공저로 펴냈다. 부산국제영화제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화와 산업이란 두 마리 토끼

부산국제영화제 25년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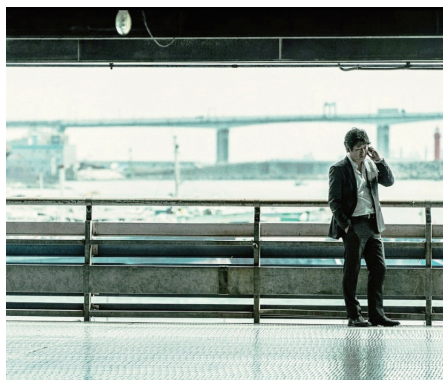
김 용 성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前 부산MBC 상무이사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나 역시 영화제의 미래를 두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대체로 잘 될 것으로 낙관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이자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영화제로 성장하였다고 평가된다. 풍파도 겪었다.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전국 영화팬들의 성원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부산에서 태생해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이기에 부산시민들의 격려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그런 영화팬과 시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시와 조직위원회에 맡기고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주제를 두고 고민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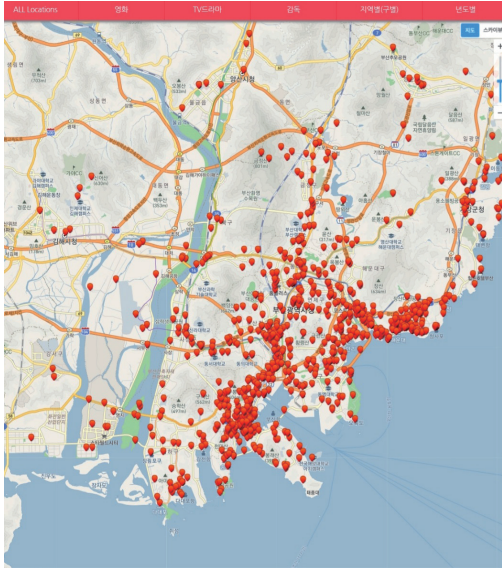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로 그동안 부산이 얻은 성과는 얼마 만큼인가?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를 주창하는 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부산이 진정한 영화·영상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부산의 성과에 대해 면밀히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안대교가 등장하는 <암수살인> 장면



김해공항 등이 등장한 <우상>의 한 장면



부산영상위원회의 시네맵. 빨간 점이 영화촬영이 진행된 장소

부산, 영화제 개최 이후 세계적인 촬영지로 부상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25년의 성과를 부산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다. 많은 세계 영화인들이 한국영화와 아시아 영화를 보기 위해 매년 10월 초 부산으로 온다. 매년 세계 우수영화제의 관계자들은 물론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한다.

둘째, 부산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가 되었다. 최근 부임한 김인수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2020년 1분기(1~3월) 동안 장편 영화 7편 등 11편의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¹⁾

부산영상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 12월 창립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지원작은 장편영화 579편, 드라마 및 영상물 817편 등 모두 1,396편이다. 이를 올해분과 더하면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지원작은 모두 1,407편이 된다. 연평균 70편 이상의 영화·영상물이 부산 시내 어디에선가 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²⁾ 물론 아직까지 국제물량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물량이 확장될 가능성은 크다. 부산영상위원회의 시네맵은 부산 시내에서 촬영이 진행된 곳을 보여주는데 거의 전역에서 촬영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용 영화관이 건립되었다. '영화의 전당'은 국제 공모를 거쳐 채택된 독특한 설계를 바탕으로 해운대 센텀시티에 들어섰다. 영화의 전당(일명 두레라움)은 다소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부산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평소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일이다.

넷째, 서울에 있던 영화부문 공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부산이 영화행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 영화행정의 총

1) 《영화부산》 2020. 1+2+3월호(통권 제70호)

2)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fc.or.kr>



2018년 광안리로 이전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부산 영화진흥위원회(KOFIC)가 센텀시티로 오고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도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두 기관은 새 청사를 건립 중이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한국영화의 산실인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부산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많은 유명 영화감독을 배출한 한국 최고의 영화전담교육기관으로 1984년 설립된 뒤 최근까지 서울 서교동에서 우수 영화인력을 양성하고 있었다. 2018년 부산 이전이 시작되자 당시 서울의 영화인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질적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³⁾ 그러나 KAFA의 부산 이전은 완료되었고 정규 과정이 온전히 운영 중이다.

다섯째, 부산이 아시아권 영화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2004년 아시아 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가 결성되고 부산영상위원회가 의장기관이 되었다. 2016년에는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가 문을 열고 차세대 아시아 영화제작인력과 영화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였다. 한국영화 아시아 중심이 되는 데 부산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영화제 개최 도시가 되었고, 세계 유수의 촬영지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전용 영화관을 갖추었고, 한국 영화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아시아권 영화네트워크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이상만으로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평가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부산에 대단히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영화의 전당과 같은 영구 시설물과 영화 관련 기관의 이전,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아시아영화학교 등 교육기관의 이전은 미래를 위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부산, 영화·영상도시로 가는 길 여전히 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첫째, 부산의 영화제작 기반시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기장에 계획된 오픈 세트장은 아직 건립되지 않았고, 3D 전용 스튜디오 등 고부가가치시

3) 오마이스타, ‘준비 없는부산 이전, 한국영화아카데미 추락 우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79217

설들은 부족하다. 그런 사이 수도권 관련 시설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인 CJ ENM은 경기도 파주에 21만3천㎡ 규모의 가칭 '파주 CJ 콘텐츠월드'를 건립 중이다. 10여 개의 대단위 스튜디오와 야외 오픈세트, 특수촬영시설, 복합문화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2021년 개장할 예정이다.⁴⁾ 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영만의 부산영화스튜디오를 찾던 영화제작사 중 상당수가 발걸음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특히 제작사와 배급사는 매우 빈약하다. 세계적인 영화제와는 달리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부산을 기반으로 한 곳은 거의 없다. 여전히 모든 영화 관련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영화제작 기반시설의 부족도 한 이유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영화 자본은 부산에 형성되지 않고 있다.

셋째, 영화·영상 인력의 부산 취업이 매우 힘들다. 이 역시 영화제작 기반 시설과 영화 자본의 부재와 관련된 일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대학에서는 연극·영화와 뮤지컬, 방송, 촬영,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 영상디자인 등 다양한 영화·영상 관련 인력이 대략 한 해 1000명 이상 배출되지만 부산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떤 부산 촬영의 경우 수도권으로 간 부·울·경 인력을 다시 불러내야 하는 이른바 인력의 '역유출'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넷째, 부산의 영화·영상 관련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한 로케이션 지원과 영상스튜디오 운영은 활발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영상산업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마인드와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 가지 예로 부산시의 영화예산지원은 예술영화만 가능하고 상업영화는 해당사항이 없다. 부산의 영화사업자는 상업영화를 제작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영화·영상도시화는 아직 요원하다. 사실 부산의 '영화·영상도시화'라는 개념조차 모호하다. 영화제 개최나 영화촬영이 활발한 도시가 영화·영상도시라면 부산은 이미 그런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부산이 최고의 '영화·영상도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산은 영화·영상 도시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또는 '영화 촬영

4) 연합뉴스 2019.12.16. 파주 CJ ENM 콘텐츠월드, 2년 앞당겨 내년 1단계 완공.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1456000607input=1195m>

이 많은 도시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든 형편이다. 물론 이마저도 없는 도시들은 부산을 매우 부러워한다. 전주와 부천, 제천에 이어 강릉은 2019년 11월 국제영화제를 개최했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 강릉으로 가서 국제영화제 창립을 도왔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 산악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가까운 대구에서도 부산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스포츠를 특화한 국제영화제 개최를 검토 중이다.⁵⁾ 이미 2019년 11월 대구스포츠영화제를 개최하고 9편의 스포츠영화를 상영하였다. 이런 후발 도시들에 있어서 국제영화제는 매력적인 행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년 넘게 국제영화제를 운영해 온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입장은 비교적 여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제영화제와는 질적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명도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잘 해결하리라 생각하지만 정부의 국비지원 감소와 국내 영화팬의 관심 분산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영화·영상문화 발전했으나 아직 ‘부산영화’ 정의조차 불분명

부산은 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영화·영상도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실은 크게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후발 도시들이 부산의 영화·영상도시화를 위협하고 있는 형세이다. 영화·영상도시는 영화·영상산업이 발달하고 영화·영상문화가 활발한 도시로 규정할 수 있다. 영화·영상산업은 영화관련 시설과 자본, 비즈니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영화·영상문화는 영화제의 개최와 영화촬영의 활성화, 영화연구의 활성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해진다. 영화·영상문화 면에서 부산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영화촬영이 활발해지면서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였다. 향후 과제는 기존의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즉 부산국제영화제를 계속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의 영화 촬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해외 촬영을 적극 유치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⁶⁾ 영화의 전당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산으로 이전한 영화 관련 기관의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여 부산 이전의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아시아 영화 교육에도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화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화연구는 2000년

5) 매일신문 2019.11.26. [사각과 전망]대구에 스포츠영화제가 필요한 이유.

<https://news.imaeil.com/InnerColumn/2019112516025473222>

6) 《영화부산》 2018년 통권65호. '특집기획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활성화에 관한 소고' 참조.

대 이후 부산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영화연구는 영화문화의 발전뿐 아니라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은 빈약하다. 예를 들어, '부산영화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촬영하였다고 부산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 등 부산에서 촬영한 많은 영화들에서 부산은 특정한 이미지로 비취지면서 일부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부산이 가진 공간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은 일찍이 있었다.⁷⁾ 부산의 독립영화들 역시 부산의 역사성과 주체성에 대해 기존 상업영화들과 비슷한 상투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⁸⁾ 부산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 토대에서 산업이 생성되고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 부산영화는 경계성과 혼종성으로 특징되는 부산의 스타일을 영화적으로 잘 승화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 '스타일'이 잘 구현될 경우 부산영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홍콩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된다. 홍콩은 중국과 서양의 경계지역이자 혼종성으로 부산과 비슷한 자산을 가졌다. 영화 면에서 홍콩은 한때 홍콩노와르로 유명하였고, 홍콩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군림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 반환과 함께 특유의 활발함을 잃고 영화산업은 위축되었으며 영화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홍콩성이 흔들린 결과이다. 부산이 촬영지뿐 아니라 영화의 주제와 담론에까지 그 특성이 녹아 있다면 진정한 부산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영상산업 발전이 영화·영상도시 되는 필수조건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은 영화·영상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쇠락한 부산의 형편상 영화·영상산업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영화·영상산업은 보통 상업영화를 일컫지만 예술영화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어느 한 편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은 앞서 지적한 세 가지 부족한 점을 대폭 보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영화제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영화제작사와 배급사의 부산 유치에도 특별히 노력하고

7) 김필남, 「부산영화로 보는 부산 공간의 의미 : 영화에 비친 부산 모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로컬리티 인문학 Vol. - No.2

8) 엄준석, 장슬기, 「지역의 정체성과 영화의 재현방식」,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2013.

영화·영상제작 인력의 취업을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대단히 힘든 과제들이며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 영화제작 기반시설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적잖이 걸려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 영화산업의 유치는 더욱 어렵다. 영화제작사의 부산 유치는 민간자본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영화 관련 공공기관처럼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화 비즈니스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영화·영상제작 인력의 취업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제작 시설과 영화제작사의 위치와도 깊은 관계가 존재한다. 엄밀히 말해 부산은 현재 영화·영상인력의 일부를 교육시켜 배출하는 도시, 영화제의 개최를 지원하는 도시, 영화촬영을 지원하는 도시이지 영화비즈니스의 도시는 아니다. 영화제작시설이 대폭 확충되거나, 중간규모 이상의 영화제작사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많은 영화·영상인력들이 부산에서 취업하는 상황이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산의 영화·영상도시로의 발전은 나무에서 물고기 찾기이며, ‘물 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영화제 도시, 영화촬영도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웃도시들은 그걸 이루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그 틀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 시민들의 눈높이도 처음 영화제를 열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 남포동 비프거리에서 배우들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까치발을 던던 부산의 젊은이들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열흘간의 영화제 동안 스타를 보며 열광하고 개봉관에서 만나는 부산의 모습에 환호하던 사람들은 ‘영화·영상도시 부산’이라는 구호에 이미 식상해 버렸다. 실질적인 영화·영상산업이 부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다. 영화·영상문화의 발전과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그 두 테마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이제는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키려던 열정을 다시 기억하고 의지를 모아 영화·영상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새로 정립해야 할 때이다.

김용성 프로필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부산MBC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사회부장, 보도국장을 거쳐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제16회 봉생문화상(언론부문)을 수상했으며,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서로는 『제국의 습격』, 『탐욕과 생존』이 있다.

03

지역연구 특집 3

문화로 접근하는 부산의 도시재생, 영도

‘오래된 젊은 섬’ 영도의 재발견

장지태

“도시재생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 이루는 ‘보전적 개발’ 중요”

이승욱

“영도는 일과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지”

김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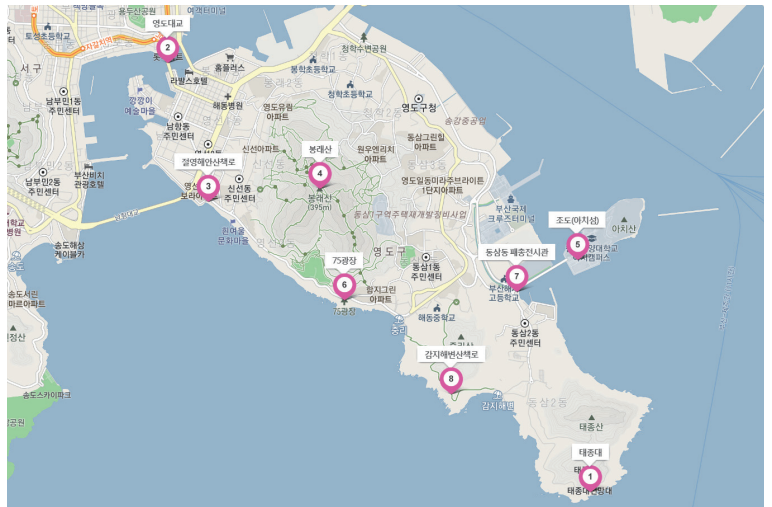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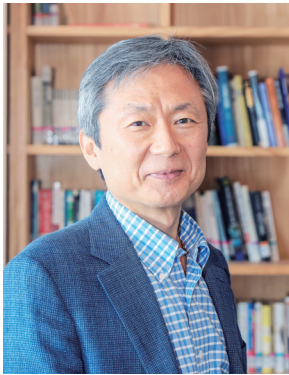
“살아 있는 부산을 알리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나리

‘오래된 젊은 섬’ 영도의 재발견

장 지 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영도 8경’ 출처: 영도구청

영도의 재발견!

8,000년 전부터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영도, 나라에서 말을 키우던 국마장(國馬場)이 있었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태동지이자 국내 유일의 도개교(跳開橋: 큰 배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판이 위로 열리는 구조로 만든 다리)인 영도대교로 유명한 섬. 나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전쟁의 애환을 절절하게 노래한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의 영도다리로 기억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아이돌 스타 강다니엘의 고향으로 소문난 영도. 그런 영도가 재발견됐다!

‘영도의 재발견’은 부산연구원(BDI)이 선정한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에 포함됐다. 영도의 재발견이라니? 영도가 없어졌다 다시 생겨난 것도 아닌데? 또 그게 대박(?) 히트상품이라니? 이런 의문은 선정 과정과 이유를 보면 수궁이 간다.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만덕~센텀 대심도 착공 △2030 부산 월드 엑스포(Busan World EXPO) 국가사업 지정 △영도의 재발견 △부산 원도심 대개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 △천마터널 개통 △윤창호법 시행 △구포개시장 폐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개관 등이다.

부산연구원은 전문가, 직원, 지역 언론사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뽑은 20개 후보군에 대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히트상품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의 생활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소비·트렌드 조사가 이뤄졌다. 부산연구원은 1년 간 부산의 키워드를 알아보려는 취지로 매년 연말 10대 히트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된 '영도의 재발견'

'영도의 재발견'이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된 이유를 살펴보자.¹⁾

첫째, 수려한 조망과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2018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갯강이에 술마음을 비롯해 부산의 대표적 프리마켓 행사로 부각된 대동전수방의 M마켓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이 속속 등장하면서 영도의 다양한 매력이 재발견됐다. 실제 영도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우수상,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최우수 지자체단체장상과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둘째,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카페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영도에는 폐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수영장 내부를 그대로 살리거나, 목욕탕을 개조한 카페 등 원도심 특유의 옛스런 분위기와 영도 앞 바다 풍경을 더한 이색 카페들이 속속 개장됐다. 영도구는 커피축제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셋째, 바다 조망과 가성비를 내세워 호캉스(호텔+바캉스)에 적합한 숙박 시설의 등장이다. 영도대교와 부산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라발스호텔 오픈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들로 영도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흰여울문화마을에서는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들의 작품들이 낙서로 훼손되자 영도구와 주민협의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2016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된 흰여울길로 유명하다.

부산연구원은 '영도의 재발견'이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도시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도 출신 아이돌 스타 강다니엘 (KANG DANIEL).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측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청각장애 사회복지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강다니엘 팬들도 코로나19 사태 관련, 부산시 및 영도구에 마스크 구입지원금 약 5백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출처: 강다니엘 홈페이지

1)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제368호(2019.12.23),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이창현, 강혜진)



한국의 빗살무늬토기



일본의 쥬몽토기

영도의 별칭도 재미있다. ‘영 아일랜드(Young Island)’- ‘영과 ‘도’의 영어 표기인 ‘Young’과 ‘Island’가 합쳐진 일종의 언어유희다. 영도는 아득한 옛날 신석기 유적이 남아 있는 부산의 원뿌리인데 ‘Young Island라니? 아이돌 스타 강다니엘의 고향으로 알려져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역올문화마을과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 강강이에술마을, 풍광 좋은 이색 카페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 ‘젊은 섬’이란 별칭이 그럴듯해 보인다.

‘오래된 젊은 섬’ 영도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여행에 나서 보자. 빛보다 빠른 상상력이 8천 년 전 영도 바닷가로 우리를 휘 데려간다.

#1. 신석기 풍경 - 영도에서 8천 년 전 일본과 물물교환

영도 동삼동, 영선동 바닷가 지역에 다수의 신석기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한 떼의 남자들은 통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다랑이, 상어, 대구, 송어 같은 물고기를 잡았다. 강치, 바다표범, 작은 고래 등은 바닷가에서 작살이나 창을 이용해 직접 포획하기도 했다. 봉래산으로 사냥을 간 남자들은 사슴, 노루, 멧돼지를 잡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알아듣기 힘든 환호성도 질렸으리라. 아낙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물질을 하여 소라, 굴, 홍합, 전복, 피조개, 고둥, 가리비, 성게를 채취했다. 잡은 어패류와 고기들은 주로 토기에 담아 삶거나, 돌을 둥글게 깔아 만든 화덕시설에 익혀 먹었다. 손재주가 좋은 장인들은 집 주위에서 바닥이 다소 뽕족한 빗살무늬토기를 빚고 조개로 팔찌,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 기장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원시농경사회도 열렸다.

어느 날 낫선 신석기인들이 남쪽에서 배를 타고 왔다. 바닥이 평평한 쥬몽(繩文)토기, 흑요석 등을 가져와 손짓 발짓을 하며 빗살무늬토기와 조개팔찌 등과 바꾸자고 했다. 이때부터 대마도, 규슈 지역과 뱃길이 열리고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양쪽이 교환했던 물건들은 동삼동 패총 등 한국과 일본의 여러 조개무지에서 발견됐다.

먼 바다를 나다니던 영도 신석기인들의 개척정신과 모험심의 DNA가 이어져 오늘날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이룬 뿌리가 된 셈이다. 영도가 부산의 원뿌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간 교역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 됐다. 그러는 동안 양쪽의 피도 많이 섞였으리라. 그럼에도 한·일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양국 간 교류의 시발지인 영도 동삼동 조개무지는 묵묵히 한·일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다.

2. 신라시대 - 왕이 김유신 손자에게 '절영도 명마' 하사

타임머신은 몇 천 년을 훌쩍 뛰어넘어 통일신라시대로 내려갔다. 때는 성덕대왕(702~736) 시절. '영도'라는 이름이 유래한 '절영도' 명칭이 이때 나온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의 손자 김윤중이 대아찬(5등관) 벼슬을 하자 왕의 친속들이 자못 질투를 했다. 때마침 8월 보름을 맞아 왕이 경주 월성(月城) 산에 올라 시종관들과 주연을 즐기면서 윤중을 부르게 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간했다. "중실 외척 중에도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필 소원한 신하를 부르니까?" 왕이 대답했다. "지금 과인이 경들과 더불어 평안 무사하게 지내는 것은 윤중 조부의 덕이다. 그걸 잊어버리는 건 의리가 아니다." 왕은 윤중을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조부의 평생 업적을 말하기도 했다. 날이 저물어 윤중이 물러가겠다고 고하자, 왕은 그에게 절영도의 말 한 필을 하사했다. 여러 신하들은 불만스럽게 볼 뿐이었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조에 나오는 이야기다. 역사학자들은 영도(影島)라는 지명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는 이 기록을 근거로 신라시대 절영도(絶影島), 곧 지금의 영도에 왕실목장이 존재했다고 추론하기도 한다.

영도는 조선시대까지 절영도, 또는 목도(牧島)로 불렸다. 모두 말(馬)을 기르던 곳에서 유래했다. 절영도는 이곳에서 기른 말들이 천리마처럼 워낙 빨리 달려 그림자(影)가 끊어져(絶)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뜻이란 설명이 유력하다. 목도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마장이 있어 생겨났다.²⁾

2) 예술도시사업 영도 매거진「다리 너머 영도」Vol.1, '역사 속의 절영마와 목마장'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 p. 23~24.

3. 조선시대 - 250년 전 용두산 호랑이가 영도 말을 잡아먹었다

타임머신은 천 년의 세월을 또 급강하했다. 때는 조선 영조 47년이던 1771년. 부산 초량왜관의 담을 훌쩍 뛰어넘은 호랑이 세 마리가 용두산의 도자기 가마 위쪽에 나타났다. 기겁을 한 왜인들이 한 바탕 난리법석을 떨었고, 결국 호랑이는 포획됐다. 그날은 마침 왜관에 달마다 무역시장이 열리던 개시(開市) 날이어서 조선 관리와 상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다.

용두산 호랑이와 절영도 말이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진다. 대마도의 통역관이었던 오다 이쿠고로가 1976년 펴낸 『초량화집(草梁話集)』이 출처다.³⁾

조선시대 용두산 주변은 숲이 우거졌고 호랑이들이 살았다. 호랑이들은 겨울철 먹이가 귀해지면 바다 건너 절영도에 뛰노는 노루와 말들을 잡아 먹기 위해 초량항(현 남항)을 건넜다. 그런데 호랑이들은 그냥 바다를 헤엄쳐 건너면 조총에 맞아 죽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해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위장을 한 채 건너갔다. 목마장을 관리하는 목자(牧者)들이 해안 경계를 철저히 했지만, 해초로 위장한 호랑이를 놓쳐 말이 잡아먹히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목마장의 감목관(監牧官)이 포수들을 동원해 호랑이를 잡는 게 연례행사가 되었다.

4. 한국전쟁 - 피란민들의 재회 장소 ‘영도다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8월 18일부터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다. ‘피란수도, 부산’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란가다 가족·친지끼리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곤 했다. 피란길에 헤어진 이들을 만나려고 영도다리를 찾으면서 ‘대한민국 1호 만남의 광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영도다리는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11월 23일 개통됐다. 건설 당시 섬과 육지 간 거리가 약 600m였는데 도개교로 건설하기에는 200m가 최적이라는 판단과 건설비 절약을 위해 400m 거리의 바다를 매립해야 했다.

3) 예술도시섬 영도 매거진『다리 너머 영도』Vol.2, ‘숨겨진 이야기와 절영마의 미래’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 p. 13.

섬 쪽은 봉래산을 깎았고 육지 쪽은 용미산을 깎아 바다를 메웠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 3년여 공사 끝에 개통식이 열리자 6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려 도개 장면을 지켜봤다고 한다. 당시 부산 인구가 15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그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때부터 영도다리는 “죽기 전에 꼭 구경하고 싶은 명물”로 전국에 입소문이 났다. 이렇니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향한 피란민들에게 영도다리는 재회를 약속하는 영순위 장소가 됐다.

재회의 기쁨을 누린 가족들도 많았지만 이산가족도 속출했다. “헤어진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도다리 주변을 맴돌며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막막한 마음에 하나 둘 점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영도다리 주위에 ‘점바치 골목’이 형성됐다. 당시 목조가옥 형태의 점집이 80여 곳에 달했고, 돛자리 형태의 점집까지 포함하면 120여 곳이나 되었다.⁴⁾

이후 영도다리는 교통량이 늘고 다리 밑으로 상수도관 연결문제가 불거지면서 1966년 9월 1일 도개 기능을 멈췄다. 영도다리의 유명세도 사그라들었다. 47년이 흐른 2013년 11월 27일, 시민들의 복원 여망과 공사비로 1,100억 원을 쾌척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용단에 힘입어 영도다리는 도개 기능을 가진 영도대교로 재탄생했다.



옛 영도다리(왼쪽) 도개 모습과 복원된 영도대교 도개 장면(오른쪽). 출처: 이데일리

4) 연합뉴스, 2017년 12월 23일 [췌! 우리동네] 영도다리 밑에는 왜 점집이 많았을까.

한국전쟁 초기 부산으로 몰려온 피란민들은 중구와 서구, 동구 등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50년 12월 ‘1·4 후퇴’ 이후 북한지역 피란민들이 가세하면서 영도지역에도 엄청난 피란민들이 들어 왔다. 당시 영도로 들어온 피란민들은 영도대교와 가까운 봉래산 기슭과 대평동, 봉래동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다. 피란민들은 돌, 천막, 판자 등으로 영성한 무허가 판자 집을 덕지덕지 지어 살았다. 영선 2동 흰여울문화마을은 인근 남향초등학교 앞 일대에 마련된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한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당시 부산에는 40여 곳의 수용소에 피란민 7만 여 명이 살았다. 하지만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 경제력이나 친척이 없이 피란한 약 40만 명의 사람들은 용두산 공원이나 천마산, 수정산 자락에 삶의 등지를 틀 수밖에 없었다. 1953년 7월 4일 당국이 조사한 판자집이 2만 8,619호였는데, 대규모 판자촌은 국제시장에 약 1,200호, 영주동 산기슭에 약 1,000호, 영도대교 인근 해안가에 약 700호, 보수동에 약 600호, 송도에 약 300호 등이었다.⁵⁾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1·4)
이후나 홀로 왔다 (1절)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
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
달만 외로이 떴다 (2절)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영도대교 입구에 있는 ‘현인 노래비’. 출처: 영도구청

5)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영도와 봉산마을의 역사와 문화’(2019년 6월), p. 87~88.

당시 피란민, 실항민들의 애절한 사연으로 노래해 국민의 심금을 울린 국민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이 노래를 부른 현인(1919~2002) 선생은 영도 출신의 우리나라 1세대 대중가수로 1950~1960년대 격동의 시대에 서민들의 아픔과 향수를 달래주기도 하고,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신라의 달밤’, ‘고향 만리’, ‘비 내리는 고모령’ 등도 그의 대표곡이다.

이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보고(寶庫) 영도 전국 광역시 자치구인 유일한 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오래된 젊은 섬’ 영도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 항구도시로 성장하도록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 섬. 이런 영도가 2020년부터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Art City Island, Yeongdo)로 또 다른 도약의 꿈을 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 7곳 중 하나로 영도구를 선정했다. 다른 6곳은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이다. 섬의 과정에서 영도구는 기존 선박공업소 등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깁깁이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한 예술거리 조성, ‘대통전수방(영도 기술자들이 청년에게 기술 전수)’ 운영 등 주민 주도로 관광·일자리와 연계한 핵심과제들을 진행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 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⁶⁾

영도 문화도시의 기본방향은 ‘부산 원도심의 문화적 보고(寶庫), 영도의 다양한 해양생태, 산업유산, 생활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 예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예술도시섬, 영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12월 30일 보도자료.

현황 분석과 진단

S 강점 | 영도의 다양한 매력과 잠재력

도시, 항구, 섬, 자연생태, 산업유산, 이주민, 생활문화

부산항을 접한 단일섬으로 이뤄진 자치구, 천혜의 자연생태환경, 조선산업과 항만류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산업유산, 해양관련 국제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해양혁신클러스터, 패총부터 피난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생활문화자산을 갖춘 지역임

W 약점 | 쇠퇴하는 원도심 영도

조선산업의 쇠퇴(Rust Belt), 부산항 이전, 지역경제 쇠락, 인구감소, 원도심 침체

부산항으로 항만시설이 이전하고 조선산업이 침체되었으며, 원도심의 쇠퇴 등으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쇠락의 위기를 겪고 있음

O 기회 | 원도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도시재생 프로젝트, 복합 통합 재개발, 원도심의 재조명, 문화예술적 활력

영도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복합통합 재개발을 포함한 부산 원도심의 역사적, 도시문화적 가치를 주목하면서 영도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이 제공되고 있음.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 시행지이기도 함

T 위험 | 기회 속의 위기, 재생의 역설

재생 프로젝트의 난립, 하드웨어 중심 개발, 개발의 욕망, 가치와 목표의 부재

다양한 재생 프로젝트가 하나로 엮이지 않고, 난립하면서 오히려 재생으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 속에 영도 전체를 조망하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적 패러다임이 절실함

영도는 위에서 든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쇠퇴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쇠락하는 약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영도는 부산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곳곳에 산재한 해양문화와 연계한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그 새로운 기회가 '문화도시-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에서부터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장지태 프로필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출발해 해양문화연구소장, 독자서비스국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신사업본부장을 거쳤다. 2016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재)학교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사)한국해양정책연합 운영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후원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백산의 동지들』(1998·공저), 『서울공화국은 안 된다』(2004),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길다』(2016)가 있다.

‘오래된 젊은 섬’ 기획자들 인터뷰(1) : 이승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도시재생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 이루는
‘보전적 개발’ 중요”



그는 ‘문화게릴라’였다. 2011년 6월 지역문화지 ‘안녕 광안리’를 발간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 그렇게 불렸다.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기획자’이다. 아니,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의 최고 전문가이다. 2014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자고 의기투합해 설립한 문화예술법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plan b’는 익숙한 주류적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발상, 그리고 부산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적 실험을 의미한다고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2106년 5월부터 시작된 부산 영도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도시재생을 주도하고, 지난 연말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한 ‘문화도시’에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Art City Island, Yeongdo)’가 포함되는 데 주역을 맡은 이승욱(51)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근대수리조선 1번지 영도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출처: 영도구, '깡깡이예술마을 성과보고서'(2019.05)

— ‘깡깡이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문화도시 영도’가 선정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우리나라와 부산의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은?

이승욱 대표(이하 이 대표)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정부에서 하던 뉴타운사업 대신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규모를 많이 키웠는데, 부산이 이 사업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입니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난개발이 많이 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낙후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도시재생의 잠재 가능성이 큼니다. 부산은 근대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진 지역이고, 활동가 그룹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아쉬운 점은 도시화, 근대화 방식이 과거나 역사나 전통을 거세하는 획일적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전국이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민이 떠나면서 계층 간 갈등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만 중시하고 보존은 등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 중심의 도시재생, 즉 도시를 뒤엎고 개발하고 도로를 뚫는 방식을 오랜 관성으로 고수해온 것이죠. 서구 도시들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역사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존적 개발, 즉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잡는 도시재생 모델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콘텐츠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물리적 재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간의 재생,

도시기반 같은 하드웨어 측면이죠. 셋째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민이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휴먼웨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들 세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3~5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보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남는 커뮤니티 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도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공미술 작품도 완성해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폐허가 되거나 쓰레기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물리적 재생 못지않게 그 지역의 콘텐츠를 정확히 살려 새롭게 재구성한 다든지,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삼위일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문화게릴라’가 강강이에술마을 조성에 주도적 역할

— 지역문화지 ‘안녕 광안리’란 잡지를 만들면서 ‘문화게릴라’로 주목을 끌었던 이 대표께서는 우리나라 수리조선의 태동지인 영도 대평동을 강강이에술마을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강강이에술마을은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으로 크게 자리매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요?

이 대표 : 강강이에술마을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도시재생입니다. 서병수 시장 시절 제2의 감천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35억 원 공모사업을 한 것이죠.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도시재생이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니까, 콘텐츠나 사람에 기반한 사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도시재생의 지렛대가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는데,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말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부터 시작된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제2의 감천문화마을 공모사업에 문화예술단체가 도시재생을 주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광안리나 해운대 청사포 등 대상지를 찾아다녔는데, 도시설계 전문가이신 강동진 교수님(경성대 도시공학과) 소개로 영도 대평동 강강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 바로 ‘아, 여기서!’ 느낌이 들어 영도구청장님을 만나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구·군 지자체들은 건축가 주축의 하드웨어 중심 계획을 제출한 반면 우리는 문화예술적 접근을 했고, 그게 차별화가 돼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된 후 시비 35억 원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영도 강강이에술마을을 조성 사업’을 시행했

고, 그 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비 등 국비를 17억 원 정도 더 끌어와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영도 전역으로 이런 도시재생을 확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차원에서 국토부의 제1차 문화도시 사업에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로 응모하게 되었고, 지난 연말 전국 7곳을 선정했는데, 영도구가 포함된 것이죠. 다른 6곳은 모두 시(市) 단위인데, 구(區) 단위로는 영도구가 유일합니다.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 vs ‘바다를 건넌 사람들’

— 아, ‘문화도시 영도’가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깡깡이예술마을의 특징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 대표 : 깡깡이예술마을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이 있다면 물리적 재생보다 콘텐츠와 사람들을 준비하는 걸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제2 감천문화마을 사업을 공모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산복도로 중심의 도시재생 계획을 내놨는데, 우리는 바다를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에 대응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란 슬로건으로 승부했던 거죠. 부산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산복도로 중심이었죠. 산복도로는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산으로 이주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항구도시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영도다리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수리조선산업을 일군 깡깡이마을 같은 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실한



깡깡이 아지매 (사진제공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콘텐츠로 삼겠다고 했지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많이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미술 작업도 하고 예전 도선도 유람선으로 복원했습니다. 선박체험관도 만들었죠. 수리조선소에서 배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빗줄에 몸을 묶고 망치로 ‘깡, 깡’ 소리를 내며 작업했던 깡깡이아지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실을 다 숨기는, 과거 가난했던 아픈 기억들인데 그런 걸 재조명하면서 다른 지역 도시재생하고는 콘텐츠 차별화가 확실히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재생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인데, 하나가 마을회에서 일제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사용하던 마을회관 리노베이션(renovation)입니다. 마을 회관을 깡깡이생활문화센터로 리노베이션해서 마을박물관, 마을다방을 만들 었죠. 마을다방은 다목적 카페 공간인데,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방 만들자니까, 회의실 만들어 달라며 반대가 심했는데, 지금은 발표 회, 토론, 강연 같은 문화적 행사도 많이 열리고 주민들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투어와 해상투어를 하는 깡깡이투어입니다. 해상투어는 2019년 5월부터 영도구의 일부 지원을 받아 마을회 이름으로 유람선 사업 허가를 받아 주말(토·일) 각 3차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투어는 우리 가 양성한 문화해설사 12명이 해설을 해주고 음료를 제공합니다. 깡깡이 투어는 실비 차원의 유료입니다. 적은 수익이지만 이런 걸로 마을회관에 주민 4명이 상근을 하고 있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마을회를 사단법인화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실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담장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자고 하니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회의를 40번 정도 했 습니다. 지금은 보기 좋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합 니다. 담장 하나 허무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마을다방을 만들고 유 람선 사업을 하자니까 적자 걱정에 반대가 심했죠.



영도의 수리조선소 모습 (사진제공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강강이에술마을 내 공장에 그려진 벽화 (사진제공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강강이에술마을-문화예술적 도시재생 모범 사례

—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 대표 : 단적으로 말하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90% 이상이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짓고 용역을 줘서 콘텐츠를 반영하는 방식이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모델들은 총괄기획자가 있고, 공무원들이 주도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총괄기획자도 대학 교수님들이 비상임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강이마을에 일주일 내내 머물 때도 많거든요. 강강이에술마을사업단에 상근 5명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전체 사업비 35억 원 중 5억 원 정도를 책정하려고 했더니, 영도구청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저보고 총괄기획자를 하고, 마을활동가 2명을 붙여주겠다고 했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35억 원 사업비로 도시재생을 하면, 백 몇 십 평짜리 땅을 사서 건물 하나 지으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강이에술마을 조성 사업에 시비, 국비 합쳐 50억 원 정도 들었는데, 하드웨어 사업에 60% 정도 들었고, 나머지 40%는 콘텐츠 작업과 거버넌스 구성, 주민 교육 등에 쓰였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사업단 상근자 5명은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문화 쪽 일을 많이 해왔는데, 공무원들과 소통이 어렵다 보니 제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죠. “문화 파트 공무원들과는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 같아서 손짓 발짓으로 소통이 가능했는데, 건축과 공무원들과는 외계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5년 정도 지나니 구청 공무원들도 “문화예술적 진행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죠.

깡깡이예술마을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나 그걸 부각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짧은 기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든 점입니다. 그게 흔하지 않다 보니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인용되기도 하죠.



영도 문화도시 posts
출처: www.facebook.com/artcityisland.yeongdo

— 이제 문화도시 사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어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이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역사회의 공동체 커뮤니티에 관심이 늘었습니다. 예전의 전통적인 문체부 지원 사업은 좋은 공연장이나 미술관 만들고, 그 내용을 채우게 작품이나 미술품을 만들도록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죠. 요즘에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예술 활동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공연장이나 미술관 같은 특화된 문화공간이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들이 지역사회에 스핀오프(spin-off : 기존의 영화, 드라마, 게임 따위에서 등장인물이나 설정을 가져와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또는 그런 작품)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와 예술, 지역사회 속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데 관심을 쏟게 되었고, 문화도시 선정도 그걸 개념화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관건

— 영도문화도시사업단 총감독 역할을 맡으셨는데, 영도가 제1차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영도 문화도시’의 방향은?

이 대표 : 영도 문화도시는 첫째로 깡깡이예술마을의 성과를 이어가고 싶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적어도 10년 정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30년쯤 지속돼야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어도 후속세대가 이어받아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이죠. 깡깡이예술마을도 5년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빠지더라도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성과를 안착시키려면 최소한 5년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깡깡이예술마을을 이어받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출발시켜보자고 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 벽화 (사진제공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부산 원도심의 북항통합재개발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하드웨어 중심의 방식이죠. 국내 최초로 철도와 항만시설이 통합된 도시개발방식인데, 그 역사가 다 없어지는 방식이죠. 1부두 암벽 같은 역사적인 시설들은 보존하지는 여론이 생겨나면서 보완되긴 했지만 아쉬움이 큼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 서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가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선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공원이었다면 서울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느냐?” 영도는 특히 워터 프론트(water front) 중심으로 수변 공간이 공업지구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걸 상업지구나 근린생활지구로 바뀐 버리면 마린시티처럼 난개발 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도에서 바라보는 조망이야말로 최고의 풍광을 볼 수 있죠. 바닷가 조망도 최고이고, 원도심도 다 보이니 최고의 조망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 영도는 개발의 욕구나 압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런 영도가 마린시티나 북항재개발지역처럼 역사와 전통이 거세되고 개발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원래 살던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역사성도 살리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영도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 문화도시에 응모할 때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Art City Island, Yeongdo)’를 슬로건으로 했군요?

이 대표 : 섬은 육지에서 동떨어져 고립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영도는 도심 속 섬, 도시에 붙어 있는 섬으로 육지와 잘 연결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도는 특히 제주도 출신 등 이주민도 많고, 조선산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1930년대 부산 최초의 원도심 옆 공업지구로 발전하기도 했죠. 그런 역사성을 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심 속의 섬인데, 개발 모델을 인공적인 리조트 중심의 싱가포르 센토사 섬처럼 갈 수도 있지만, 영도는 다양한 산업유산과 생활문화자산을 잘 보전해서 ‘살아 있는 박물관’ 같은 개념으로 발전시킨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산 북항은 초현대적인 신도시로 재개발되고 있고, 그 인근에 올드

타운(old town), 구도심의 역사성이 잘 보존돼 있다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개발할 건 개발하되, 보존할 건 잘 보존하지는 것, 다시 말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게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바야흐로 영도의 시대가 왔다” - ‘영 아일랜드(Young Island)’ 부각

— 영도가 다른 지역보다 문화예술적 측면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 대표 : 부산에 국제시장, 보수동, 산복도로 등 원도심이 한창 뜰 때 영도는 관심 밖이었죠. 지난해부터 제가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영도의 시대가 왔다.” 그만큼 사람들이 영도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제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렸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되라, 갠 영도 출신 아이가” 할 정도로 예전에는 영도가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도를 ‘영 아일랜드(Young Island)’라고 합니다. 젊은 섬, 새로운 영도, 신기한 영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영도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실제 영도는 오래된 창고도 많고 경관도 좋아 복고풍 레트로 열풍에 부합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강이에술마을 조성 사업도 그런 매력을 활용한 것이죠.

— 영도가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곳에서는 영화 촬영도 많이 이뤄지고, 풍광 좋고 이색적인 카페도 많이 생겨나고, 참 핫플레이스(hot place)가 되고 있는데 강강이에술마을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대표 : 그건 과대평가이고요. 단지 문화적 관점이 강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강강이에술마을이 손에 꼽힐 만한 사례가 되겠지요. 흰여울문화마을은 꽤 오래 됐고, 관광객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문제가 걱정입니다. 아이돌 스타 강다니엘이 그 마을 출신이다 보니 성지 순례하듯 팬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한 달에 3만~4만 명이 몰리고 있죠. 그런데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영도 워터프런트지역은 지가도 상승하고 있고, 투기자본이 들어와 창고도 매입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부산시가 창고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공공자산으로 삼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산복도로 쪽에는 폐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봉래동 산복도로’라 해서 사업명을 ‘봉산마을’로 했는데, 그쪽은 공터를 매입해서 도시조경 도시농업을 많이 하고 있죠.

‘대통전수방’도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봉래동 수변공간에서 오래된 삼진어묵 공장이 현대적인 베이커리 매장 건물로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그런 콘셉트로 오래된 점포, 즉 노포(老鋪)들에 청년창업가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겠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대통전수방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M마켓입니다. M마켓은 공장창고의 외형에서 모양을 본떠 명명했고, 2018년부터 1년에 4회 이상 주말에 열리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중에 곧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데, 문화도시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겠다는 것도 주요 콘셉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3월 끝났지만, 예술마을과 그 주변 일대가 정부의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됩니다.

—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이승욱 프로필

서울대와 콜럼비아 대학원에서 미학과 예술행정을 전공했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춘천인형극제, 창무국제예술제 등 다수의 공연예술축제 기획에 참여했다.

2010년 부산으로 돌아와 지역문화지 ‘안녕 광안리’를 창간했고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무빙트리엔날레 등을 기획했다.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을 결성해 수영성 문화마을, 깡깡이예술마을, 영도 문화도시 사업을 실행했고 부산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부산문화재단 개선방안 등 다수의 정책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다.

‘오래된 젊은 섬’ 기획자들 인터뷰(2) : 김철우 ‘끄티’ 대표

“영도는 일과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지”



부산 영도구 청학동 바닷가에 자리잡은 ‘끄티(GGTI)’. 1979년 금호타이어 물류 창고로 지어졌고, 이후 조선·항만 물류 창고로 쓰이다 방치됐던 곳인데 2018년 4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창고를 매입한 이가 김철우(45)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대표. 이곳에서는 미디어아트, 공연, 전시회, 테크노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뜻에서 딴 ‘RTBP(Return to Busan Port) 얼라이언스’는 도시재생, 공간 기획, 문화 콘텐츠 기획, 기술개발 혁신, 인큐베이팅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영도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총괄디렉터도 맡은 바 있다. ‘끄티’를 만들었고, 사업가이자 스타트업 조언자이기도 하고, 문화예술공간 디렉터, 도시재생 디렉터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는 ‘하이브리드 기획자’로 불리기도 한다. 영도와 인연이 깊은 그를 만나 영도와 부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영도 바닷가 문화공간 '기티'의 공연 장면 (사진제공 : 기티)

— 영도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김 대표님이 생각하는 영도는 어떤 곳입니까?

김철우 대표(이하 김 대표) : 영도의 특징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사람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후 영도는 부산항의 일부이자 도시에 근접한 섬으로서, 시내의 항(港)이 아니면서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항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영도에는 항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몰려오는 것에 더해서 중심항의 변두리라는 특성상 조금 다른 것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영도가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형성됐지만,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의 집결지라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중심이 아닌 변두리 성격의 사람, 콘텐츠, 문화들이 많이 모이는 일종의 멜팅 팟(Melting Pot :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도는 '변두리' 특성 지닌 '멜팅 팟'으로 에너지가 강렬하다

그래서 영도는 에너지가 강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류였으면 한 방향으로 획일화가 됐을 텐데, 변두리 특성이 강하다 보니 여러 요소들이 상충하면서도 일정한 조정기를 지나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각자가 가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영도에는 부산만의 정체성과 타 지역의 정체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로 인해 형성된 이북 문화와 제주도 이주민 문화 등 타 지역 공동체와 그 문화가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도의 특별함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도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섬으로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산업화 시기에 개발 우선 정책에 따라 그 속에 조선·항만시설 같은 중공업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가치 상충되는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 영도는 환경이든 그 속에 사는 사람이든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만약 영도가 태종대나 흰여울 문화마을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관광 휴양지 위주의 지역이었다면 이런 에너지는 없었겠죠.



영도 바닷가 문화공간 '끼티'의 공연 장면 (사진제공 : 끼티)

- 영도는 동삼동 패총에서 보듯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인데, '영 아일랜드(Young Islan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산연구원(BDI)이 지난해 연말 선정한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에 '영도의 재발견'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김 대표 : '영도의 재발견'은 원래 있었으나 우리가 못 보고 지나쳤던 영도를 다시 보게 됐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영도를 아예 다른 곳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영도의 역사든 스토리든 정체성이든 잘 들여다보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산업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간과했습니다. 산업화 시기가 지나고 이제 경제가 침체기에 이르다 보니 영도의 정체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도의 재발견'은 원래의 영도를 다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도 바닷가 문화공간 '깃티'의 공연 장면 (사진제공 : 깃티)

— 문화공간 '깃티'가 부산의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소문났는데,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요?

김 대표 : 대학에서는 영화를 전공했는데, 영도에 돌아와서 조선 관련 디자인,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께부터 조선 산업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영도 바닷가에 있는 조선 관련 공장과 창고, 주변의 집이 자꾸 비어가는 걸 보고 이런 자산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고 바닷가에 바로 접한 공장은 업무를 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여가를 즐기기에 그런 공간들이 매우 유리한 입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일 외에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자산을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깃티'를 시작했습니다. 영도에는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즐기거나 여기활동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어 있는 공장을 활용해서 문화공간, 여가공간을 만들고 예술가들과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기존 문화시설에서 받아줄 수 없는 문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다 보면 부산의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동시대 부산의 아방가르드(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깃티'란 이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위적인 위치 '끝'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닷가 폐창고가 아방가르드 공간 ‘끄티’로 재탄생

- 활동공간을 찾지 못한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여유와 힐링을 즐기게 하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끄티’를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계신데, 힘든 점은 없으신지요?

김 대표 : 앞에서 영도는 주류가 아닌, 변두리 문화와 맥락이 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끄티’는 주류 제도권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보다 가능한 한 변두리에 있으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강한 예술가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끄티’ 공간의 기획 자체가 상업적인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아니라 실험적이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점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기획 의도에 부합하게 순항 중이라고 봅니다. 주변 지인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전용 문화공간으로 확장되길 기대하시지만, 관객이나 예술가에게 과금(課金 : 서비스를 제공한 측에서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거두어들임)을 하려면 시설과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또 이 지역이 공업지구라 상업적인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 바램은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끄티’ 같은 실험적인 모델을 보고 이런 류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뉴딜사업에 선정된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프로젝트의 민간 총괄 디렉터 역할을 하셨지요?

김 대표 : 봉산마을 프로젝트(2018~2020)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해당되고 국비, 시비, 구비 등을 합쳐 사업비가 232억 원 투입됩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고, 강강이에 술마을은 예술활동과 레지던시(residency : 거주)를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을의 도시재생도 결국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는 것인데,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업비가 나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봉산마을 사업에 제안을 했던 게,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서 와서 특정 활동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술가나 창업자들이 아예 입주민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환경적인 요소, 커뮤니티,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건데, 그 효율을 위해서 원래 봉산마을이 가지고 있던 역사, 자연, 사람 같은 자원이나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방향을 기획했고 그 실행을 위해 지난해 가을까지 1년 반 정도 민간 총괄 디렉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마을에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을 두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 김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래 영도의 모습이랄까 청사진은?

김 대표 : 앞에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 가지 요소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고 주민의 삶과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일, 여가, 주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영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이 생기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여가를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해가 적도록 해야겠죠. 주거도 고층 아파트 일변도가 아니라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서 적절한 층수의 주거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지요. 영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런 일과 여가, 주거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과 관련해서는 영도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항만산업이 침체기에 있지만, 바닷가의 공장이나 넓은 배후부지 등을 잘 활용하면 조선·항만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정체성, 공동체의 에너지를 감안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광지 연결돼 ‘걸어다니는 영도’로 여행 경험치 높였으면

— 앞으로도 영도를 주무대로 활동할 계획이신지요?

김 대표 :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줄곧 영도에서 경제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도의 쇠퇴 현상이 심각했기에 영도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부산과 다른 지역에도 다양한 도시 문제가 있고 그걸 알티비피얼라이언스가 잘 풀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 대표 : 영도가 가진 큰 장점은 단일 자치구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콘텐츠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벨트화 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영도'라는 콘셉트를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마을 하나를 보는 데 하루가 걸린다면, 강강이에 술마을이나 흰여울문화마을,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등 여러 마을을 쭉 둘러보는데 일주일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차를 타고 관광 포인트만 보고 가느냐, 골목길을 세밀히 둘러보며 삶의 흔적을 경험할 것이냐에 따라 여행이나 관광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블록 단위로 형성하되 블록과 블록이 연결돼 있고, 그 블록 안은 콘텐츠의 집적이 골목 단위로 돼 있다면 그 길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여행의 경험치가 훨씬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도는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철우 프로필

현재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대표이사로서 영도는 물론 부산의 도시재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봉산마을 민간총괄 디렉터(2018~9)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문화예술 운영위원, 영도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지역협업센터 운영위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재개발사업 2단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오래된 젊은 섬’ 기획자들 인터뷰(3) : 박나리 <다시, 부산> 총괄 에디터

“살아 있는 부산’을 알리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 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곳? 당신에게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부산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 부산에 오라.”

가장 부산다운 잡지를 표방하는 <다시, 부산(DASI, BUSAN)>.

출판이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된 세상인데, 용감하게 ‘부산’을 알리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사람. 그 주인공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 박나리(43) 씨.

<다시, 부산>은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매호 300페이지가 넘는다. 그만큼 부산에 관한 별의 별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 바다, 영화, 음식 등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에 대한 글, 그림과 사진, 만화, 그리고 ‘부산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에 대한 안내 등 부산을 낱알이 파헤쳐 주는 잡지다. 이 잡지는 기획부터 집필, 사진,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부산 사람들이 재능 기부로 잡지를 구성하고, 매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하는 시스템을 고수한다. 벌써 8호까지 냈고 9호를 준비 중이다.

<다시, 부산>을 5년째 만들고 있는 박 총괄 에디터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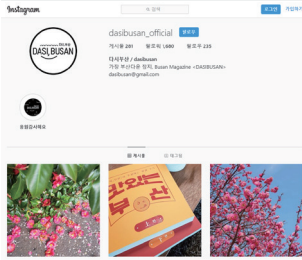
<다시, 부산> 잡지들

- <다시, 부산>이 책 모양은 귀여운데(?) 내용은 아주 풍부한 걸로 소문나 있더군요. <다시, 부산>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박나리 총괄 에디터(이하 박 에디터) : 2016년 말 16년 다닌 직장에 사직서를 내면서 “앞으로는 해서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마음 먹었죠. <다시, 부산>은 부산 이야기를 다루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함께 모이게 되었고 2016년 12월 창간준비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세상이 온통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대로 변했는데, 어떻게 유튜브나 웹진도 아니고 사양길에 접어든 잡지를 발간할 생각을 했는지요?

박 에디터 : 인쇄매체가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걸 알았지만 잡지에 대한 갈증이 기자 시절 독립 출판에 대해 취재하면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그때 개성 있는 출판물들을 보면서 부산에는 왜 부산을 제대로 알리는 잡지가 없을까 의아했습니다. 부산을 알리는 매체 창간을 생각하면서 곧장 잡지를 떠올렸죠. 실제 부산에는 여기저기 새로운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어떤 장소들은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부산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 ‘살아 있는 부산’을 전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잡지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부산>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dasibusan_official

독자들 재능 기부로 콘텐츠 구성…부산 구석구석 이야기 풍성

— 부산의 변화를 제대로 알리지는 마음에서 시작한 <다시, 부산>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나요?

박 에디터 : 부산의 변화를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가 느끼는 ‘있는 그대로의 부산’을 잘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매호 원고는 ‘부산’을 주제로 해서 독자들의 투고를 받습니다. 부산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재능 기부로 알려주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부산에 대한 다채로운 단상과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산 구석구석 이야기들, 예를 들면 도심에서 조금 비켜난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맛집과 이색 카페 소개까지 실립니다. 실제로 창간호에 참여한 필진 31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가게 주인, 저널리스트, 화가 등 직업도 다양했죠. 이런 시민 투고 형식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자체 기획으로 진행된다면,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주제만 해도 한 번만 다룰 수 있을 텐데 독자들의 다른 시선으로 원고가 들어오다 보니 같은 장소여도 매호 다른 색깔의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로도 다른 글이 나오다 보니 계속 될 수 있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산에 대한 글을 써서 필진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께서는 <다시, 부산> SNS 인스타그램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호부터는 기획주제를 가지고 기획 기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6호는 벚꽃을 주제로 표지부터 벚꽃으로 그리고 기사도 벚꽃 관련으로 기획했습니다.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현재 8호까지 나왔고요, 현재 9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산> 에디터들은 다른 직업이 있고 잡지를 만들 때만 함께 모여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 이 또한 재능 기부입니다.

— 재능 기부를 하는 분들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박 에디터 : <다시, 부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획 일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일도 있고 보상이 있는 일도 있고 재미가 있는 일도 있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부산> 팀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지난해 6호, 7호, 8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부산을 더 잘 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 <다시, 부산>이 다른 잡지들과 다른 특징 중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들었습니다.

박 에디터 : 매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일종의 ‘선(先)구매’ 방식입니다. 책이 궁금하고 잡지에 공감하는 사람을 위한 예약구매인 셈이죠. 책을 팔고 싶은 사람들도 펀딩에 동참합니다. 카페, 밥집, 옷집, 호텔, 기념품 가게 등 서점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책 판매처가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dasibusan_official)에 소개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잡지와 함께 리워드 상품으로 로컬 브랜드 제품들을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어묵, 다시마, 커피, 불펜, 안대, 손수건, 에코백 등 부산 기업이 생산한 ‘부산 굿즈’까지 소복이 담은 ‘럭키박스’를 준비하는데, 향토기업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비용 일부 충당…참가자들에게 ‘부산 굿즈’ 선물

— 지금까지 <다시, 부산>이 이룬 성과로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박 에디터 : 일 년에 두세 번씩 책을 내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성과라고 말할만한 것은 없고요. 더디더라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부산>이 계속 되고 있는 자체가 성과라면 성과라고 봅니다. 가끔 독자 분들 중에 <다시, 부산>이 있는 줄 모르고 안 보고 부산에 여행 온 것이 아쉽다, 과일호를 다 구할 수 있느냐고 하실 때 뿌듯합니다.



부산 기업이 생산한 ‘부산 굿즈’가 가득 담긴 <다시, 부산> 크라우드 펀딩의 리워드 상품

- 박 에디터 약력을 보니, 2000년 부산일보 미술기자로 입사해 편집기자를 거쳤고, 맛집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부산을 맛보다 2』를 펴냈군요. 또 그때 경험을 살려 코미코(comico.kr)에 좌충우돌 맛집 취재기 <탐식보도>의 웹툰 작가로도 활동 중이신데, 인생 2막의 경험이라 할까 느낀 점은 무엇인지요?

박 에디터 : 16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한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난 터라 선배 기획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잡지를 창간해 보니 잘 만들어내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산을 잘 말해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점점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 그런 생각보다는 한 명이 보더라도 잘 만들자, 소장하고 싶은 책을 만들자고 다짐했죠. <다시, 부산>은 잡지이지만, 잡지라는 생각보다는 단행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 권을 만나게 되면 다른 호가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 되도록, “내가 좋아하는 부산을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좋아했으면” 하는 진심을 가득 담아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 <다시, 부산>이 부산을 다시 잘 우려내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부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쪽쪽 뺏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박나리 프로필

부산일보 맛 담당 기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맛집을 소개하는 『부산을 맛보다 2』를 썼다. 신문사 퇴직 후 부산을 제대로 알리자는 뜻을 세워 「다시부산」잡지를 만들고 있으며 대표를 맡고 있다.

웹툰 '탐식보도'를 저스톤/코미코에 2017년 8월~2019년 4월까지 94화를 동시 연재한 웹툰작가이기도 하다.

04

이슈 분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진단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경과 및 현황과 방향

박재울

동네소멸시대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초의수

칼럼) 지방 쇠퇴는 나라 전체의 공멸 부른다

오영환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경과 및 현황과 방향

박재울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1. 들어가며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이 흘렀다.

1991년에 광역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을, 1995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뒤 자치가 속빈 강정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권한, 중앙정치 권력은 그대로인 채, 무늬만 자치라는 자조가 확산되었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을 바탕으로 자율행정과 자율정치의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선진국형 국가운영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방향은 금세 희미해졌다. 애초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운영의 전망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체계적인 계획이 빈약했음을 이내 드러내고 말았다. 기존의 중앙집권 체계를 지방분권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지방자치는 물거품임,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은 공염불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추진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계, 언론, 지방정부 등에서부터 지방분권이 시대적,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여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정부가 바뀌면서 들어서고, 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민참여, 지방재정 확충 등에서 일부 지방분권의 걸음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길은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은 않다. 그 길만이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지나고 있으면서 21대 국회 출범에 즈음한 현 시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개략적이거나 지방분권의 주요 경과 및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경과

1)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독립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 1>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제

| 분야 | 실천과제 |
|------|----------------------------------|
| 정부부문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방안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추진 |

김홍환·정순관(2018:15)

우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1991년, 정부조직관리 지침(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법정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부기간 동안 610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 다음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역자치경찰제였다. 일본의 모델을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자치단체 산하로 두는 방안이었으나, 논의에 머물고 말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방분권은 독립된 과제로 논의·추진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지만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은 일부 과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의제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공약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정부출범 이후, 4대 국정원리 중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선정하게 된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이 본격 추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제23대에서 제30대까지 8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조세개혁(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의정활동기반 정비·강화 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지방

<표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 기본방향 | 실천과제 |
|------------------------|---------------------------|
| I.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 1. 지방분권 추진기반강화 |
| |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 |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 |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
| |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 II.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 6.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
| | 7. 지방세정제도 개선 |
| | 8.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
| | 9.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 |
| III.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 10. 지방자치권 강화 |
| | 11.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 |
| IV.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12. 지방의정 활성화 |
| | 13. 지방선거제도 개선 |
| V.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14.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제 확립 |
| | 15.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 VI. 시민사회의 활성화 | 16.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
| | 17.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강화 |
| VII.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 18.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 | 19.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 | 20. 정부간 분쟁조정 기능강화 |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

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최초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계획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과 혁신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내용들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외하고는 이후 정부에서도 큰 차이 없이 제시되었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까지 연결되고 있다. 지방분권 추진의 전반적인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은 그만큼 어렵고 더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시도되었다. 사무이양은 831건으로 전 정부부터 지속된 것이지만,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에서 19.27%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국고보조금 정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등 재정분야 보완,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시행 및 특별 행정기관의 통합과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등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 조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주요 과제들은 실행되지 못하는 미완의 분권이라고 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과제가 인수위원회를 거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지방이양심의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과제들이 마련되어 추진과제들이 대부분 연결되었다.

<표 3>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 기본방향 | 과제 |
|-------------|-------------------------------|
| 권한 및 기능 재배분 | 1. 사무구분체계 개선 |
| |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 | 3.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
| | 4. 교육자치제도 개선 |
| | 5. 자치경찰제도 도입 |
| 지방재정 확충 | 6.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 | 7.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 | 8.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
| 자치역량 강화 | 9. 자치입법권 확대 |
| | 10. 지방의원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
| | 11. 주민직접참여제도 보완 |
| | 12. 지방선거제도 개선 |
| | 13. 지방자치단체 진단·평가 |
| 협력 및 공감대 확산 | 14. 지방자치행정체제 정치 |
| | 15. 정부 및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
| | 16. 분쟁조정 기능강화 |
| | 17.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활용 |
| | 18.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
| | 19.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
| | 20.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

자료: 이창균(2010:145)

이명박 정부에서 사무이양은 이양확정 1,587건 중 이양완료 516건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이양확정 건수는 많으나 실제 완료 건수는 적었다. 그 외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의약품 등 3개의 특별행정기관 중 시설관리, 지도·단속,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를 이관하였는데, 특별행정기관의 실질적 기능 이양,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다.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기대하게 했다. 그런데 실상은 당시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등의 보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능동적인 재정확충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후 정부에서 지방세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활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1년에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신설, 전국의 시·군·자치구 통합을 추진하여 마산·창원·진해를 통합, 현재의 창원시를 만들었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 획일적 추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광역자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자아내면서 결국 대부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4)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는 대선공약과 정부출범과 더불어 발표한 140대 국정 과제에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과제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개편한 뒤 구체적인 종합계획으로 드러났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전체 46,005개에 이르는 행정사무를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재분류하여 공동사무를 최소화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개별 건수별 사무이양에서 벗어나 묶음으로 업무를 이양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정을 연계해 나가려는 과정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물론 이 법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재추진하였으나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2013년에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확대하여 지방세를 확충, 일정한 진전을 보였는데, 당시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여 발생하는 지방세 손실을 메꾸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말았다. 그 외에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다수의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기대가 높았으나 집권이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표 4>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 기본방향 | 실천과제 |
|---------|-----------------------------|
| 핵심과제 |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
| |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 |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 |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
| | 5. 자치경찰제도 도입 |
| |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
| |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
| |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 일반과제 | 9.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
| | 10. 지방선거제도 개선 |
| | 11.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
| |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
| | 13.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 | 14.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
| | 15.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
| | 16.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 | 17.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
| | 18. 시·군·구 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 발굴 |
| 미래발전 과제 | 19.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 | 20.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자치발전종합계획

3.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

<표 5>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 기본방향 | 과제명 |
|-------------------------|---------------------------------|
| 1. 주민주권 구현 | 1-1. 주민 참여권 보장 |
| | 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
| | 1-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
| | 1-4. 조례 제·개정 of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
| | 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
| | 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
| | 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
| | 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
| | 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
| |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 | 2-5. 대도시 특례 확대 |
| |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 | 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
|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 |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 | 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 |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
| |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
| |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
|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 | 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
| | 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
| | 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 |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
| |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
| |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 |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
| |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 |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
|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 | 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

자료: 자치분권위원회(2018)

1) 자치분권 종합계획(6대 분야, 33개 과제)

지방분권은 이념적, 정파적인 대립과 갈등의 사안들이 아니라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선진형 지방자치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보편적인 과제이다. 그리하여 여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관련 특별법의 기초를 유지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은 한계가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은 국정의 주요의제로 등장하여 처음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 정부들에서 세부적인 정책 논의는 지속하되, 법률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하나 하나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에 서 밀려나 전반적으로 논의와 계획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주역 중 주역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이후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중 3대 전략, 11대 과제로 균형발전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후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구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분권 헌법개정은 2017년 대선시기에 권력구조 등을 포함해 주요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고 약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2018년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존재했지만 헌법 제 1조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기하는 등, 현행 헌법에서 진일보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지만 국회의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되고 말았다. 이제 21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

3) 재정분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로 바꾸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정부 출범이후 이 공약은 임기 내 7:3 실현으로 후퇴, 조정되었

다.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26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10%에서 21%로 인상(8조 4천억), 소방안전 교부세를 20%에서 45%로(25%) 인상(5천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균특회계분 기능이 양으로 3조 5천억 상쇄, 지방교부세 감소로 1조 7천억이 상쇄되어 순 지방세 증가는 3조 7천억 정도이다.

지방세 확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1.24%로 증액(3조 8,600억)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2022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2020년 6월,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 국세 자체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선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직접 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는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리고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배분기준 개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정보 공개,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 등 전향적 방안들이 담겨있다.

그런데 500만 인구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광역시 부단체장의 숫자는 동일하게 하여 자율성을 확대, 기초자치와 연계성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역할 범위와 체계 명료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등, 일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자치경찰제도 등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과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공약했고, 2019년 2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계류 중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20년 넘게 계속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교통, 방법,

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 정부에서 반드시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한편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마침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물론 571개 사무에서 400개로 줄어 아쉬움이 크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도되었던 것이 16년만에 이루어져 그나마 다행이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대책이 숙제로 남아있다.

그 외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등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들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논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4. 지방분권의 방향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달라는 몫 나누기가 아니다. 중앙정부, 중앙정치와 지방정부, 지방정치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우리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국정운영체제 혁신이다. 경제·복지·문화·교육 등 제반 업무들을 주민, 시민과 가까운 현장중심, 지역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정치·행정과정을 설계하고 중앙정부, 중앙정치는 외교, 국방 등의 고유업무를 비롯, 산업·재정 등 각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획, 조정, 실행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87년에 만들어진 현 헌법은 30년이 넘는 세월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며 생활양식과 가치가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중 핵심이 중앙집권형 구조인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그 정책이 모든 분야에 걸쳐있어 포괄적이므로 개별 법령을 통한 실현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대통령의 발의는 무산되었기에 이제 국회가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에 민·관·정·언 등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기구 정립이다. 지방분권 추진에서 핵심적인 것이 그 주체이다. 현재의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분권 정책은 거의 모든 부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별도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법적으로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조차 못하고, 심지어 배석해도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행정기구화 해 실질적인 권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 가칭 ‘자치분권수석(또는 분권균형수석)’과 같은 독립된 수석실을 설치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이다. 분권은 자칫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광역시도별로 그 비율을 달리고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상생기금을 부담하는 것도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재정조정제도이다. 그리고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는 광역연합 등의 논의도 분권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비교적 잘 조화되어 운영되는 독일, 스위스 등과 헌법개정 및 광역단위인 레지옹의 확대, 통합 등 최근 지속적인 분권형 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 지향 지방분권’, ‘지방분권 지향 균형발전’의 연계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박재울 프로필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 활동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의 전문가이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방분권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지방분권전국연대/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 등을 거쳤으며, 현재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의 공동대표, (사)지역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지방정부학회/한국NGO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신라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부산작가회의의 회원(시인)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 | |
|--|--|
| 김홍환·정순관(2018)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 이창균(2010)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성과 및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 박재울(2019) 문재인 정부시기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실천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통계학술대회. | 소순창(201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
| 박재울(2019) 자치분권 주요현안 점검과 추진과제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제도화를 중심으로 -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위 특강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종합계획 |
| 박재울(2020) 향후 지방분권운동의 방향 -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중심으로 - 부산지방분권 협의회 워크숍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
| 배준구(2020) 국내외 지방분권추진 현황과 방향. 부산지방분권협의회의 워크숍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자치발전종합계획 |

동네소멸 시대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초 의 수

신라대학교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1. 문제의 제기

‘Ghost Town(유령 동네)’. 영국의 록 그룹 『The Specials』가 1981년에 발표한 노래제목이다. 영국 싱글 차트에 3주간 1위를 했으며 긴 기간 동안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이 동네는 유령도시처럼 다가오고 있어 / 중략 / 여기에서 직업은 찾을 수 없어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사람들은 점점 화를 내고 있어”라는 노래 가사에서 보듯이 동네 가게도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로 없이 그저 진열장 위 팔리지 않는 상품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으며, 주민의 실직과 분노만 쌓여가는 동네의 몰락을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가 발표되는 날 약속이나 하듯이 영국 다수 지역에서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다. 한때 영화를 누렸던 전통산업도시가 쇠퇴의 길을 걸으며 점차 인구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동네를 지탱하던 가게와 근린생활시설이 사라지는 ‘영국의 유령동네현상(Ghost Town Britain)’에 심각성을 느낀 영국 정부는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 등 동네의 회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실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의 3대 핵심 지역 정책 중 하나로 부상되기도 하였다.

일본 역시 도쿄 일극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여 오랫동안 한계동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람이 격감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다양한 공적·사적 서비스의 사막화가 진행되며, 결국은 동네 자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일본 지방자치의 운영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마쓰다 히로야, 2015).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17개 시 의회의 광역의원 26.9%는 단일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었으며(중앙일보, 2019. 4. 16), 심지어 기초의원인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지방소멸과 동네소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세기 50여 년은 도시화로 농촌과 소화를 경험하였다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웬만한 군과 지방중소도시들이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감소로 쇠락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심각한 세계 최저 출산국가의 문제에도 제대로 된 대응책이 미흡하듯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네소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도 매우 아쉬움이 많은 현실이다.

2. 21C 한국사회 도전과 동네소멸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수립했던 중장기 비전과 계획들이 달성되는 목표연도였던 2020년 초에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초비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봉쇄와 차단 없이도 대규모 감염 확산이나 사망자의 폭발적 증가 없이 대규모 진단검사,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혁신적 검사방법 도입, 감염자의 과학적 추적 등으로 세계적 방역모범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남다르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30-50클럽에 유일하게 진입한 우리나라는 GDP 세계 11위의 경제성장국가이다. 평화적 촛불시민혁명으로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기도 하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POP의 세계적 선풍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4관왕 석권 등으로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위상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도전과제도 많다. 영국의 유명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이 세계적으로도 워낙 드물어 '코리아 신드롬'이라 명명하기도 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경향은 '인구 감소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첫 나라'라는 심각한 운명 앞에 우리를 놓이게 하고 있다. 저출산 만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 등은 벌써 학령자원의 감소, 인력부족, 사회적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고용불안 및 일자리 위기와 동반하여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화석에너지 의존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대기환경의 질이 나쁜 나라이며,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국가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어서 개인자유와 공동체 가치보다는 생존형 가치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우리는 매우 중앙집권형 사회라 자치와 분권의 역량이 취약하여 유연한 미래 대응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개선해야 할 것은 지방과 동네의 소멸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백만의 도시국가에 가까운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수도권 외에는 인구, 경제, 사회적 부, 지속가능성 등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현재 상태로는 발전된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충청권까지 연담화(conurbation)하여 여타 지역과의 격차를 더욱 벌

여놓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GRDP에서 충남이 그동안 기간산업 중추지역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을 따돌린 지 오래되었고, 수도권은 고사하고 충청권의 연구개발비와 R&D 및 혁신동력은 부·울·경권이 웬만해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동네의 소멸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¹⁾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수²⁾가 0.5이하의 지역은 39%인 89곳에 이르고, 3,463개 읍면동 중 1,530개(43.4%)에 달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처음에는 농어촌 낙후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군지역, 산업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 도청소재지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혁신도시와 부산과 같은 대도시지역까지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소멸위험지역은 35.3%였으나 5년 만에 7.9%(274개)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은 일자리,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인해 청년의 유출에 의해 소멸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해운 경기 악화 등으로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동네소멸은 인구과소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축소·중단되는 서비스의 사막화와 인구 사막화를 동반 진행시켜 고령층 등 남은 인구 역시 생활의 고통을 받게 된다. 갈 곳 없는 고령층만 남고 모든 떠나 버린 동네는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3. 외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동네소멸 등 커뮤니티 위기는 비단 우리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 국가 역시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일이다. 영국, 독일 등은 전통산업의 몰락과 산업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면서 유령동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이 심각해지면서 지역이나 동네공동체 위기에 다시 봉착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한계마을 등에 주목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몰락,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으로 동네의 위기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1) 이상호, 2018,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2)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 65세이상 고령인구 0.5이하이면 소멸위험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영국은 1970년대 이후 기존 산업의 쇠락과 함께 맨체스터, 리버풀, 셰필드 등 북부지역 전통산업도시와 동네공동체들이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앞서 ‘유령동네’ 노래 제목과 같이 동네 생활인프라의 심각한 붕괴를 경험하며, 주민들의 저항에까지 직면하게 된다. 1997년 집권한 토니 블레어는 북부지역의 번영을 약속하는 비전 전략으로 ‘The Northern Way’를 수립하였고, 광역지역개발청(RDA,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운영하는 등 쇠퇴지역의 재생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동네재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5개년 계획 수립, 지속가능공동체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근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뉴딜(The New Deal for Community), 근린재생 등 동네 재생을 위한 국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하였다. 7대 영역 약 40여 개 지표로 구성된 복합결핍지수(Indices of Multiple Deprivation)의 개발·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취약한 동네를 가려내어 증거기반의 과학적 진단과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캐머런, 테레사 메이 등 보수 연립정부에서도 지역활성화정책은 다양한 진화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제국가로서 주(州)마다 개별적 정책을 운영하므로 일률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주목할 만한 동네공동체에 대한 연방정책으로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동네공동체 재활성화 선도전략(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거둬진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집중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빈곤 대물림과 교육, 주거, 보건, 경제발전 등 전반적인 접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개발부의 사회혼합주택 지원, 교육부의 취약지역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법무부의 동네 범죄예방 사업, 보건복지부의 동네보건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5가지 방향의 ‘기회의 근린공동체(Neighborhood of Opportunity)’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의 동네중시 경향을 살펴보자면, 미 연방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복지국과 노인복지국은 커뮤니티실(室) 산하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대면관계에서 진행되는 직접적 사회복지서비스가 동네공동체의 전달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실제 홈페이지 내에서도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노인복지운영에 있어서도 시설 중심보다는 동네공동체 속의 생활을 강조하는 ‘정든 곳에서 살아가



『지방소멸』 마사다 히로야 지음.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기(Ageing in Place)’의 정책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자연발생은퇴자공동체(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와 노화의 연속적 진행을 감안하여 동네 안 고령친화여건 조성을 위한 ‘연속적 돌봄 은퇴자 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동네공동체라는 ‘장소기반의 정책(Area Based Policy)’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일본은 지역 부흥과 국가 창생의 기회를 삼고자 2014년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를 구성하였으며 ‘동네·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였다. 청년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을 동네, 사람, 일자리에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보다도 더 빨리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국토 형성법이나 ‘동네·사람·일자리 창생전략’에서 인구 사막화와 서비스 사막화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거점 중심으로 거주지역을 집중시키고, 생활거점 간 교통 및 서비스 등을 연계시키는 콤팩트(compactness)와 네트워크(network)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일본형 동네소멸시대의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OECD 등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과 도시, 동네 공동체의 침체 및 도전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주목하고 있으며 UN에서도 저개발국가의 커뮤니티 리질리언스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커뮤니티 리질리언스란 지역사회가 다양한 내외적 위기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지역사회가 다양한 자용자원(에너지, 경제, 커뮤니케이션, 교통인프라 등)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견디며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능력이다.

4. 지속가능 대한민국을 위한 동네 희망 찾기 전략

우리나라에서도 당면한 동네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이끌어내려는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동네가 희망인 이유는 첫째, 내가 참여하여 직접 그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단위가 동네이다. 동네는 주민 일반이 직접 동네복지국가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유능감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 둘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주민자치가 잘 발달된 스위스에서는 동네 행

정을 담당하는 풀타임 공무원은 1명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자원하는 주민 일부가 파트타임 공무원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한다. 서구의 대다수 선출직 주민대표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자발적 참여를 간간으로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동네국가 운영을 통해 많은 국가의 재정이 절감된다. 셋째, 동네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에 매우 적합한 공간으로 민주적 가치의 실질적 적용에 부합한다. 대의민주제에서 국가의 설계와 변화를 개개인이 직접 참여를 통해 느끼는 것은 투표라는 수단밖에 주어지지 않지 않다. 하지만 동네국가 참여는 직접 민주제를 체험하게 한다. 독일, 스위스, 북유럽 등 다수 선진국가의 기초지방자치 인구규모는 평균 1,500~3,500여명에 불과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하여 튼튼한 민주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넷째, 높은 효율성과 주민만족도가 보장된다. 주민이 동네에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원투입 대비 성과가 많아 효율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눈앞에서 직접 성과를 맞볼 수 있어서 만족도 역시 높다.

‘동네에서 희망 찾기’에 대한 도전 역시 만만하지 않다. 첫째,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통해 시·공간의 경계를 약화시킨다.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동네리는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둘째, 도시화와 아파트 중심의 거주문화가 동네에 대한 정체성과 공속의식(we-feeling)을 약화시켜 동네 중심의 참여 동기를 취약하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60%를 상회하는 아파트 거주리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동체보다는 개인중심적 행동패턴을 강화시켜 공동체 과제 참여가 쉽지 않다. 셋째, 동네 이기적 사고로 공익적 가치로의 이행에 도전이 많다. 지역주의는 원래 지역중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좋은 동네국가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공공적 가치가 함께할 때 좋은 성과를 발휘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가 워낙 심각하여 취약한 동네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도 간 1인당 GRDP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으로 그만큼 지역 간, 동네 간 격차가 심각한 사회이다. 즉 자립이 어려운 지역과 동네가 많은 국가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네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희망마을, 정보화마을, 평화생태마을 사업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신규마을, 일

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이 있다.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환경부의 자연 생태우수마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의 일부 사업 등도 동네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과도 적지 않았겠지만 대상지역의 합리적 선정, 사업 간 연계성, 주민참여와 지역주도성 등이 잘 보장되지 못했고, 사업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성과 평가 및 재정비 과정도 없어 관성적인 추진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동네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개선을 제안한다면 첫째, 미래 우리의 동네공동체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꿈과 가치를 담아내는 동네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 영국이 2000년대 초반 동네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동네비전을 수립하였듯이 우리에게 동네의 방향 정립이 동네공동체를 개선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빈곤개선(소득과 일자리), 건강(보건의료), 돌봄, 교육, 사회안전, 주거, 환경, 생활여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구체화로 충분히 비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초의수 외, 2015, 「부산 시민복지기준연구」, 부산복지개발원). 둘째, 취약지역 중심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동네의 비전에는 각 지역이 스스로 만드는 적정기준(the Community Optimum Standards)이 있고,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기준(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이 있어서 국가 최저기준에 미흡한 지역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개선해주어야 한다. 빈곤, 주거, 돌봄 등 영역별 동네맞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동네에 대한 증거기반의 과학적 진단체계를 갖추고 이에 기초하여 동네 지원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의 복합결핍지수처럼 우리나라도 소지역(small area) 단위까지 지역을 진단하여 이를 지역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진단영역은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주거, 생활여건, 사회안전 등으로 하여 동네생활보장복합지수를 개발하고 진단한다. 그 결과 상위 20%지역을 정책우선지역으로 취약영역별 정책적 개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 사막화에 대응하여 콤팩트와 네트워크 지향의 생활권을 조성한다. 향후 특히 비수도권 지역 다수는 인구 격감을 경험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사회서비스 공급마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특히 인구과소 지역에 생활거점을 만들고 생활거점 중심으로 주거와 보건의료시설 등 근린시설을 집중시키며 각 생활거점을 네트워크화하여 생활권이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생활SOC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SOC

의 콤팩트화와 네트워크화라는 계획적 지향이 주민생활권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동네공동체 전략사업개발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혁명 등은 앞으로의 사회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디지털생활혁신, 정보혁신 사업의 범위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운영, 제로에너지 공공 시설 조성,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주민생활안전 정보화지원 등의 사업으로 패키지 모델사업으로 발전시켜 취약동네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기초지자체 중심의 실질적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직도 복지는 중앙집권적 운영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지방은 복지재정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앙집권적인 제약을 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처럼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 조정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 지역의 사정에 맞는 돌봄정책을 기초지자체가 실질적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부 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동네국기는 동네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제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포스트 코로나19의 뉴노멀이 대두되는 요즈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랜드디자인에서 찾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람의 일상적 삶이 존중받는 동네에서 그 단초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네공동체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삶의 그릇이며 현재와 미래를 해결할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어나서 좋았고, 여기에서 자라나고 일할 수 있어 좋았으며, 여기서 노후를 지낼 수 있어 좋았다’라는 슬로건이 동네 입구마다 걸려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마쓰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 인구 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김정환 역, 와이즈베리
- 이상호, 2018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 초의수 외, 2015
『부산시민복지기준연구』, 부산복지개발원
- 중앙일보, 2019. 4. 16
<https://news.joins.com/article/23441896>

초의수 프로필

신라대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라대 기획부총장과 부산복지개발원장을 역임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Professor로 활동했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위원·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정부혁신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복지조사론』(정민사), 『SPSS25.0 활용 자료분석론』(양서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양서원) 등이 있다.

[칼럼] 지방에 내려와 보니

지방 쇠퇴는 나라 전체의 공멸 부른다

오영환

중앙일보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기자 생활 만 32년, 지방 취재를 한 지 1년 반이 됐다. 대부분을 외교·안보, 국제 분야에서 보낸 필자에게 하루하루는 배움의 과정이다. 새로움을 알아가는 여정은 즐겁지만 힘든 도전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현장을 다녔지만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다. 지난해 폐교한 경북 의성군의 한 여자 상업고등학교 마지막 졸업식 당시 92세 학교발전위원장의 축사 겸 고별사다. “해마다 감소하는 입학생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학교를 운영해오다 결국 취학생 부족으로 학교 문을 닫게 됐다. 이 운명적 대세를 누가 막겠느냐.” 일제와 해방,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글로벌화를 다 체험한 노翁의 ‘운명적 대세’라는 말 만큼 인구 감소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지방 도시와 농어촌을 웅변하는 것이 있을까. 한계상황의 지방과 블랙홀의 수도권은 우리나라 양극화의 큰 축임을 새삼 깨닫고 있다.

지방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나라 전체 인구는 아직 증가세지만 자연 사망이 출생을 압도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젊은이가 돈과 꿈을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은 불 보듯 뻔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 곳곳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2040년에 지자체의 30%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한계 마을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면(面)으로 퍼지고 있다. 반면 국토 면적의 약 12%인 수도권은 거의 모든 게 조밀하다. 사람, 돈, 의료, 문화시설이 쏠려 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공공기관 80%, 정부투자기관 89%, 금융기관 70%가 몰려 있다. 지방 쇠퇴, 수도권 중심의 극점(極點) 사회는 눈앞의 현실이다. 인구·에너지·식량 공급원인 지방의 소멸은 결국 수도권 소멸의 전조다. 수도권도 결국 고령화하고, 의료·요양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수도권 중심 공화국에서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의 근간은 인구다. 4.15 총선 당시 서울·인천·경기도 인구는 2,596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이다. 1978년 약 28.7%이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절반을 갓 넘어섰다. 인구 집중은 유권자 집중이고, 정치의 수도권 독점 현상을 낳는다.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수도권 지역

구가 121곳이다. 경기도는 수원시만 5개 선거구가 있고, 4개 선거구인 곳도 성남·부천·안산·고양·용인의 5개 시나 된다. 반면 지방 광역 도엔 4개 시군이 1개 선거구인 곳이 수두룩하다. 선거구 지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상징한다. 국회의원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정치는 수(數)이고, 수는 힘이 다. 선거구민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다. 중심과 주변을 낳는 정치적 구조는 견고하다.

하나의 예가 자동 폐기를 눈앞에 둔 고향사랑 기부제다. 정책 구상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나왔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도시민의 주민세 10%를 고향에 내는 고향세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그해 일본이 입안한 고향 납세가 모델이었다. 이듬해 18대 국회에선 두 건의 의원입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현재의 20대 국회엔 법률 제정·개정안 15건이 제출됐다. 제도는 누구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준하는 세액 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골격이다. 재정난의 지자체는 기금을 설치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 우리의 모델인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는 뿌리를 내렸다. 2018년 기부금은 2,322만 건에 5,127억 엔이다. 도입 10년 만에 액수가 63배 늘어났다. 지자체의 특산품 등 답례품은 22만 개를 헤아린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는 피해 지역에 기부금이 몰려 재난 복구와 부흥에도 특특히 한몫했다. 특산품 과일 경쟁 등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제도는 지방 희생의 한 축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안은 소관 행정안전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새 전국 시도지사·농어촌군수 협의회와 일선 지자체, 농협에서 21건의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허사였다. 법안이 수도권 활성화와 연결되는 제도였더라도 이랬을까. 지방에서 보면 국회도 수도권 중심 공화국의 한 장치일 뿐이다.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는 재정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대기업이 몰려 있으니 세수 차도 천양지차다. 광역도는 재정 자립도가 20~40%이지만 서울은 82.2%, 경기도는 68.4%다. 여기에 수도권은 수당(手當) 정치다. 올해 초 신년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10만 명 확대를 공약했다.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2016~19년 수급자는 2만2,000명이다. 올해부터 3년간 10만 명에 드는 예산은 3,000억 원을 넘는다. 서울시는 월세고를 겪는 청년에도 보조한다. 4만5,000명에게 10개월 간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복지다. 경기도는 이미 청년 기본소득제를 시행 중이다.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제공한다. 미취업 청년 면접수당도 신설했다.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 지원한다.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첫 보험료 9만 원도 준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대상을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 청년 취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신종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 도민에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에 나섰다.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평등에 복지 격차가 겹친다.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논외로 하고, 인구 이동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승리의 방정식이다. 지방에서 구직에 나선 청년이라면 수도권에 가고 싶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내걸고 있지만 두 단체장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방 SOC 투자가 아닌 복지 사다리나 안전망의 지역 불균형 해소다.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한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기업의 지방 이탈을 재촉하는 요소다. 기업은 같은 조건이라면 사람과 수요가 더 많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수도권은 남하(南下)하고 동진(東進)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고속버스로 1시간 25분 걸리는 청주국제공항은 사실상 수도권 공항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춘천 간은 열차로 1시간 남짓이다. 춘천의 한 시민이 춘천을 수도권으로 보는 시각에 적잖게 놀라기도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요체는 인구 이동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방 창생(創生)과 인구 감소 대책의 첫째 과제로 도쿄권 일극(一極) 해소를 내걸었다. 지방 젊은이의 도쿄권 전입 초과를 막는 정책이 못붙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인구의 댐을 만들어야 그나마 출산을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출산율은 수도권이 낮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지만 서울은 0.76명이다. 경기도 주요 도시도 평균에 못 미친다. 우리는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춘 종합 처방전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는 이유다.

지방 붕괴는 나라 전체의 문제다. 인구가 줄면 돈을 쏟아부었던 인프라의 역습부터 시작된다. 유지, 관리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자립과 생존이 불가능한 지방 도시는 정부 예산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 쇠퇴는 결국 나라 전체의 공멸을 부른다. 지방의 각성과 결기도 필요하다. 중앙 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응석의 체질과 전례 답습주의로는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한다. 외부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고 폐쇄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기회의 창(窓)을 세계로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벌(Global+Local)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에서 일본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일본이 바뀔 수 없다.” 일본의 초대 지방창생 담당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결의가 우리한테서도 나오길 기대해본다. 지방의 뉴프런티어는 지방 안에 있을 것이다.

오영환 프로필

1988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해 두 차례 도쿄 특파원을 거쳐 중앙SUNDAY 외교안보 에디터, 외교안보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도쿄총국장 겸 일본지사장, 논설위원 겸 군사안보연구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현재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秘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일보, 1994, 공저-한국기자상 수상), 『자치시대 문열기』(중앙일보, 1995, 공저), 『실록 박정희』(중앙일보, 1998, 공저)가 있고, 번역서로는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나카소네 야스히로, 2001, 공역), 『김정일 최후의 도박』(후니바시 요이치, 2007, 공역), 『그린 자본주의』(사와 다카미쓰, 2010) 등이 있다.

21대 국회 부·울·경 국회의원들의 과제와 역할

지역경제 초토화... 여야 떠나 의원들 힘 모아야

박 석 호

부산일보 서울정치팀 부장



4·15 총선은 부산·울산·경남(PK)의 정치권에 커다란 과제를 남겼다.

전국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완패로 간단하게 규정지을 수 있지만 부·울·경의 선거결과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열어지는 줄 알았던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분석했고, 다른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PK의 불만이 분출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과연 어떤 분석이 더 타당할까. 이번 총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PK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지향해야 할 의정활동의 좌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살펴본다.

“지역주의 회귀?”

먼저 지역주의로의 회귀라는 시각부터 살펴보자.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PK 민주당 의원은 부산 5명, 경남 3명이었다. 2년 뒤 실시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PK 광역단체장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주도권은 여당으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은 부산 1명, 울산 1명이 각각 추가로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 모두 10명의 PK 민주당 의원들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부산 3명, 울산 1명, 경남 3명이다. 당선인 숫자로만 보면 분명 민주당의 위축이다. 또 통합당이 전 의석(무소속 1명 포함)을 석권한 대구·경북(TK)과 PK를 '영남권'으로 묶으면 이번 총선이 '지역주의로의 회귀'라는 그럴듯한 분석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호남에서 민주당이 완승한 결과까지 더하면 영호남 지역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평균 4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 평균 득표율 39.0%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당선인 숫자는 줄었지만 '투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순한 지역주의의 부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보자. PK의 경우, 지난해 ‘조국 사태’와 검찰 인사파동, 그리고 여당의 선거법 강행처리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거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지역 출신 여권 인사 다수가 연루된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권 견제’ 여론이 다른 곳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PK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침체됐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두산중공업 등 PK 기업이 무너지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되면서 ‘골목경제’를 무너뜨렸다. 다른 권역보다 PK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더 먹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1대 총선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여야 정책대결 무산

그렇다면 이제 PK 국회의원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도 분명해 보인다. 경제 위기의 최전방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함께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1대 총선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PK의 여야가 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당들은 선거가 시작되면 화려한 공약을 쏟아내지만 선거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찬반 공방과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가 끝나더라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PK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관문 공항의 필요성, 현재 진행 중인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평가 등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의 갑론을박이 돼야 했다. 그래야 여야는 진짜 ‘신공항 민심’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지역민심을 제대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쉽다. 국무총리실이 진행중인 신공항 검증문제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PK 여야 의원들은 하루빨리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의 미래비전을 둘러싼 논쟁도 뜸만 들어

부·울·경의 미래비전을 둘러싼 논쟁이 없었던 점도 이번 총선의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부산해양특별시'를 대표적 미래비전으로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부·울·경 메가시티는 3개 시·도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여당 소속의 세 광역단체장들이 큰 틀의 방향을 잡아왔다. 민주당의 공약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세부 실행방안을 덧붙였다. 통합당은 부산을 해양·항만 관련 자치기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해양특별시'로 승격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양수도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총선 뒤 출범하는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두 공약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또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등의 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여야는 이를 놓고 본격적 정책이슈 대결을 펼쳐야 했지만, 뜸만 들이다 선거가 끝나버렸다. 부산의 다수당인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15명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숙성되지 않은 해양특별시 이슈가 최종 목표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에 대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쪼그라든 PK 여당이 이를 흔쾌히 도와줄 수 있을지, 통합당 부산 정치권이 당내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당이 PK의 다수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광역단체장들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단체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PK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됐다.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 환경에 따른 협력모델 모색이 절실한 상황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전국적으로는 절반을 훨씬 넘는 180석의 압승을 거뒀지만, 부·울·경에서는 지난 20대 때보다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18석 중 야당이 오히려 기존 12석에서 3석을 더 늘렸으며, 울산에서도 6석 중 5석을 야당이 차지했다. 경남에서도 16석 중 13석을 야권(무소속 포함)이 휩쓸었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동남권 민심이 여당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2년 전 지방선거에서의 '회근한 지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어서 지방 권력을 쥔 여당과 주도권 또는 자존심 경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 환경에 따른 협력 모델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에는 결국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가 만들어져 벌써부터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지역정치권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를 맞은 것이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PK 민심의 준엄한 평가로 만들어진 구도인 만큼 부·울·경 발전을 위한 협력과 협치의 길에서 어떤 마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 시·도의원은 모두 지역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공직이다. 여기에 당파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PK 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줄어든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국비를 확보하거나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부·울·경 광역단체장들도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같은 편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야를 떠난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뜻으로 힘을 모아도 여의치 않을 불꽃 튀는 지역 간 경쟁 시대에 '여 따로, 야 따로'의 행태는 지역민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토록 어렵게 선출 공직의 기회를 잡았다면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후회 없는 협력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코로나19까지 덮쳐 '골목경제' 온통 신음

지금 부·울·경 지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맞닥뜨리면서 특단의 돌파구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 업종의 오랜 침체로 초도화된 상태이다. 여기서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는 온통 앓는 소리뿐이다. 부·울·경 총선 결과는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표심의 분출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여야는 비록 당파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미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의 10대 현안을 선정해 정치권에 제공한 바 있다. 어떤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야 할 것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워 중국, 동남아 등으로 진출했다. 그나라의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다면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외 생산기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일시적으로 땅값과 인건비가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단연코 국내 생산이 유리하다. 거기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은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무너져왔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노동력, 기술개발을 위한 입지 점등을 핑계로 수도권으로 옮겨간 기업이 적지 않았다. 우리 기업이 해외도, 수도권도 아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실천할 수 있는, 또 국회의원의 입법권으로 당장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현안들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데도 나서야 한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모두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추가로 지방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122개 이상으로 파악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번 총선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한 것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非)수도권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보건의료, 육아·복지 등 생활형 이슈에도 귀 기울여야

끝으로 PK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끝나면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과 같은 PK 거대 정당들은 그동안 '부·울·경 발전=대형사업 추진'으로 인식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개발논리적 사고에 젖어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진짜로 목말라하는 분야는 보건의료, 육아·복지 등 생활형 이슈들이다.

4·15 총선에서 정의당 부산시당이 내놓은 '부산의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을 OECD 수준으로'라는 공약은 대표적인 생활형 이슈이다. 부산의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 종사자 수가 OECD 절반 수준이며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 공약은 출발했다. 21대 국회에서 PK 의원들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면 될 일이다. 부·울·경에서는 큰 병만 걸리면 서울의 '빅5'(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을 찾기 위해 인맥과 정보를 동원하고 아픈 환자를 서울까지 데려간다. 언제까지 부·울·경이 이런 2등 국민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저런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번에 당선된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인 만큼 중앙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부·울·경의 새 선량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을 의정활동과 정치력 발휘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새로운 다짐에 나서야 한다.

박석호 프로필

부산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울정치팀장을 거쳐 현재 서울정치팀 부장으로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다. 동아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1997년)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환교수(2006~2007년)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수도권 vs 지방, 대한민국 지역갈등 2라운드』(2011년, 은금나라)가 있다.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 근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장 철 훈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



1. 서론

세계 여러 나라가 국경을 폐쇄했다. 이렇게 이동이 활발한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국경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이러스는 국경과 대륙을 넘어 이미 전 세계로 퍼졌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감염병의 대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때가 오늘일 줄은 몰랐다. “When, not if”가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닌, 바로 지금의 일이었던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와 함께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감염병이 바꾼 역사

6세기 비잔틴제국을 중심으로 퍼진 유스티아누스역병은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만~5천만 명을 희생시켰다. 그 병은 림프절 페스트로 생각하고 있다. 이 질병의 여파로 당시 세계의 교역이 거의 중단되고, 비잔틴제국이 약화되었으며, 동서로 분리된 로마를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유럽은 이후 8백년 간 이어진 기나긴 암흑의 중세 시대를 열었다.

14세기에 몽골제국의 침입과 함께 동쪽에서 들어온 흑사병은 대흑사병이라고 불린다. 이 역병으로 유럽에서 2천5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중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봉건제도가 해체되었고, 해상 운송에서 조선술, 항해술의 발달과 보험업이 등장하였고, 종교의 권위가 무너졌고, 교육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두창이 아메리카대륙으로 유입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인 2천만 명을 희생시켰다. 유럽의 정복자들과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신대륙의 인구 공백을 채우면서 원주민들은 영원히 아메리카를 잃게 되었다. 인도 갠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동서로 퍼져 나가서 20세기 초까지 6차례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켰고, 통제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역학, 통계학, 병원감염, 호스피스 등 현대 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개념들을 생겨나게 하였다. 1918년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대 유행한 스페인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1/4이 감염되고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일으켰고, 전쟁의 종식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3. 신종 감염병은 인류가 만든 재앙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에게 적응하여 왔다. 인구 집단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사람에게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한다. 숙주와 기생체 모두 자신의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체의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두창 바이러스가 전달되고, 유럽 사회에 페스트균이나 콜레라균이 들어온 것처럼 말이다.

현대 사회는 두 가지 이유로 새로운 병원체가 인간 사회에 들어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첫째, 새로운 병원체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간이 계속 밀림과 야생 환경을 침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야생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들어온다. 병원체들은 중간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서 병을 일으키고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적응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모기와 같은 질병매개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 열대감염병의 유행지역이 확대된다.

둘째, 인간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활발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로 들어온 병원체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진다. 콜레라균이나 결핵균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켜 왔지만,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와서야 대유행을 일으킨 것도 도시화와 인간의 이동 때문이었다. 이처럼 신종 병원체가 생기고 퍼질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동반되는 부작용이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인류가 문명을 버리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금세기 들어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코로나19 등 나열하기 숨막힐 정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병원체가 생기고 있다.

4. 빈발하는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보다 앞 단계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인간 사회에 유입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신종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후자의 노력은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최근 20년간 신종 감염병을 대처하면서 우리 모두가 실전을 통한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전자의 관점을 기술한다.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는 매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종 감염병이 인간과 야생 환경 사이의 접촉으로 생기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과 환경 모두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것을 '원 헬스(One Health)'라고 한다. 원 헬스는 공중보건, 동물의 보건, 환경과학, 컴퓨터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노력으로 환경, 동물, 인간을 잘 관찰하여, 질병의 집단발병을 예측하고 질병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두 달 반 뒤에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생겼다. 나중에 이 두 질병의 원인이 모두 웨스트나일바이러스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과 사람의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가 없어서, 이 두 질병이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임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웨스트나일바이러스는 이제 미국 동부에서 매년 수천 명이 걸리고 수백 명이 죽는 풍토병이 되었다. 원 헬스 접근법으로 조기에 통제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원 헬스 접근이 성공하여 질병의 유입이 사전에 차단되면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로부터 인력과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대중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그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5. 코로나19의 생물학적 특징

감염병의 특성은 원인 병원체의 기원, 병원체의 종류, 전파 경로, 전파력, 치명성 등 다양한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전파력과 치명성이다.

<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 | |
|------|---|
| 정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
| 질병분류 |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
|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
| 진단기준 |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 치료 |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 치명률 | ·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
| 관리 |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출처: <http://ncov.mohw.go.kr/>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성을 과거 두 번의 팬데믹, 즉 1918년 스페인 독감과 2009년 신종 플루와 비교해 보자. 우선 전파력을 보면, 스페인독감은 1918년 3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걸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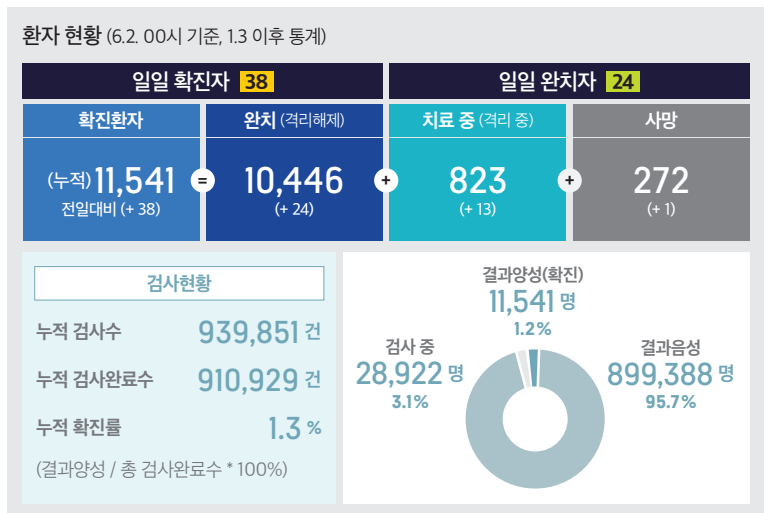
신종 플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11~21%가 걸렸다. 전파력을 나타내는 말인 기초감염재생산수(R0)는 면역이 없는 인구 집단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느냐 하는 수치이다. R0가 스페인독감은 1.4-2.8, 신종 플루는 1.2-2.6으로 둘 다 비슷하나, 코로나19는 2-4, 상황에 따라 사람간 접촉이 많은 경우 6 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코로나19가 스페인독감이나 신종플루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은 것이다(표1 참조).

그 다음 치명성 혹은 사망률의 문제를 보면, 스페인독감은 2천만 내지 5천만 명이 죽어서 4~10%의 사망률을 보였고, 신종 플루는 계절성 독감보다 낮은 0.1% 이하였다. 코로나19는 현재 나라마다 사망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매우 적극적인 진단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있는 우리나라도 2%를 넘고 있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적어도 3%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자로부터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방역과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고, 이 질병이 장기화, 토착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최근 완치 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이는 양성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는 전파력과 사망률이 아주 높고,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도 일어나고, 일단 완치된 이후에 재활성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감염병이 갖는 위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표2 참조).

<표 2>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출처: <http://ncov.mohw.go.kr/>

6. 코로나19와 교육 시장의 변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질병이 통제되지 않고 있고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지구촌의 국제관계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헨리 키신저는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유발 하라리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와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협력,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과 연대 사이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가 과거 인간 사회를 덮었던 어느 팬데믹 못지않게 큰 파도임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의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한 가지, 필자 자신도 강단에서 있는 입장이라서 이들이 언급하지 아니한 교육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 보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과 입학 자원의 불균형으로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2018년에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의 총 정원 이하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30~40%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그만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대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모든 교수들이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 교육 공급자인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를 익숙하지 않겠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 강의, 이른바 ‘인강’을 많이 접해온 세대이다. 인강은 한 사람의 유명 강사가 전국의 학생들을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세상이다. 학생들은 슈퍼스타급 강사들에게 강의를 듣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의 지원이 거의 없이 방음, 조명, 마이크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만들어낸 강의의 품질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 각 대학의 내부통신망에는 학생들의 불만과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학교의 변명이 가득하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대학은 커다란 재편의 파고에 휩쓸릴 것이다. 실습 등 직접 손으로 경험해야 하는 강좌가 아니면 사이버강의, 온라인 강의를 대체를 이룰 것이고, 그 강의는 이른바 유명 강사 몇 명이 독점할 것이다. 좋은 대학의 기준이 전통적인 명문대학이 아닌, 학생들에게 유연한 방식으로 양방향 소통에 의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마치 흑사병이 교육의 중심지를 파리나 볼로냐에서 현장으로 바꾸고, 교수들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쓰는 대신 자국의 언어로 가르치는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말이다. 교육이 점점 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시

장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들은 변화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필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꾼 13번째 질병이 될 것인가? 희생자의 숫자로만 보면 흑사병과 같은 과거의 악명높은 전염병에는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제관계와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꿀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선택지 중 강제적인 통제 사회로 갈 것인지, 시민들의 건전한 양식에 기반한 사회로 갈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폐쇄적인 세계가 될지, 아니면 연대를 통한 국제협력의 사회가 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벌써 세계의 움직임을 거의 정지시켰고, 현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헨리 키신저의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 세계에 변종이 자주 등장하는 병원체이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 7종 중 5종이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코로나바이러스 말고도 앞으로 이런 감염병은 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시민들로 하여금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장철훈 프로필

부산대 교수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다.

결핵 관련 연구로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장을 지냈다.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 및 의학한림원 정회원이다.

번역서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원 헬스: 사람, 동물, 환경』을 출간하였다.

참고 문헌

1.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어윈 W. 셔먼 저, 장철훈 역.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2. 코로나 이후의 세상. 유발 하라리. 파이낸셜타임즈 2020/3/20.
3. 세계 질서를 바꿀 코로나 판데믹. 헨리 키신저. 월스트리트저널 2020/4/3.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정보.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

코로나19와 일본

마츠바라 다카토시

松原孝俊·규슈대 명예교수



1. 코로나19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등장

일본어에 '대충발차(見切り発車)'라는 말이 있다. 한국어로 '다각도의 검토 없이 시기상조 상태에서의 시작'이라 번역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원래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사전에 철저한 '정지 작업'을 거쳐 조율한 후에 '위로부터의 강제적인 개혁'에 저항하며 마지못해 순응하는 습성을 가진 일본인이지만,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기점으로 일본 사회는 하룻밤 사이에 종래 방법으로부터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표 면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출 자제로 코로나19에 적합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예를 들어 대면을 꺼리는 친족, 동료, 거래처와의 소통, 동일 공간을 공유하는 직장 근무가 아닌 재택 근무로의 전환,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학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격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근무 스타일이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2. '사회적 거리두기' 정착... '자숙' 분위기 확산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일본인에게 '바람 직하다고 여겨져 왔던 '접촉' - 즉 스킨십에 의한 친밀감, 신뢰감, 일체감 등의 표현이 거절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프랑스식 인사인 비즈(bise)로 대표되는 뺨 키스를 하는 일본인은 원래 없었다 하더라도, 곁을 넣은 축구선수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 거래처 비즈니스맨과의 악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일본식 인사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일본 사회에 정착되면서 일시적이거나 이러한 모습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앞으로 결속, 우정, 협력의 상징이었던 '어깨동무'를 한 사진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유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매너이며 동작인지를 알게 했다. 반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손가락 하나조차 건네주지 못하는 큰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올해 초부터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는 “자숙, 요청, 협력, 배려”이다. 외출 자숙, 음식점 이용 자숙, 행사 자숙 그리고 활동 자숙 등은 대부분 개인에 대한 자숙 요청이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 요청을 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사업자에게 호소한 ‘요청·협력·배려’만으로 국민의 외출 감소가 80%나 실현되었고, 점포나 기업 등의 영업 자제도 거의 모두 달성되었으며, 극장·콘서트홀의 문은 폐쇄되었고, 프로야구 등의 개막전이 연기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마는 국내 전 거점의 원칙적 영업 금지를 단행하였고, 종업원 약 7만 6천 명의 출근 정지를 명령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 의한 어떠한 공권력 행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적으로 국민이 정연하게 자숙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왜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타인의 눈을 매우 의식하는 일본인의 심리 행동이 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집에서, 또는 우리 가게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극장에서, 우리 축구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여 사회에 폐를 끼치면 면목이 없다’는 심리가 암묵적인 강제력으로 작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증명하듯,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느 유명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에 걸린 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쳐 드리고, 불쾌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가로정렬(横並び)’, 즉 ‘동등의식’이다. 일본인은 유치원 시절부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들고, 유치원 지정 교재를 사용하고, 비슷한 신발과 양말을 신는다. 이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면, 이질적인 것에 대해 민감해지고 집단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모두와 같 다리든가,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 나도 사 달라’라는 행동 양식이 일반화되어 국민 전체가 ‘가로정렬’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듭된 영업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일부 빠짱코(일본식 슬롯머신) 점포에 대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진 곤욕’을 주는 행위가 허용됐다. 연일 이어지는 TV보도, 상점 이름의 공표에 의한 ‘창피 주기’, 또한 일본 정부의 ‘별칭 규정을 포함한 법 정비의 가능성’ 언급 등 위압감을 계속 준 결과 모든 빠짱코 점포는 휴업하기에 이르렀다. ‘가로정렬’의식의 승리인 것이다.

3. 온라인 강의 확산 ... '교육의 질' 향상 등 장점 많아

대학으로 눈을 돌려보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 '온라인 강의'와 '9월 입학'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무기 개발 경쟁으로 상징되고, 테러의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동에서 다발하고 있는 군사적 분쟁 등으로 인해 총이나 미사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일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50~200나노미터의 초극소 바이러스(Virion)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2019년 가을부터 중국에서 발발함에 따라, 비록 일시적일 수 있으나 일본인들의 공포대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477만 명, 사망자 31만 명(2020년 5월 19일 현재)에 이른다는 현실과 유명도시화 된 뉴욕 5번가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때는 2020년 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일본 정부는 전국 초중고 교를, 4월 7일에는 대학캠퍼스를 폐쇄(lockdown)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은 즉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중국은 약 1억 8천만에 이르는 온라인 강의의 선례가 있지만, 전국의 일본 학교도 앞다투어 온라인 강의(실시간형 그리고 On-Demand형)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장 움직임이 늦은 대학에서도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교수들은 대면형 강의의 우위성을 집요하게 호소하면서도 외출 자숙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반강제적으로 줌(zoom) 등과 같은 웹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미숙했음에도 말이다.

그 결과 이구동성으로 온라인 강의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의실의 왕이 교원에서 학생으로 : 커리큘럼이나 강의실은 존재했지만, 그간 교실이 밀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의실 안에서 실시된 교육내용은 비공개였다. 교원의 입실 및 퇴실 시간도 그렇거니와, 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대해 대학 측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의 경우 녹화기능이 있어 더는 속임수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써 삼자에 의한 심사평가가 가능해졌다.

- (2) 강의실에서는 교원만이 학생 전원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화면 전체에 교원도 학생도 같은 크기로 균등한 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비춰져 교원·학생간의 일체성·평등성이 실현되었다.
 - (3) ‘연결 사회’(connected society)의 실현 : 온라인 강의에 의해 장소를 초월한 수업 참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교실과 사회가 연결되었다.
 - (4) ‘혼합(Hybrid)형 강의’ : 대면 강의의 장점도 재검토하면서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한 ‘혼합형 강의’의 장래성이 기대된다.
 - (5)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캠퍼스이며 교실화 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가 예상된다.
 - (6) 외톨이와 학습장애인, 장애우 등 종래의 교실형태가 불편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여기서 굳이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4. ‘GIGA 스쿨 구상’ 실현 위한 최적의 기회

2019년 12월에 'GIGA(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스쿨 구상'을 발표한 문부과학성에게는 코로나19의 만연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었다. GIGA 스쿨 구상이란 한마디로 ‘고속 대용량의 통신 네트워크를 일제히 정비해, 공정하게 개별 최적화된 창조성을 기르는 학교 교육의 실현’이다. Society 5.0 시대에 돌입한 일본에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에 의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델’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 그만큼 온라인을 통한 학교교육이 뒤쳐진 것도 20세기형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코로나19가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마츠바라 다카토시(松原孝俊) 프로필

일본 가쿠슈인대학 문학부 졸업 후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비교사회문화연구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규슈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며, 후쿠오카-부산포럼 후쿠오카측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일 공유의 가까운 미래로> (공저, 2015년 책천사), <조선통신사 역지빙례교섭 무대 뒤 : 쓰시마 종가 문고 한글서한에서 읽다> (2018년, 규슈 대학출판회) 등 다수가 있다.

명상하듯 성찰하듯 걷는 자유와 평화의 길

박창희

경성대 신방과 교수
스토리랩 수석 대표



약동의 계절, 봄에는 걸어야 한다. 이 봄, 코로나19가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를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간격(間隔)을 유지하고 혼자, 명상하듯, 성찰하듯 걸으라고도 요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신종' 사회적 풍경이다.

명상하듯, 성찰하듯 걷는 것은 다른 말로 '순례'(巡禮, pilgrimage)다. '순(巡)은 '돌아보다', '예(禮)는 '예배', '절하다'는 의미이니, 순례는 두루 살피되 예를 갖추라는 말이다. 마음은 경건하게, 발걸음은 강건하게, 두 발로 길에 도장을 찍듯 정성껏 걷는 것이 순례다. 순례는 종교적 영성과 믿음, 내면의 성찰, 공동체를 위한 배려 등의 가치를 내포한다. 종교적·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걷기인 것이다.

부산에 걸을만한 순례길이 몇 곳 있다. 다종교의 도시, 종교적 자유와 평화가 흐르는 부산에 순례길이 있다는 건 자연스럽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숨겨진 부산의 순례길 3곳을 따라가 본다.



지도: 부산연구원 '부산의 순례길' 인용

천마산 힐리로드

부산 서구와 사하구에 걸쳐 있는 천마산(天馬山)은 작지만 웅골찬 기운을 품은 산이다. 이곳의 '천마'는 전설의 말(馬)이기도 하지만, 천마산 일대에서 성스러운 삶을 살다간 세 분의 성인을 상징하는 말(言)로도 쓰인다. 그들이 바로 알로이시오 신부, 장기려 박사, 이태석 신부다. '천마산 3성(聖)'으로 불려도 좋을 봉사와 헌신, 평화의 아이콘들이다. 이들을 찾아 떠나는 순례길은 출발부터 설렌다.

천마산 힐리로드 코스(약 4km)

감천마을 태극도 홍보관 ~ 천마산 둘레길(조각공원) ~
마리아 수녀회 가족센터(소년의 집) ~
고신대 복음병원 ~ 이태석 생가

천마산 서쪽 옥녀봉 아래에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각광받는 감천문화 마을이 있다. 감천마을은 1950년 이후 태극도 신도들이 모여 만든 종교 공동체 마을이다. 천마산 남쪽 기슭엔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된 ‘알로이시오 타운’이 자리한다. 미국 출신 알로이시오 신부가 낫선 한국 땅에서 가난을 구제한 불멸의 스토리를 간직한 곳이다. 감천마을의 천막촌과 판잣집에도 알로이시오 신부의 체취가 배어 있다.

송도쪽으로 가면 ‘바보 성자’ 장기려 박사가 세운 고신대 복음병원(서구 압남동)이 자리한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월남한 장기려 박사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신명을 바쳤다.

서구 남부민동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생각와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어린 이태석에게 알로이시오 신부는 삶과 신앙의 멘토였다.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세 분의 성자가 천마산 주변에서, 그것도 반경 5km 내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세 분의 성스러운 활동 궤적을 ‘홀리 로드(holy road)’라 이름하고 순례에 나선다.

감천마을 너머 천마산까지

‘천마산 홀리 로드’의 출발지는 감천문화마을 중간쯤에 자리한 ‘태극문화 홍보관’으로 한다. 2014년 10월 개관한 태극문화 홍보관은 태극도 신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감천마을은 1950년대 초 외지의 태극도 신도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형성하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이들은 마을을 조성하며 세 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는다, 골목은 종과 횡 어디에서든 통하게 한다, 담장과 대문을 두지 않는다. 50~60년대에 이미 도로 및 세대 구획과 일조권, 조망권을 생각했다는 얘기다. 감천마을의 미로같은 경관 속에는 이 같은 공동체의 가치가 녹아들어 있다.

감천 고개참의 공영주차장을 지나 천마산으로 오른다. 천마(天馬) 전설이 신통방통하다.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천마 한 마리가 이 바위를 딛고 대마도를 향해 힘차게 도약했는데, 그때 생긴 발자국이 거대한 바위 위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천마산 전망대 바위에는 실제 말발굽 자국이 나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부산항과 남항의 해안 풍광은 한폭의 그림 같다.

천마산 10리길을 따라 서구 암남동 쪽으로 내려오면 해광사가 있다. 대웅전이 가정집 같이 소박하다. 해돋이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알로이시오 병원과 힐링센터, 가족센터가 기다린다.



소 알로이시오 신부

가난의 성자, 알로이시오 신부

미국 출신 알로이시오 슈윙츠(1930~1992) 신부가 부산에 온 것은 1957년 12월 9일, 벨기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천주교 부산교구로 부임한 알로이시오 신부는 '소재건'이란 예명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소 신부는 1962년부터 부산교구 송도본당의 주임신부로 일하면서 고아나 부랑아 등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구호·구제 활동에 나섰다. 1964년에는 봉사단체 마리아 수녀회를 만든다.

이후 그는 부산 소년의 집 초등학교와 실업중학교·기계공업학교를 설립했고, 1970년 마리아 수녀회 구호병원을 열었다.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정명훈이 주선해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바 있다.

소 신부는 1975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1983년에는 필리핀의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으며, 1984년과 1992년 두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다. 불치병인 '루게릭병' 선고를 받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그는 1992년 마닐라 '소녀의 집'에서 선종했다.

로마 교황청은 소 신부에게 1990년 2월 '몬시뇰'(고위 성직자란 의미) 칭호를 수여했고, 2015년 1월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소 신부의 이야기는 2016년 11월 <오 마이 파파(Oh! My PaPa)>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소개됐다.



장기려 박사

복음병원과 장기려 박사

천마산 홀리 로드에는 알로이시오 타운을 돌아 고신대 복음병원 앞을 지난다. 복음병원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인술을 펼친 성산(聖山) 장기려(張起呂·1911~1995) 박사가 세운 병원이다.

장기려는 1940년 평양 기흥병원에서 일하다 6·25 전쟁때 부산으로 내려와 1951년 영도구 영선동에 무료 천막병원을 차린다. 그가 1968년 5월 만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국내 민간 의료조합의 효시다.

장기려는 한 세기를 풍미한 뛰어난 의사였지만, 그의 삶은 지극히 서민적이었다. 한평생을 집 한 채 없이 고신대 복음병원 옥탑방에 기거한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다.

그는 1979년 라몬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받았고, 199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그에게 돌아간 수상의 영광은 대부분 사후 그의 아름다운 영혼이 잠든 뒤의 일이었다.

장기려의 희생·봉사 정신은 조용히, 간신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구와 장기려 기념사업회는 2013년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에 장기려를 기념하는 '더 나눔' 기념관을 세웠다. 이곳에는 장기려의 나눔 활동, 업적, 일화들이 이야기 형태로 전시돼 있다. 고신대 복음병원과 부산 서구는 2015년 3월 병원 앞 감천로 구간 822m를 '장기려로(路)'로 지정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의 헌신

이번에는 부산 사람 이태석 신부를 만날 차례. 이태석은 1962년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났다. 어릴적 그는 소 알로이시오 신부가 사목했던 송도성당을 다녔다.

이태석은 2001년 6월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고 그해 11월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로 간다. 톤즈는 아프리카에서도 최고의 오지로,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었다. 톤즈 마을에서 이태석은 유일한 의사였고 교사였다. 이태석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 끝에 치명적인 병을 얻는다. 2008년 휴가차 한국에 들렀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그는 투병 끝에 2010년 1월, 4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선종한 그해 개봉된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는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인 2010년 2월 톤즈 마을에서 브라스밴드가 행진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다는 톤즈 마을 사람들은 이 신부의 죽음을 접한 뒤 울고 만다.

이태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것은 곧 소 알로이시오 신부의 유지와 다르지 않았다.

부산 서구는 남부민동 이태석 신부 생가 일대에 기념관을 세우고 '톤즈문 화공윌을 조성 중이다. 이태석 신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나무로 커는 모습이다.

알로이시오와 이태석 신부, 장기려 박사는 진정한 봉사과 사랑, 헌신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떠났다. 이들의 체취와 숨결을 만나는 천마산 홀리 로드는 벽찬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 순례길이다.



지도: 부산연구원 '부산의 순례길' 인용

선교사 미션 루트

개항 직후, 부산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부산의 근대 여명을 깨운 사실은 교회사와 달리, 지역사에선 의미있게 다뤄지지 않는 주제다. 초창기 서양 선교사들은 기독교 선교와 더불어 이 땅의 의료와 교육, 정치, 사회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발자취와 동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부산 중구 남포동과 동구 초량동 초량교회와 좌천동 부산진교회, 그리고 동래 중앙교회에는 부산의 근대 여명을 밝힌 서양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이름하여 '선교사 미션 루트'다. 그곳을 찾아가 본다.

선교사 미션루트 코스

남포동 선교사 첫 도착지 ~ 초량교회 ~ 부산진교회 ~ 동래 중앙교회 기독교선교박물관(도시철도 1호선으로 이동)

#알렌이 본 부산

1884년 9월 14일, 벽안의 젊은이가 부산항 부두에 첫 발을 디딘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26살의 청년의사 알렌(1858~1932)이었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배편으로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때만해도 조선은 미지의 땅, 부산은 바깥 세상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알렌은 그해 9월 20일 부산에서 인천 제물포항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알렌은 1885년 국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세운 주역이다.



부산 남포동 썸지공원의 기독교 선교사 첫 도착 표지석

알렌이 오고 난 이듬해인 1885년 4월 2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산 땅을 밟는다. 이들 역시 부산에서 인천 제물포를 통해 서울로 간다.

언더우드(1859~1916)는 런던 태생의 미국 기독교 선교사로, 1887년에는 벽지의 전도 여행을 결행하여 그해 9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서울 새문안 교회를 세웠다. 그후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창설하였고, 교회 연합 운동을 지도하는 등 한국의 종교·문화·언어·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1858~1902)는 선교, 교육 분야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성서를 번역하고 각종 선교 잡지를 발행했으며, 1885년 배재학당을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매진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초창기 선교사들의 활동은 지금까지 서울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다. 그런데 최근 개신교계의 연구결과, 이들의 첫 기착지가 부산항이며, 부산에서 선교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는 2013년 3월 부산 중구 광복동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인근 썸지공원에 중구청의 동의를 얻어 '초기 선교사 입국기념 표지석'을 설치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첫 발을 디딘 곳이 부산항이란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표지석에는 '부산은 한국기독교 초기 내한 선교사의 기착지로서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에 중추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1890년대 초반부터 교회 설립뿐 아니라 근대학교 설립, 여성교육, 고아원 설립 및 구호사업, 병원 설립,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초창기 서양 선교사들은 대체로 미국(혹은 호주)→일본(혹은 중국)→부산항을 경유해 인천으로 가는 미션 루트를 밟았다. 부산이 첫 기착지였다는 것은 국내 최초 개항장으로서 부산의 입지와 초기 선교활동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알렌과 아펜젤러 등이 길을 열자, 1890년 이후에는 베어드, 매케이, 맨지스 등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선교 활동의 전개했다.



베어드 선교사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 ‘최초 교회’ 논쟁

부산 동구 초량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 주춧돌을 놓은 사람은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한 윌리엄 M.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선교사였다.

한국에 큰 호기심을 품은 젊은 베어드 부부는 1890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이듬해 1월 29일 부산을 거쳐 2월 2일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항구도시에 대한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베어드를 부산으로 파송시켰다.

1891년 9월 초 베어드는 미국공사 알렌의 도움으로 일본인이 모여 살던 영서현(현 코모도호텔 부근)에 세 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부산선교기지를 마련했다. 베어드는 1892년 4월, 이곳에 세운 선교사택(일명 옴니버스 하우스)에서 사랑방 전도를 시작했다. 한문서당도 문을 연다.

초량교회 측은 “베어드의 사랑방 전도가 초량교회의 모태이며 부산 최초 교회로 보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초량교회 120년사』에는 이같은 사실이 소개돼 있다.

동구 좌천동 부산진교회는 이와 약간 다른 주장을 편다. 1890년 부산에 온 베어드 선교사가 미국 공사 헤어드의 도움으로 부산진 지역에 약 80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한옥을 지어 그해 11월 한국인 몇 사람과 예배를 드린 것이 부산 시초라는 것이다.

부산진교회 측은 그 근거로 1931년 1월 15일 세워진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비와 맥켄지 부인에게 준 표상장 등을 제시한다. 기념비는 부산진교회 경내에 남아 있다.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량교회는 미국 북장로회가, 부산진교회는 호주 선교회가 관여해 발전시킨 것으로 본다. 부산경남 교회사를 연구해온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1890년대 초반 1년 상관으로 앞서거니 뒤

서거니 교회가 개척됐기에 최초 논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후 선교지 분할정책에 따라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대구로 옮기고, 호주 선교부가 부산·경남지역을 담당한다. 1889년 데이비드 목사(Devid)에 이어 1891년 10월 부산에 온 매카이 목사 부부와 미혼 여성 선교사 멘지스 등 5명은 좌천동 일원에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펼친다.

부산진교회가 기틀을 잡은 것은 겔슨 앵겔(G. Engel, 1868~1939)이 목사로 부임하면서다. 왕길지(王吉志)로 더 잘 알려진 앵겔 목사는 1900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 무려 38년간 선교와 교육,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앵겔 목사보다 앞서 부산에 들어온 호주의 매케이와 멘지스 두 여성 선교사는 한국 고아들을 돌보는 데 신명을 다했다. 멘지스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1893년 부산 최초의 고아원 '미오라'를 지었다. 1895년 소학교를 설립하고 고아 3명을 가르쳤다. 이 소학교가 부산 최초의 여학교인 일신(日新)여학교다. 부산진교회 교회 마당에는 멘지스와 무어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와 '왕길지 기념관'이 조성돼 있다.

동래중앙교회의 기독교선교박물관

선교사 미션 루트는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동래로 이어진다. 동래 중앙교회는 2013년 10월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을 개관했다. 단일 교회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이다. 이 교회의 안대영(박물관장) 장로가 평생 모은 다양한 교회사 자료와 지역사 사료가 전시돼 있다. 그 규모나 체제가 어지간한 공공박물관 뺄 정도다.

박물관은 한국관과 세계관, 지역역사관과 한국민속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빛'으로 표현해 △빛의 도래 △빛의 여정 △빛의 시작 △빛의 파장 △빛의 힘 등으로 주제화한 것이 돋보인다.

전시 자료는 대략 5,000여 점이다. 1911년 주기철 목사 약혼 사진과 외국 인학교에서 사용하던 매혜란의 성경 책, 한국 최초의 컴퓨터, 호적 변천사, 순명황후 국장장례식 사진첩(1904), 한문신약성경주석 완질본 1~4권(1916) 등 희귀자료도 눈에 띈다.

'100년 된 풍금'도 있다. 안대영 관장은 "호주 선교사인 앵겔 목사가 가져와 금정구 회동수원지를 거쳐 기장 철마교회로 옮겨진 사연있는 풍금"이라고 소개했다.

선교사 미션 루트는 남포동에서 시작해 초량교회-부산진교회를 거쳐 동래 중앙교회의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에서 마무리된다. 도시철도를 타고 한나절만 투자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와 교회사를 접할 수 있다.

범어사 11 암자길

범어사(梵魚寺)에 순례길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안다. 금정산 동쪽의 계명봉에서 꼭대기인 고당봉, 금정산성 북문을 잇는 커다란 트라이앵글 속에 11개 암자가 조화롭게 흩어져 있다. 범어사 11암자길은 비밀 아닌 비밀의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

범어사는 서기 678년(신라 문무왕 18)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사가 자그마치 1300여 년이다. 이곳을 경허, 성월, 용성, 동산, 성철 스님 등 한국 불교의 내로라는 선승들이 가부좌를 틀었거나 거쳐 갔다. 그래서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이란 큰 이름을 얻었다.



지도: 부산연구원 '부산의 순례길' 인용

범어사 11암자길 코스(약 12km)

도시철도 범어사역 ~ 범어사 옛길 ~ 지장암 ~ 계명암 ~ 청련암 ~ 내원암 ~ 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 ~ 금섬 ~ 미륵사 ~ 원효암 ~ 대성암 ~ 안양암 ~ 금강암 ~ 사자암 ~ 만성암

범어사 11암자길은 범어사의 또 다른 면모다. 이 길을 걸으며 금정산을 알고 불교를 배우며, 개인의 내면을 닦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지복이다.

부산도시철도 범어사역 5번/7번 출구에서 순례를 시작한다. 범어정수장을 거쳐 경동아파트 101동 앞에서 산속 오솔길로 접어들면 범어사 옛길이다. 범어사 옛길은 과거 동래부의 간선로인 황산도(黃山道, 일명 영남대로)의 지선이었다.



범어사 옛길가의 '금어동천' 석각

범어사 옛길은 운치가 그득하다. 대숲이 나오고, 석간수(참새미)가 기다린다. 길가의 금어동천(金魚洞天) 바위는 보기 드문 석각이다. '금어'는 금정산의 물고기, '동천'은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한다. 동래부 관리들과 범어사 스님들이 여기서 만나 교류했다는 말이 전한다. 바위면에 보이는 '정현덕'은 동래부사를 지낸 19세기 풍운아다.

금어동천 인근에 지장암(地藏菴)이 있다. 1900년에 창건된 수행 암자였으나 1982년 범어사 주지 지효 스님이 중창했다고 한다.

조금 더 오르면 비석골이 나온다. 범어사에 우호적이었던 정현덕, 홍길우, 조엄, 정현교, 장호진 등 조선 후기 실력자들의 공덕비 5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공덕비들이 이곳이 옛길임을 증언한다.

범어사 매표소를 지나 박물관 뒤쪽으로 들어가면 계명암 길 나온다. 계명암은 의상 대사가 계명봉 일대에서 절터를 물색하던 중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세운 절이라고 한다.



금정산의 가산리 마에여래입상

계명암을 돌아서 내려오면 청련암(靑蓮庵)이 눈앞에 나타난다. 절 입구 양쪽에 금강역사가 눈을 부라리고 서 있다. 청련암은 1709년 신주 대사(信珠大師)가 중창했다고 하며, 3·1 만세 운동 때는 항일 운동의 아지트 구실을 했다. 이곳은 금강영관(金剛靈觀), 즉 불무도의 본산이다.

바로 위쪽에 자리한 내원암은 성철 스님이 수양한 암자다. 1693년(숙종 19) 중창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내력은 알기 어렵고, 1982년 화재가 발생한 후 능가 스님이 중창 불사를 주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7년 3월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성철 스님은 그 해 원효암에서 하안거를, 이듬해 내원암에서 하안거를 했다.

고당봉을 향해 제법 가파른 극락골을 오른다. 고당봉 아래에는 가산리 마에여래입상이 낙동강을 굽어보는 천년 미소를 흠뻑리고 있다. 두손을 모으고 바라봐야 한다.

고당봉 아래 금샘(金井)을 거쳐 미륵사(彌勒寺)로 간다. 북문 세심정 앞에 미륵사 가는 안내판이 서 있다. 대웅전 격인 염화전(拈華殿) 법당 뒤엔 산더미같은 기암괴석들이 즐비하다. 강한 지기가 느껴진다.

원효 대사가 미륵사에서 호리병 5개로 왜구를 물리쳤다는 전설은 나그네의 귀를 쫓긋 세우게 한다. 의상과 원효의 족적은 범어사 11암자길 곳곳에 남아 있다.

금정산성 북문에서 범어사 쪽으로 600m쯤 내려가면 원효암을 만난다. 원효암 들머리에서 남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100m 정도 가면 '의상대(義湘臺)다. 경관이 장쾌하다. 먼 바닷가에 광안대교가 간명간명 걸려 있다. 원효암에는 성철 스님의 체취가 서려 있다.

원효암에서 범어사로 내려오는 길은 고즈넉한 오솔길이다. 바람소리 산새소리가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중간쯤에 '원효암'이라 적힌 'II'자 형태의 나무문이 랜드마크 구실을 한다. 철조망을 끼고 위로 오르면 북문이, 아래로 내려가면 범어사다.

범어계곡 암괴지대에서 한숨 돌린 뒤 대성암(大聖庵)을 찾는다. 대성암은 비구니 선원이다. 취규 대사가 1803년(순조 3) 금강암을 세울 때 대성암도 같이 중창했다.

안양암(安養庵)은 대성암 바로 위에 자리한다. 금강암(金剛庵)은 대성암에서 위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금강암은 모든 전각의 현판과 주련이 한글이다. 한글이 금강석처럼 말뚱말뚱 빛난다. 1899년 성월 스님이 금강암을 열고, 이듬해 안양암를 개설했다고 한다.

범어사 입구 등운곡을 지나 사하촌인 상마마을로 접어든다. 이곳에는 사자암(獅子庵)과 만성암(萬成菴)이 있다. 사자암은 이곳 지세가 웅크린 사자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관음전을 주법당으로 하여 사격은 간소하지만 기도객이 적지 않다. 만성암은 상마마을 끝단 금정산 숲속 들레길 제 1코스 입구에 있는 비구니 수행 도량이다.

범어사 11암자 순례길은 이렇게 끝난다. 산길 12km라 하루는 몽땅 투자해야 소화한다. 하산길엔 사하촌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거나, 파전을 구워 막걸리 한잔을 걸쳐도 좋겠다.

박창희 프로필

국제신문에서 약 30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했고, 경성대 신방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부산연구원 부산학 자문위원, 부산시사편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비온후·부발연, 2017), 『부산 정신을 세운 사람들』(해성, 2016), 『을숙도, 거대한 상실』(페이퍼로드, 2009), 『나루를 찾아서』(서해문집, 2006)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서구문명의 근원과 인간의 존재를 향한 지중해 여행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1.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 코르푸(Korfu) 섬

이제 배는 오디세우스의 가나긴 여정이 시작되는 그리스 코르푸 섬에 도착한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코르푸 섬은 사람의 마음을 달뜨게 한다. 8월의 눈부시게 푸른 하늘, 미세먼지 없는 공기, 에게 해의 편린인 아드리아해를 담고 있는 바다 내음.

만사를 제쳐두고 아킬레온 성(이제는 박물관이다)으로 향한다. 이 아킬레온 성에서 만나는 가장 인상적인 두 인물은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와 일리아드의 주인공 아킬레우스다. 아킬레온 궁의 3층에는 율리시즈 연작이 액자에 담겨있다. 로마의 율리시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현대판인 율리시즈다.

서사시 주인공으로서의 오디세우스가 보여주는 것은 고향 이타카,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향한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여정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해 중에 많은 여신들이 영생과 부귀를 약속하기도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고난에 찬 눈은 오직 이타카를 향한다. 피부로 와 닿는 부귀, 권세, 명예, 아름다움을 옆으로 밀어놓고, 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거슬러 가며, 에게해를 지나 이타카로 간다. 그런 여정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라면 한번은 거쳐 가야 할 여정인가?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벽면에 걸려있다면 아킬레우스는 조각으로 그 강렬함을 더한다. 성에는 두 개의 아킬레우스 조각이 있다.

먼저, '죽어가는 아킬레우스'.



죽어가는 아킬레우스

발바닥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느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전사 아킬레우스(앞 왼쪽 사진)를 보면 웬일인지 마음이 찢해진다. 앞에서 보면 아킬레우스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앵글을 돌려 옆으로 보면 화살로 인한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앞 오른쪽 사진). 그렇구나. 불사신 같았던 이 영웅도 결국 죽는구나.

하지만, 다시 걸음을 재촉하면 아킬레온 성이 위치한 산 위에서 코루프 섬을 내려다보는 한 전사의 거대한 입상을 만난다.



승리하는 아킬레우스

‘승리하는 아킬레우스’.

Command the view! 풍경을 지배하듯이 압도적인 모습이라는 뜻이다. 승리하는 아킬레우스 입상을 처음 볼 때의 느낌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낱, 역광의 조건이라 이 사진은 아킬레우스 입상이 가지는 아우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산 위에서 거대한 창과 방패를 들고 섬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신화 속의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전사(戰士)로 다가온다. 그 모습은 가히 바다를 호령하고 섬을 호령하고 군대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다.

아킬레우스,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의 주인공. 이러면 설명이 너무 간단한가? 왜 하필, 전쟁을 묘사한 일리아드가 그리고 그 주인공인 아킬레우스가 서구 문명의 기본 핵으로 작용해 왔단 말인가? 그 의문은 오래지 않아 풀렸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다.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에 열광하고, 선혈을 증오하지만 피가 낭자한 권투나 격투기를 보며 괴성을 지르고, 폭력을 증오하지만 폭력장면이 즐지은 영화에 지갑을 여는 그런 존재이다.

미국 시인 윌리스 스티븐스는 죽기 직전인 1955년에 호메로스적인 전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 있다. (알베르토 망구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세계적인 인문학자가 밝히는 서구문화의 근원』 p. 317)

“전쟁은 가슴 밖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 가슴 안에 서식하는 것은 질투, 미움, 공포, 그리고 악의, 그리고 야망이 있다. 하지만, 그가까운 곳에 사랑의 서식지가 있다.”

호메로스는 이런 인간의 전체적 속성을 자신의 서사시에 부여 담은 것이다. 두 눈으로 저 쪽빛 에게 해를 바라보며, 서구 문명과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며 다시 배로 향한다.

2. 인간의 존재 : 크레타 섬

크레타섬을 떠 올리면 나는 한 인간에 목을 맨다.

그의 이름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다. 질풍노도와 같은 젊은 시절 아주 우연히 『영혼의 자서전』이란 책을 접하게 된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 내용은 거의 다 잊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진군을 알리는 행진 나팔처럼, 아니 갑자기 시작되는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처럼 그 책은 소리 없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 중에서도 그 책의 서문에 적혀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기도는 내 혈관 속을 떠도는 백혈구처럼, 인생의 슬픔과 위기를 감지하지말자 백 배 천 배 올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기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활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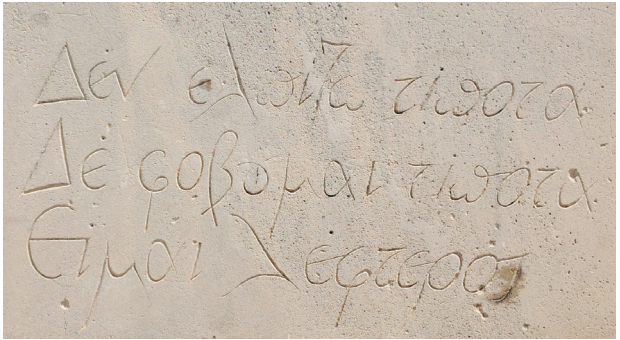
하느님, 하지만 너무 힘껏 당기지는 마소서. 제가 부러질까 두렵습니다.

하느님,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당기소서.

나를 사로 잡은 것은 이 중 세 번째 기도였다. 주님, 제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일을 하다 저 세상으로 산화(散花)한들 그게 무에 그리 대수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저와 계산, 망설임, 그런 회색 열정은 결코 열정이 아니고 삶을 불태울 그런 지향점, 목표가 없다면 인생은 인생도 아니다. 그런 열정, 그런 혼신의 던짐은 첫 사랑에 잠 못 이루는 풋내기처럼 나를 달뜨게 했다.

그는 불꽃이었고, 나는 그 불꽃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이었다. 그런 니코스의 무덤이 여기 크레타에 있는 것이다. 항구를 지나 여름날의 정취로 가득한 중앙 광장을 지나니 여행자를 사로잡는 이국적인 풍경이 시선을 압도한다. 코와 눈을 통해 올리브의 향기와 색깔이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 이름답지만 울창한 숲도 없는 이 크레타 섬에서 올리브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한다. 올리브의 향기와 색깔이 주는 유혹을 간신히 빠져나가면 수블

라키와 같은 음식 내음이 한동안 가슴을 괴롭힌다. 더운 여름, 땀이 솟구 치지만 더운 줄 모른다. 그렇게 걷기를 30분여, 거리는 여행자를 유혹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크레타 시민의 일상으로 접어든다. 그러다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무덤이 있다. (사진 참조)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익히 아는 그의 묘비명이다. 다시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감히 말한다. 이 정도는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정말일까? 인간으로서 이런 선언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는 자유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니코스의 저작을 읽을수록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나를 이끈다. 바로 그것이 아닐까? 자유를 향한 도정. 그래서 그가 최후로 자신의 영혼을 이끈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은 오디세우스였다는 것. 어찌면 자연스러운 결말이자, 결론일 수 있다. 니코스는 그의 유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인생의 길잡이로 삼은 사람은 인간 영혼을 안내한다는 위대한 세 길잡이 중 어느 누구도 아니다. 파우스트도 햄릿도 돈키호테도 아니다. 바로 오디세우스다. 나는 오디세우스가 탄 배의 한 선원이며 불타는 가슴과 무자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¹⁾

1) 향연 320-321

여기서 다시 오디세우스를 만난다. 코르푸 섬에서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를 보고 도대체 왜 서양 문명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빛을 지고 있는지 한참을 의아했는데, 층층이 쌓인 역사의 층에서 두 눈을 뜨고 발견한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오디세우스를 이야기한다. 아하 오디세우스.



산토리니 섬에서 가장 유명한 이아(도시 이름)

3. 에게 해

‘죽기 전에 에게 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니코스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던지듯이 한 말이다.

에게 해. 그 바다를 기억한다. 크레타 섬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을 보며, 그 무덤 너머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보며, 크레타 섬에서 산토리니 섬으로 가는 페리 안에서 페리가 가르스 그 파도를 보며, 그가 에게 해를 두고 한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 여름의 에게 해는 짙은 남색으로 출렁이고 있었는데, 그 남색은 사람을 홀리게 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나가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바다가 바로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를 향해 포세이돈의 방해를 뚫고 미친 듯이 나아갔던 바다였다. 그러니 에게 해는 오디세우스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바다이기도 하다.

그해 여름, 크레타를 떠나 산토리니로 향한 페리가 노란 햇빛의 환영 속으로 접어들 때 어디선가 한 마디 외침이 나와 저 에게 해로 번져 나갔다.

나는 자유다.



배에서 내려 산토리니 항구에 정박한 내가 타고 여행했던 크루즈 선을 찍은 것이다. 배경은 에게 해이다.

4. 보론 :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은 배 여행이다. 단순한 작은 배가 아니라 바다 위를 떠다니는 4성급 혹은 5성급 호텔 여행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오해가 있다. 하나씩 설명하자.

첫째, 매우 비싸다. 아주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발품과 손품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일반 여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성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쪽의 성수기를 끝내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시기, 크루즈의 비용 딱 떨어진다. 이것을 Repositioning (배의 이동)이라 하는데 눈썰미 좋은 사람은 이것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배만 타면 지루하다. 아니다. 배는 목적지를 오가는 과정에서만 타는 것이고,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소한 하루 혹은 이들의 여정이 허락된다. 도시를 이동할

필요 없이, 무거운 짐을 끌 필요 없이, 마음내키는 대로 흥분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 참, 목적지의 나이트 라이프(주점, 레스토랑, 공연 등)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조금 주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목적지를 오가는 바다 위에서 크루즈는 매일 멋진 공연을 한다, 그것도 무료로.

셋째, 나이드 사람만 가는 것이다. 역시 아니다. 아기를 동반한 젊은 부부, 커플, 가족 단위의 여행 등 매우 다양하다. 단, 크루즈의 행선지에 따라 그 크루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날 따름이다. 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먹는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크루즈의 일정동안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선 모든 식사는 무료다) 크루즈를 내릴 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 연안을 이동하는 크루즈를 이용해 여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선지의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

사족: 2020년 4월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유행병 때문에 외국 여행뿐 아니라 모든 크루즈 여행이 제약을 받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병이 극복되면 다시 이런 방식의 여행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항구도시의 경우 어느 정도 많은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느냐가 그 도시의 재정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의 경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크루즈가 부산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아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에게 해

5. 그리스를 떠나며

한 번의 여름과 한 번의 가을. 그 여름은 홀로 외로이 자신 속으로 마주했던 날들이었고, 그 가을은 그 여름의 추억을 그리며 그 여름에 가지 못했던 곳을 방문했던 날들이었다.

그리스를 떠나며 그리스의 두 신을 가슴에 품고 간다.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네, 바다를 지배하는 태풍과 바람의 신 포세이돈. 그래서 그 두 신의 청동 조각상을 여행자에게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산다. 각각, 아테네, 오디세우스와 산토리니, 헥토르가 그들의 영역이다.

그리스를 떠나며 이 두 신들 외에, 제우스를 비롯한 그 수많은 신들의 세계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들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리스를 처음 만났던 그 해 여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올랐고, 산티그마 광장에서 오랫동안 서성거렸지만 그 기억들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끝없는 경쟁,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그리스와 터키의 분쟁으로 연결되는데, 한 과객(過客)이 어찌 이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서구 문명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니, 주제넘은 행동은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이야기도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상은 아니다. 한 가지 가슴에 새기고 가는 것은, 이제 유럽 그 많은 나라의 회화, 조각, 소설, 시에서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 신들이 등장하는가를, 찬 물에 손을 담그면 차갑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는 알 것만 같다.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것은 수브라키의 내음이 그리워서도 아니고, 크레타의 올리브와 그 올리브 기름의 향기를 그리워해서도 아니고, 입에 감기는 미토스 맥주의 향훈을 그리워해서도 아니다. 아니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그 향기와 향훈이 가지는 매력은 사라질 것이고, 종내는 익숙한 김치와 라면과 불고기와 소주의 맛을 그리워할 것이다.

왜 다시 돌아오고 싶은가? 그것은, 꿈 속에서라도 보일만큼 내 영혼을 후려친 아킬레온 궁전의 '승리하는 아킬레우스', '죽어가는 아킬레우스' 그 조각들 때문이며, 포세이돈의 분노에도 굴하지 않고 그 먼 바다를 걸연히 건너려는 오디세우스 때문이다. 혈관 속에서 맥박 속에서 심장 속에서 이 아킬레우스의 영광과 슬픔, 오디세우스의 좌절과 환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있다. 에게 바다 때문이다. 그것도 8월 여름의 에게 해, 그 바다가 가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홀림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생각해 도 나는 영혼의 사이렌에게 사로잡힌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의 돛대에 제대로 잡아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스스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내 영혼의 한 쪽을 건네 줄테니 올리브 오일에 절이고 산토리니의 와인에 익혀서, 어느 맑은 여름날 산토리니 '이아'에 해가 질 때 그 칼데라 위로 높이 던져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영혼의 한 쪽은 에게 해의 먼 바다를 건너 코루프 섬의 아킬레온 궁전으로 달려가 거기서 아킬레우스의 영광과 고난을 쓰디 쓴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달래려 한다. 아는가? 그 에스프레소에는 달콤한 설탕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김기홍 프로필

산업연구원(KIET) 디지털경제실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여러 매체에 칼럼을 집필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전략적 협상』, 『제4차 산업혁명』 등이 있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의 움직임과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 마음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화 초대석 :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예술인-시민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에 매진”



“부산문화재단이 설립 10년을 넘기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시민들에게는 아직 존재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제 6대 대표이사는 “문화재단의 본분은 지역의 문화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9월 선포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의 비전도 ‘내 삶과 함께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미션은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1월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11년 동안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 대표는 이러한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부응하면서 자체적인 문화예술 정책 연구·실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대표이사 직속으로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2022년 이후 부산 문화예술 정책의 R&D 허브 역할을 하는 재단 부속 정책연구소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이자 유명 소설가로 필명을 날린 강 대표는 2019년 1월 부산문화재단의 수장이 됐다. 강 대표를 만나 부산문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문화 자치화 필요성 대두하면서 부산문화재단 2009년 설립

— 부산문화재단이 2009년 설립돼 11년이 지났습니다.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든다면?

강동수 대표이사(이하 강 대표) : 광역 시·도별로 문화재단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문화의 민주화, 자치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문화행정이 관 주도였지요. 문화의 자치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간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해 문화정책을 만들게 됐고, 부산에서도 2009년 1월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 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한 과제는 크게 △전문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생활 문화 진흥 △문화재단 자체 사업과 행사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이 연중 진행하는 사업·행사 프로그램이 45개입니다.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3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모 절차를 거쳐 창작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음악, 문학, 미술 등 9개 장르의 전문 예술인에게 연간 44억 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15억 원이 배분됩니다. 또 초·중·고 학교와 협업한 문화예술교육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체 행사로는 조선통신사 사업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일 공동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좀 더 짚어보면,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청춘마이크’를 43개소에서 165회 진행했고, 공연차(車)를 이용한 ‘달리는 부산문화’가 30회에 관람객수 2만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도 151회 실시했고요, 우리 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조선통

신사 역사관,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F1963 석천홀, 한성1918, 사상인디스테이션 등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창립 11주년을 돌아보면, 지난 11년 간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재단은 지역의 문화행정 핵심기관이란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의 생활문화 확산 등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감만창의문화촌 (사진제공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선포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2년차 임기를 보내고 계신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 대표 : 지난해 부임해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로 하고 9월에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전의 핵심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부연하면, 문화를 통해 빈곤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켜 보자는 것이죠. 즉, 문화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성취하는 중요한 기제(機制)나 도구로 삼아 보겠다는 게 문화의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 단순히 부산시가 만들어 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정책, 시대 요구에 맞는 꼭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재단 내부에 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지난해 9월 재단에 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정책 소식지도 만들고, 매년 연구 과제도 3가지 정도 수행합니다. 올해 연구 과제는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공간 재배치에 관한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한형석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부산이 낳은 선각자 먼 구름 한형석(1910~1996) 선생은 독립운동가, 음악가, 문화운동가로 크게 활동하신 분이죠. 올해 그분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평전 발간,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제작, 한중 국제 심포지엄, 중국과 부산 예술가들 간의 국제교류사업을 펼칩니다. 뮤지컬은 예산 2억 5천만 원을 들여 공모-제작 과정을 거쳐 11월께 부산문화회관에서 상연할 계획입니다.

이 기념사업은 한형석 선생이 광복군에서 활동한 항일 독립투사이자 1940년 중국 시안에서 전 3막의 항일 오페라 '아리랑'을 초연하는 등 한국 현대음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해방 후 부산 문화예술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본인에도 부산에서 그를 기리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자성에서 기획됐습니다.

다른 한 가지 역점사업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란 모토 아래 추진하는 '장애 예술인 창작 시스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4억 4천만 원과 시비 1억 원 등 5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집에 고립돼 있죠. 장애 예술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지는 취지에서 무용팀 공연, 전시회, 책 발간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 예술인들에게 집필 공간, 연습 공간 같은 창작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하나 더 보태면, 시민을 위한 인문학 사업 확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인문학 공부 지원 사업과 인문학 축제 개최 등이 포함됩니다.



감만창의문화촌 행사 (사진제공 : 부산문화재단)

문화의 지방분권 중요... 문화정책 수립 능력 키우려 정책연구센터 설립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문화 분야도 예외가 아닐 텐데, 문화분권과 연관하여 지방문화의 낙후 현상에 대해 진단해 보고 처방책을 제시한다면?

강 대표 :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지방자치 역사가 25~30년 되는 셈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영역과 비슷한 속도로 문화의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수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좌표 중 하나가 광역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의 문화적 압력, 삼투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앙정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의 문화정책은 여전합니다. 국가의 문화 예산, 인력 등 국가 문화자원의 지역 몫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여전한 과제입니다.

부산의 경우 흔히 문화 불모지라고 많이 하는데, 문화지표를 보면 불모지라고까지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는 부산의 문화 역량이 제일 크죠.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일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도 수도권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수직화, 계열화된 문화행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제 몫 찾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떨어지는 예산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받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 예산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시·도가 응모해서 선정되면 할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 문화정책 수립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산문화재단에 시·도 중 처음으로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도 예산 배분에 여

러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가 문화예술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습니다.

— 앞의 질문과 연관됩니다만, 부산이 한국 제2도시라고 하는데, 문화 분야에서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강 대표 : 부산이 제2도시인 건 맞지만, 지방 도시 중에서 어디가 문화 수준이나 역량이 더 낫다고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서울의 삼투압을 막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문화분권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부산에 시민 문화동아리 500여 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에 주력

— 부산이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려면,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대표이사 인사말에도 나와 있는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시민,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하는 열정적인 문화예술인’을 지향해야 하는데, 지금 부산의 상황을 진단한다면?

강 대표 : 흔히 문화예술을 전문가, 즉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시민들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창조하는 생활문화가 중심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생활문화본부를 두고 별도 예산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을 수동적으로 누리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댄스동아리, 문학동아리, 미술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 공연을 하고, 책을 펴내고, 전시를 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부산에는 시민 문화동아리가 500여 개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1월에 이들 간 생활문화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 영역을 부문별로 짚어보면, 먼저 영화의 경우 우리 재단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부산은 영화도시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영화도시’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영화제 도시’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화 산업 발전과 연계가 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사진제공 : 부산문화재단)

연극이나 미술, 음악, 문학 등의 부문은 수치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이 나서 청년 작가들 중심으로 해외 작가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태국, 캄보디아, 대만 지역 젊은 화가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젊은 화가들이 현지 작가들과 조인트 전시회를 연다든가, 반대로 홍티아트센터에 해외 작가들을 초청해 한두 달 먹고 자면서 작업을 하고 전시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교류가 미술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분야의 한·중·일 교류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조선통신사 사업으로 일본과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만, 중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형석 기념사업을 계기로 음악 문학 분야 중국 작가들과의 교류를 구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의 동반자 각인... 시·시의회, 문화의 자율성 확대에 더 관심을

— 부산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강 대표 :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재단이 창작 활동의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산문화재단이란 기관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스스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활동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문화재단에 시민들은 위한 수십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문화동

아리를 만들어 지원 사업에 응모한다거나 각종 행사에 더욱 활발히 참여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잘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리고,
문화예술 창조 작업도 하는 디딤돌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은 또 조선통신사 역사관,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F1963
석천홀, 한성1918, 사상인디스테이션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
1918은 생활문화 중심, 홍티아트센터는 국제교류 중심, 사상인디스테이션
은 청년문화 중심입니다. 이처럼 문화공간은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 재단 홈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합니다.
관(官)이 직접 나서지 않고, 문화재단 형식으로 민간 전문가 집단들이 문화
행정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이죠. 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서울
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줄이는 문화의 지방분권 개념도 필요하지만, 관과 민
간 간의 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이란 게 문화의 자율성, 독립성,
창조성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데,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더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문화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재단의 자율성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오늘 부산 문화와 부산문화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강동수 프로필

국제신문 논설실장 출신의 언론인이자 부산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한 소설가이다.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에 소설로 등단했고, 소설집 <몽유시인을 위한 변명>, <금발의 제니>,
<언더 더 씨>, 장편소설 <제국익문사>, <검은 땅에 빛나는>, 산문집 <가납사니의 따따부따>
등의 저서가 있다.

봉생문화상(문학부분), 오영수 문학상, 허균문학상, 요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병대 송월(주) 회장

대한민국 대표 타월 브랜드에 더해 신소재 복합체 전문 기업까지

“

타월은 송월타월!

”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송월타월은 1949년 창사 이래, 우리나라 타월의 역사를 써왔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대표 타월 브랜드로 당당히 발돋움했다.

송월타월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과 다양한 디자인, 친환경 타월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09년 111,000㎡(3만 3천 평) 규모의 베트남 공장을 지어 글로벌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월(주)은 우산 제조사업에서도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향토기업으로 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송월(주)의 선장이 박병대 회장이다. 박 회장은 꿈의 신소재인 복합재(Composite parts)를 생산하는 전문기업 송월테크놀로지를 설립,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열정을 쏟



송월 항공타월

고 있다. 복합재는 항공분야는 물론 철도, 해양, 레저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소재이다.

송월(주)은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재)부산대첩기념사업회 후원에 나선 것은 물론 부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농아인협회 등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 후원, 부산지역 내 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역 스포츠 선수 육성 등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행복을 전하는 기업, 함께 성장하는 기업, 기회의 기업

- 송월(주) 역사가 올해로 벌써 71년입니다. 수많은 향토기업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또 상당수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송월(주)이 부산권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뿌리를 탄탄히 내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타월 회사로 성장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박병대 회장(이하 박 회장) :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70여 년을 성장해 지금에 이른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월의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께서 송월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마음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대 회장님께서 처음 타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직원에 대한 사랑과 고객에 대한 신뢰” 라는 말씀을 토대로 삼아 송월타월공업사를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이후 회사 안에서는 직원을 대할 때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제품의 신뢰를 기본으로 했기에 지금의 송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송월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재를 키워 쓴다’는 인재 육성의 원칙을 통해 사원에서부터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쉽게 활용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송월의 내부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오늘날 송월의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제품기술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더하여 품질관리 부서를 회장 직속 부서로 개편하여 제품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 온 부분이 소비자들께서 “송월 제품은 다른 회사 타월과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지금 송월이 71주년을 맞이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1949년 회사 창립 이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였고 사람들이 거의 타월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타월이 없는 일상을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타월문화’랄까 ‘타월 라이프 스타일’을 정착시키는데 송월(주)이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보람도 크시겠군요?

박 회장 : 네, 송월이 처음 타월 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에는 타월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팡목’ 천을 타월 대용으로 활용하던 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룩된 것과 발맞춰 자동화 타월 직기를 통한 대량 생산의 적용이 지금의 현대적인 타월 사용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타월 문화를 송월이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월이 제품화한 바스타월이나 스포츠 타월 등은 국내 소비자 분들께 새로운 용도의 타월을 널리 알리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 종류의 실(사중)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와 색감을 활용한 타월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 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왔고, 또한 한국만의 독특한 선물(GIFT)문화까지 어우러져 송월이 타월문화 확산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은 소비자 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품질로 증명해온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회사의 기업문화도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월(주)의 기업문화를 소개하신다면?

박 회장 : 송월 구성원 전체가 무엇을 우리의 기업문화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저와 함께 몇 날을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저와 직원들이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송월의 기업문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월은 크게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기업정신 아래 △고객부분 : 행복을 전하는 기업 △사회부분 : 함께 성장하는 기업 △임직원 부분 : 기회의 기업 등 3가지 문화입니다.

고객에게는 행복을 드리고, 사회에는 성장으로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복을 전하는 기업”은 고객이 송월을 선택하는 믿음에 품질과 가치로서 보답한다는 의미이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은 친환경 제품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는 의미를 가지며, “기회의 기업”은 내부 인재의 육성을 통한 인재활용을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이 최고의 복지가 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송월(주) 본사

— 박 회장님께서 1997년 1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이후 회사를 크게 키우시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지으셨는데, 현재 송월(주)의 회사 규모랄까 현황은 어떠신지요?

박 회장 : 제가 송월에 처음 대표이사직을 맡을 때 송월의 연매출 규모는 약 370억 원정도였고, 송월이 창사 이래 가장 어려움에 직면(화의시행)한 때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데다 외부적인 경영환경의 급변을 겪으면서 역시 인재 육성이 사업의 핵심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육성에 나섰고, 그런 게 쌓여 현재 송월의 모습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헤쳐 나온 데는 지금 대리점 사장님들과의 신뢰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성된 인재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월의 내부 직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뛰어난 인재보다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힘쓰는 인재들로 가득하며, 일에 대한 자만보다는 성실과 끈기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많은 것 또한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설비의 현대화·표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크게 경남 양산시 유단공단에 위치한 송월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경남지역에 공장 3곳과 서울의 사무소, 그리고 베트남의 송월VINA가 크게 타월 사업 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월 단일 품목으로 송월의 외형은 현재 한국내 송월과 베트남 법인을 합쳐 연매출 1,200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경남 사천에 송월테크놀로지라는 탄소섬유 복합재료 항공기 부품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을 이을 산업이 항공산업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종합 항공기 부품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활용,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 2011년에는 복합재를 생산하는 송월테크놀로지(주)를 경남 사천시에 설립하셨는데, 지난해 10월에는 경남과학기술대와 산학협정도 체결하셨지요. 어떤 회사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 : 여러 분들이 타월을 만드는 송월이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송월테크놀로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을 초기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송월은 70여 년 동안 타월을 만들면서 실(絲)의 전(前)처리와 후(後)가공을 하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송월테크놀로지가 항공기 부품의 원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탄소섬유도 실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월과 전혀 다른 기술은 아니라는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이 자동차, 조선을 이어 미래의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습니다. 또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송월은 탄소섬유라는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월테크놀로지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복합재(Composite Part)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복합재, 앞서 언급드렸던 탄소섬유(고강도 신소재)를 활용해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또한 송월테크놀로지는 국내의 복합재 전문기업 중 드물게 일괄 생산이 가능한 기업으로, 원자재의 입고에서 적층, 경화, 표면처리, 트림, 제품검사(비파괴검사 포함), 도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복합재와 금속의 결합 부분까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복합재 항공부품 전문회사입니다.

계획 초기부터 보잉과 에어버스가 활용하는 장비 등을 기반으로 투자가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 및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의 발전에서 그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송월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소재 송월테크놀로지 내부

- 송월(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농아인협회 후원, 부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부산지역내 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역 스포츠 선수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박 회장님의 평소 철학이신지요?

박 회장 : 사회 기여 부분은 미력하나마 기업을 운영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정신의 한 축인 “사랑받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기업문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고객분들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되도록 힘든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적으나마 사회에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미력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박 회장님은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도 적극 후원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후원하게 되었는지요?

박 회장 : 부산대첩기념사업회는 세계 해전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승을 거둔 부산대첩을 시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역사적 유산으로 복원하고, 이순신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여, 품격 있고 건강한 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후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문화사업 :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부산시민의 결사항전·호국정신 재조명 △역사문화 복원 : 부산대첩을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 △시민교육사업 : 이순신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재조명하고 시민교육으로 활성화 △승전기념행사 : 부산대첩기념식(부산시민의 날) 및 축제, 부산대첩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낙담하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을 바탕으로 한 이순신 정신을 배워 익히도록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의 인성교육, 정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작은 이순신’으로 키우기 위한 이순신학교 설립 운영, 이순신 정신과 생애를 정리한 책자 보급, 부산대첩기념관 설립 운영, 이순신 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부분입니다.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 나라 경제도 어렵지만, 부산권역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향토기업 CEO로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박 회장 :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신사업을 열심히 찾고 투자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지역산업의 발전에 조금만 밑거름이라도 되기 위해 원부자재의 구매 등에 있어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 수록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송월타월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박 회장 :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간간이 들려오는 미담이 그나마 위안과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고 계신 송월타월 소비자 분들과 시민분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희망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고, 어려운 현실에 힘겨워하는 주변을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을 하면서 배운 인생의 진리 중 하나는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견뎌야 할 이유를 찾아내고 한발 한발 전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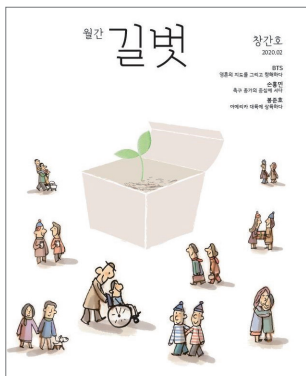
월간 '길벗' 창간발행인 안기성 목사

50여 년간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다



23년째 노숙인을 돕는 '거리의 천사들'을 이끄는 60대 후반의 목회자. 신학대 학생 시절부터 가난한 아이, 보육원 출신 청소년, 장애인, 탈북민, 노숙인을 위한 사역에 평생 몸 바친 개신교계의 '전설' 혹은 '그림자'. 지난 2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벗이 되기 위해 창간한 월간지 '길벗'의 창간발행인.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던 안기성(67) 목사를 이르는 말들이 다. 지금 안 목사의 근거지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앞한 떡집 2층 다락방. 이곳이 '거리의 천사들'의 거점이다. '거리의 천사들'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시내 10여 곳을 누비며 노숙인들에게 옷가지와 신발, 침낭, 초코파이 등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2,000여 명을 가리킨다. 50여 개 팀으로 꾸러진 그들은 저녁 시간에 이곳에 모였다가 노숙인을 찾아 출동한다. 낮 시간에는 이 공간이 잡지 편집실로 변신한다. '거리의 천사들'을 이끄는 안 목사가 2월호로 창간한 월간 '길벗'을 만드는 작업실이 되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먹고 자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에 하루 25시를 보내고 있다.



월간 '길벗' 창간호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 날로 쇠퇴하는 인쇄 매체, 그 중에서도 잡지를 창간한 건 무모한 용기가 아닐까. 안 목사는 “사실 월간지 창간에 반대가 많았고, 지금도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매일 잡지를 직접 손으로 받아보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체온으로 느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길벗’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잡지 ‘길벗’은 대학교수, 시인, 평론가, 화가, 언론인, 칼럼니스트 등 각 계각층 인사들의 재능기부에 힘입은 알찬 글들이 가득하다. 잡지 판매 수익금은 계절별로 장애인(봄), 탈북민(여름), 다문화 이주민(가을), 노숙인(겨울) 지원 활동에 쓰인다.

안 목사는 후원자-봉사자들이 천사요 주역이라며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사양해 왔다. ‘길벗’을 창간한 후 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게 처음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오랜 사역에도 불구하고 좀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 개신교계의 ‘전설’ 혹은 ‘그림자로 불린다. 그가 당시 인터뷰에 응한 것은 ‘길벗’ 구독자를 늘려 노숙인, 탈북민, 장애인을 더 잘 돕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먼저 지금도 매일 밤 길거리에서 노숙인들을 만나 상담하고 자립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하루 일정이 궁금합니다.

안기성 목사(이하 안 목사) :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주간사역자와 야간사역자가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하지요. 이 시간에 낮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밤에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합니다. 더불어 일하는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후 9시가 되면 뉴스를 보면서 야간사역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마치 천사가 찾아오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손편지, 양말, 간식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에게 전하는 선물

그 후에는 손편지를 쓰고 지원 물품을 생분해 비닐에 담아 준비하고 11시 30분 정도 되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밤늦게 나가는 이유는 거리 노숙인들 대부분이 지하철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끝나고 지하철이나 공원 등지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거리 노숙인들이 대략 5백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희망을 나누는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둘러보며 다니는 곳은 서울역,

용산역, 남대문, 순화공원, 시청, 광화문, 충정로, 한국은행지하도, 을지로, 고속터미널, 강남역, 잠실역, 동대문 등인데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자리 잡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간사역이 모두 끝나고 봉사자들이 돌아간 후에 봉사활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마무리를 하고 나면 새벽 4시쯤에 잠이 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에는 쉬고 점심 식사를 한 후부터는 월간 길벗 잡지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매일 매일 원고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해서 출판을 하는 뿌듯함을 맛보게 된답니다.

— 월간 길벗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특별한 잡지라는데, 발행인께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목사 : 1960~70년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저는 그 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시절 그곳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빈민 사역을 시작했고, 1983년 신학대학원 졸업 후 대구 침산동 관자촌에서 보육원 출신으로 공장에 다니던 청소년·청년들과 ‘달구벌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지냈습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3D업종 등에서 고달픈 생계를 이어가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다문화 이주민의 답답한 처지를 상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거리의천사들’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거리로 달려 나가 실직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외중에 풍을 맞고 몸이 마비가 오는 장애를 세 번쯤 겪으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다시 매일 밤 봉사자들과 함께 거리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상담하면서 주거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노숙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그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안 목사 : 1970년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이 빈민 지역과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았으며,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특별한 삶을 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일반

적인 경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평생 가난한 목회를 하셨고, 장로회신학대 은사이신 주선애 교수님(현 명예교수)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빈민 지역에 가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지요. 이 활동을 50여 년 가까이 계속하게 된 원동력은 이분들의 영향이 큼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나 하면 집중해서 하는 성격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 봉사활동에 나선 안기성 목사(오른쪽 앞줄 첫 번째)

— 젊은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을 꾸준히 해오시고 그 과정에서 풍도 맞고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후회는 없으신지요?

안 목사 : 후회라기보다는 늘 부족함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요. 좀 더 잘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 슬쩍 얼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망하지 않고 그들 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쳐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정말 고마운 천사들이지요!

— 인터넷과 SNS 시대를 맞으며 인쇄 매체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월간지 '길벗'을 창간하게 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안 목사 : 매월 잡지를 받아보면서 직접 손으로 만지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체온으로 느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안 될 거라며 염려해 주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며 독자들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길벗이 되자'고 하면서, 지난달

에도 말기 암 환자 한 분이 마지막으로 길벗이 되고 싶다며 거금을 내놓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시죠? 그 시절 기억 중 가장 오래토록 생각나는 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목사 : 부친께서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한국전쟁 전에 울릉도 선교사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본적도 독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울산을 거쳐 부산으로 오셔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지를 못해 1년 가까이 박스 만드는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 다음해 중학교로 갔던 기억이 뼈아프게 남아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월간 '길벗'이 많은 사람을 길벗으로 만들어 함께 손잡고 가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안 목사 :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이웃 간의 터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우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월간 길벗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로 곁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들에게 월간 길벗 판매수익금을 지원하려고 하오니 직장에서 한 권씩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구독 신청 010-2000-0577

월간 '길벗' 홈페이지 www.gbmagazine.kr

글 : 유태영 월간 '길벗' 객원기자

안기성 프로필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B.A) &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미국 매코믹신학원 목회학박사(D.Min)를 받았다. 청계천 뚝방마을 빈민아동교육 봉사 활동, 대구 빈민지역 '달구벌공동체' 설립, 노숙인과 다문화이주민 상담지원활동 '총회상담소' 소장,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함공동체' 설립, 거리노숙인 자립지원 봉사단체 '거리의천사들' 설립,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월간 길벗 창간발행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삶을 살아왔다.

김영환 한국정책공헌연구원 이사장

“공직생활 노하우와 경험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터”

“

공직 생활의 노하우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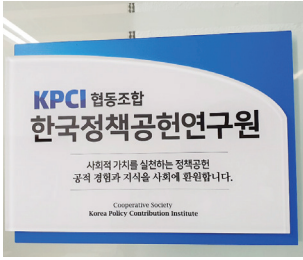


부산지역 퇴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 한국정책공헌연구원이 설립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원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형 정책공헌 전문연구원으로, 지난해 4월 4일 부산 동서대학교 전자정보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김영환 이사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 퇴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데, 협동조합 형태라 이색적이군요.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까?

김영환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 2017년 경제부시장 재직 때 부산시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육성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하였고 이해도 부족한 때였습니다. 주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종합계획을 마



한국정책공헌연구원은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정책 전문 연구원이다.

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바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입니다. 영리추구 목적의 주식회사와 비영리적 활동을 표방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절충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 때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취업과 창업에 대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만 당시 창업을 더욱 강조하다 보니 때론 취업준비생들에게 항의도 받곤 하였습니다. 취업이 급한데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웃음) 어쨌든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경험을 쌓아 창업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대 초 핀란드의 GDP의 1/4을 차지하던 글로벌 기업 노키아가 침몰한 후 핀란드 경제를 되살린 헬싱키 소재 알토대학교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슬러시라는 창업 컨퍼런스를 통해 창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창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공적인 장소에서 은퇴하면 창업하여 미력이나마 지역 청년 고용에 보탬이 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 흔히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 생활을 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사회 공헌과 나눔 활동에 나서겠다는, 대단합니다.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오.

김 이사장 : 공무원이 퇴직하면 연금으로 얼마나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든지 하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평생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퇴직 후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 대한 기여나 공헌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조합이지만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노후에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지는 거지요,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청년고용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 조합의 정관상 설립목적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행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를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공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아닌 굳이 협동조합형 연구원을 만든 이유는 영리 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되, 오히려 비영리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나 공헌을 실천하지는 것입니다. 퇴직 공무원이 무슨 돈을 벌자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임원은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조합으로부터 급여도 4대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활동하다 더 이상 신체적으로 사회활동이 어렵게 되면, 후배 퇴직 공무원들이 우리의 뒤를 채워 세대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없지요.

— 연구원의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또 연구원 운영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시는지요?

김 이사장 : 우리 연구원은 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교통, 토목, 도시계획, 건축, 도시재생, 경제산업, 보건복지, 환경, 산림녹지 등 공공정책과 행정 전문가를 확보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정식 개원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대하여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퇴직공무원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기관은 적은 비용으로 목적하는 최상의 연구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여 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연구원 운영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적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민간분야 싱크탱크로 도약 꿈꿔

— 연구 사업을 하려면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김 이사장 : 최초 설립 당시 3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하여 1년 4개월여 지난 지금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공무원 28명, 기업인 4명, 교수·전문가 11명,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금융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소한 개념입니다만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조합의 대표자인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이사장은 그분들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현재 원장과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용역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조합원분들은 퇴

직 전 일했던 주요 전문분야별로 네다섯 분이 연구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지원합니다.

원장과 선임 연구위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조합원분들은 박사가 14명, 기술사 5명, 특급기술자 10명, 행정사 5명 등이며 각종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위원회 위원, 국토·도시계획,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회조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 연구원이 협동조합 형태인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공헌연구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김 이사장 :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조합원들이 모여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처럼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태만 비영리단체로 만들어 유명무실한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자립형 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조합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영리추구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면 조합원 수가 늘어 책임져야 할 분이 많아 어렵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점이 없는 기업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합을 결성하여

일반적인 물품제조나 판매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공헌연구원은 지난해 7월 정기총회와 현판제작 등 공식개원식을 개최했다.

— 본격적인 활동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든다면?

김 이사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이나 사회활동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본인의 건강만 허락한다면 언제까지나 활동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을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정식 개원하여 하반기 6개월간 4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수입금으로 동서대 학교발전기금 300만 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연말연시 기부)에 100만 원을 기부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더욱 노력하여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부와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적 기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에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연구원이 민간 분야의 싱크탱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사장님은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김 이사장 :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직업 공무원은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관료라는 용

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후배 공직자들이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지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행정은 정치권, 그러니까 입법부와 대등한 협조의 한 축으로서 소신 있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민간 영역이 공직사회보다 앞서 나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직이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역량을 끊임없이 배양하여 민간을 능가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결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무엇입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라고 이야기하려면 ‘정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공직자가 그래도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언론의 끊임없는 감시와 내부 직무 교육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직업관료가 아닌 분들이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정의’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자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영환 프로필

부산시 환경녹지국장, 창조도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경제부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협)한국정책공헌연구원 이사장, 부산대 특임교수, 동서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홍조근정훈장(2012)을 받았고,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주관(2010-2012) 3년 연속 베스트공무원에 선정돼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저서로는 『환경정책강의』(2017), 『환경정책 4.0』(2018), 『다산과 추사를 따라간 유배길』(2019)이 있다.

新 산업혁명의 시대, 부산-후쿠오카의 새로운 협력 방안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제14 부산-후쿠오카포럼 행사 소개 전문

제14차 부산-후쿠오카포럼이 지난 2월 15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후쿠오카에서 한 일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열렸다. 장제국 동시대 총장 사회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두 도시의 포럼 회원 28명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세부 주제는 '100세 시대와 미래', '부산-후쿠오카 스타트업의 현황' 두 가지였다.

'100세 시대와 미래' 주제에는 부산 측 구정희 은성의료재단 이사장이 '100세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일본 측에서 큐보 치하루 규슈대 총장이 '인생 100년 시대의 일-한 해협권을 구상한다'를 발표했다.

'부산-후쿠오카 스타트업의 현황' 주제에는 부산 측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新 산업혁명의 시대, 부산-후쿠오카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일본 측 마에다 츠네아키 스미모토상사규슈주식회사 사장이 '부산-후쿠오카 DX 및 스타트업 현황'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배수현 연구위원의 발표 자료를 여기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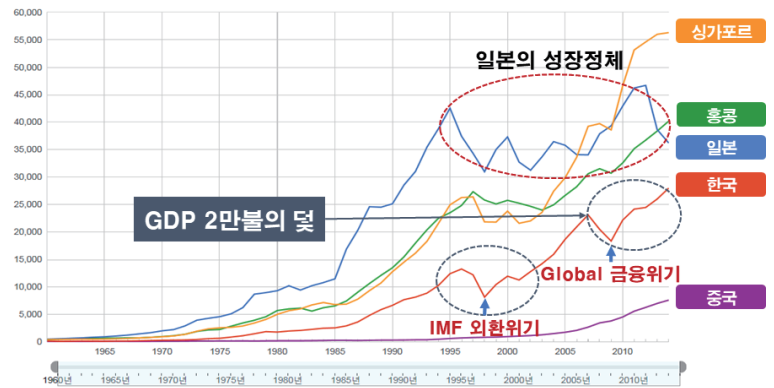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두 도시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한일해협 경제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6년 양측의 각계 민간 대표들이 모여 만든 민간 주도 협의체로,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한 해씩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해 왔다. (장지태)

들어가며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인접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한때 '아시아의 용'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여전히 취약하다.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간 2만 달러의 뒷에 빠졌다. 2018년 환율 등으로 인해 간신히 3만 달러를 넘었으나 뉴노멀(New Normal)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저임금, 저출산, 저금리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정상화인 뉴노멀이 일상화됨에 따라 경기 부흥은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던 불황이 20년을 넘어 30년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턱걸이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럼 우리나라는 예외적일까?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사회 패턴은 일본을 많이 닮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일본과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력 감소다. GDP 4만 달러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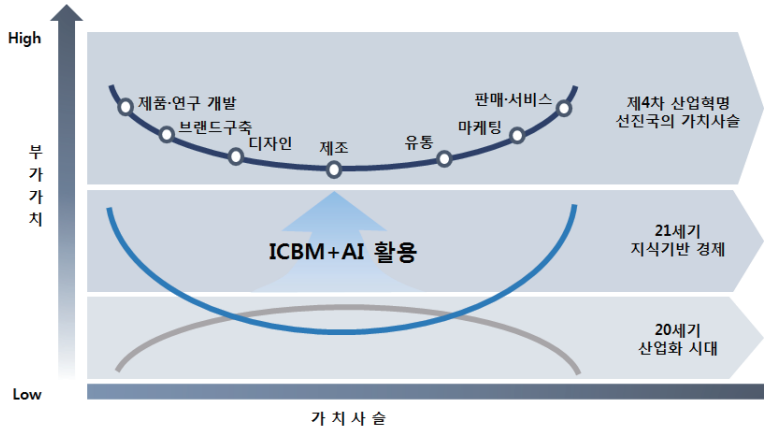
<그림 1> 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 추이



자료: The World Bank(data.worldbank.org)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확산,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스마트 기술이 제조업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제조업이 스마트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제조 기업이 서비스도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자산이 산업을 선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제조업만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어렵다. 가치사슬별 부가가치를 보여주는 스마일 커브에서도 ICT 기술의 활용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등 지식기반 산업과 마케팅, 판매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상품이 주를 이루는 지식 집중(knowledge-intensive) 교역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반면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제품의 글로벌 경쟁은 상대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야흐로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경제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그림 2> 4차 산업혁명의 가치사슬상의 스마일커브 업그레이드



자료: 산업연구원(2017)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반도 국가이나 실질적으로는 섬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 시대라는 큰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내수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 우리가 글로벌 교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과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가장 활발한 교역의 대상국이나 정치·문화·체제의 차이, 외교 문제 등으로 인해 밀접한 파트너십의 형성이 어려운 반면 역사적·외교적으로 불편한 사이이나 일본의 경우 관계 형성은 용이한 국가이다. 특히 부산은 후쿠오카시가 포함된 규슈와 인접한 도시로 초광역 협력이 가능한 대표적인 도시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산업·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산업 집중에 대응하여 우리만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의 시장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도시간의 외교는 국가 간 외교와는 결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신뢰에 기반을 두는 민간 교류가 지속될 경우 국가 간의 갈등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과 후쿠오카의 협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이 처해있는 다양한 경제·산업·사회적 문제들도 두 도시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부산과 후쿠오카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부산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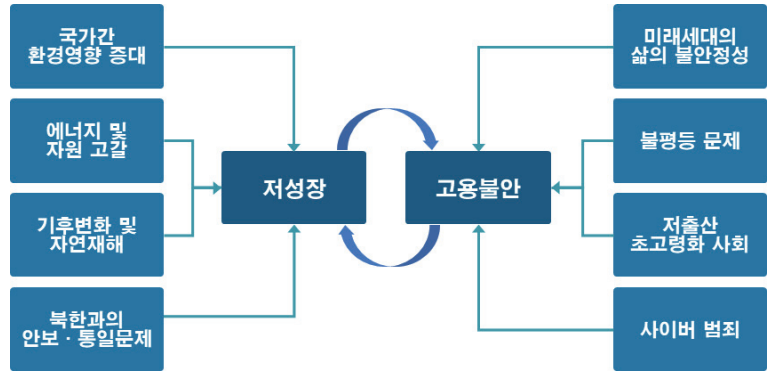
1) 새로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확산

(1) 비정상의 정상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최근 가장 널리 알려진 키워드가 '뉴노멀'이다. 뉴노멀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률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의 정의로 사용된다. 과거의 사회 체계와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체계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비정상의 정상화인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저성장·고용불안이다. 저성장은 국가의 혁신체계를 약화시켜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남북협력 등 다양한 국제·국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더 큰 문제는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로 하므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 확대가 어렵고 이는 혼인을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부산의 경우도 청년층의 이탈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자리 부족이다. 부산에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의 변화가 필요한 데 반해 부산의 산업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¹⁾'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ICT, 콘텐츠 등 소프트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데 반해 부산시의 일자리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전통 제조업과 저부가가치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이어지기 위한 것이다. 500만을 바라보던 부산의 인구는 2016년 350만 선이 무너졌고 이제는 300만 선을 못 지킬까 걱정하고 있다. 부산지역 인근 도시에서 일자리를 위해 몰려들었던 부산의 영화(榮華)는 전통 제조업의 침체와 함께 과거의 빛으로 사그라져 버렸다. 뉴노멀 시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면 제2의 도시 부산은 사라질 것이다.

1) 닐 하우,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출간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킨다.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3> 뉴노멀 시대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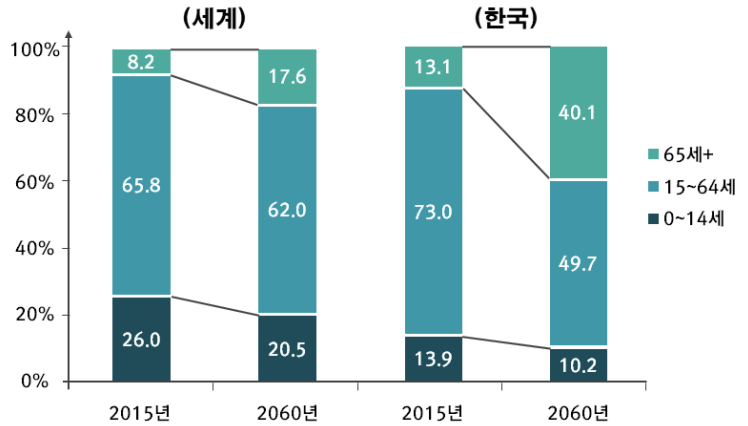
자료: 이광형 외(2016),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뉴노멀 시대의 저성장·고실업률 등 경제적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직결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일반적으로 15~64세의 인구로서 경제활동의 참여를 통한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산업적으로는 중추적인 계층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생산성의 저하뿐 아니라 세입의 감소를 유발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조세 체계가 유연하게 돌아가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를 통한 사회의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선순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생산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로봇 등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반면, 현재의 조세제도를 토대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출산을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규모의 확보와 함께 신기술을 적용한 생산력 확대를 조세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법적인 제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부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 증대로 인한 사회복지 확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증대를 통한 일자리 복지가 이뤄질 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림 4> 생산가능인구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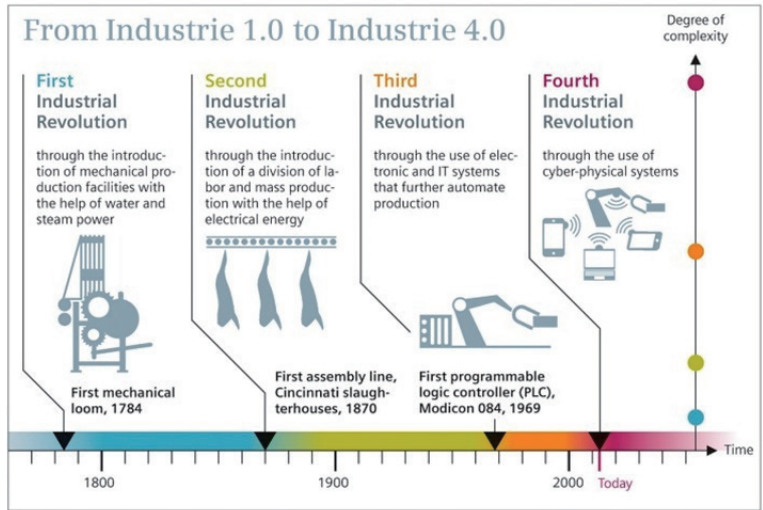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이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은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변화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간의 산업혁명과는 결을 달리한다. 증기기관, 전기, 자동화기기 등에 의해 진행된 1차~3차 산업혁명은 유형의 혁명인데 반해, 4차 산업혁명은 무형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초연결)'되고 '데이터가 지식(초지능)'이 되는 '디지털 융합(초융합)'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스마트 혁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新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상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디지털 지능으로 변환(Digital Transformation)'되는 디지털 경제의 시대를 지향할 것이다.

디지털 변환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성장동력들은 공간적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물류인프라의 우위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면, 디지털 변환의 시대는 어디에서나 창업이 가능하므로 공간적 장점으로 시장 경쟁력을 접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역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극체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이 판교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이를 대변한다. 부산은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강점을 살린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5> 산업혁명의 진행 추이



자료: DFKI(2011)

(4) 스마트 세상으로 빠르게 진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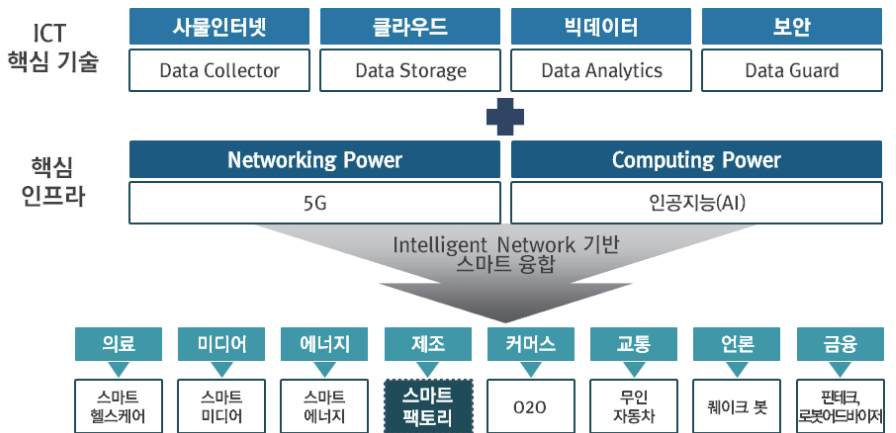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세상으로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기술 등 주요 ICT기술에 5G 통신과 인공지능 인프라가 결합되어 스마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스마트한 세상은 우리가 가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문제로 인한 생산력 감소 등도 해결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기술의 확산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보 접근성의 확대를 통해 누구나 제대로 된 지식을 공유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적 장애인이 스마트 기술로 듣고, 보고, 움직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의 격차와 무관하게 동등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정보의 독점을 통한 부의 축적은 줄어들 것이다. 누구나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을 하고 소비의 편의성을 증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부의 축적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과 법적인 제도가 스마트해져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민 누구나가 제대로 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정보 접근성과 활용 기회를 갖도록 법적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스마트 기술의 확산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겠지만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불편한 진실도 만들 수 있다. 스마트 머신이 육체노동뿐 아니라 지적 노동도 대체 가능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기회를 살려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초기인 현재는 과도기적 시기로 일자리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예로 오프라인 판매가 주었던 자영업의 경우 배달앱이 생기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문배달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자칫 일자리가 줄어들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일자리 감소도 실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으로 인해 제품을 가공하던 생산인력이 자동화 공정을 운영하는 엔지니어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을 빠르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補修教育)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교육도 함께 제공될 때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스마트 제조혁신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그림 6>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융합 개념도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7) 재구성

2) 부산 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IT 시장의 주도권 상실

30년 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상위 12개 기업 중 8개였던 일본 기업이 2018년에는 전무하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12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10위권 내에는 미국과 중국 기업만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지 못하여 미국과 중국에 추격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로 선두인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강점과 함께 기업의 업종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ICT 중심의 신산업 시대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서비스 분야일 거라 추측해 본다면 현재의 기업 순위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도 순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맞게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점 산업의 육성이 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1> 30년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변화

(단위 : 억\$)

| 순위 | 1989년 | | | 2018년 | | |
|----|----------|---|-------|---------|---|-------|
| | 회사명 | 국가 | 시가총액 | 회사명 | 국가 | 시가총액 |
| 1 | NTT |  | 1,638 | 애플 |  | 9,269 |
| 2 | 일본흥업은행 |  | 715 | 아마존 |  | 7,778 |
| 3 | 스미토모은행 |  | 695 | 알파벳(구글) |  | 7,664 |
| 4 | 후지은행 |  | 670 | 마이크로소프트 |  | 7,506 |
| 5 | 다이이치칸교은행 |  | 661 | 페이스북 |  | 5,415 |
| 6 | IBM |  | 646 | 알리바바 |  | 4,994 |
| 7 | 미쓰비시은행 |  | 592 | 버크셔해서웨이 |  | 4,919 |
| 8 | 엑슨 |  | 549 | 텐센트 |  | 4,913 |
| 9 | 동경전력 |  | 544 | JP모건 |  | 3,877 |
| 10 | 로열더치셸 |  | 543 | 엑스모빌 |  | 3,441 |
| 11 | 토요타자동차 |  | 541 | 존슨앤존슨 |  | 3,413 |
| 12 | GE |  | 493 | 삼성전자 |  | 3,259 |

자료: WEEKLY BIZ(2019)

(2) 부산, 과거 한국의 산업화 선도

부산은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을 선도한 도시로 한국의 수출을 선도한 산업화 전초기지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 현재는 역외로 이전되었지만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부산에서 출발하였다. LG화학(47년), CJ제일제당(53년), LG전자(58년) 등이 부산에서 출발하여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였다. 여전히 부산이 제조업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는 GRDP의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는 구조 고도화에 실패함에 따라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실기(失機)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부산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것이냐, 그냥 그러한 2류 도시로 남을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다양한 대내외 트렌드 변화에 적절한 대응만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경제·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부산 경제·산업의 어제와 오늘



(3) 부산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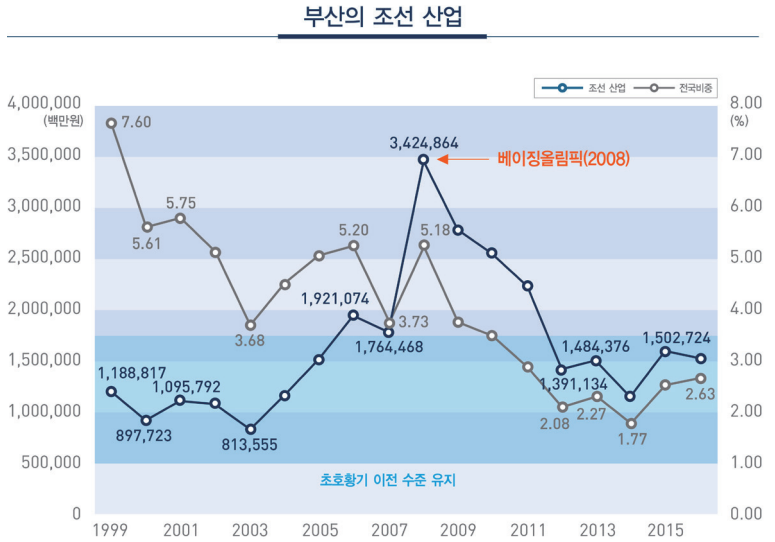
부산의 대표적인 제조업은 기계부품소재 산업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이 부산의 주력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산의 제조업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조선기자재의 경우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 활황이던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잘못된 시장 전망이 한몫하였다. 북경 올림픽 준비로 인한 국가 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를 시장의 확대로 해석하여 선박수주량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가 강세로 인한 대체 분야로 해양플랜트 산업의 활성화를 전망하여 앞뒤 안가리고 시장에 뛰어듬에 따라 수익구조 붕괴된 것이 또 다른 영향 인자로 볼 수 있다. 해양플랜트를 제외한 선박의 경우 북경 올림픽 이전의 수준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으나 이미 투자된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경제를 주도할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산의 조선기자재 산업이 글로벌 시장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여건과 함께 메이커의 동향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이는 부산의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부분에 비해 자동차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다수가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실정으로 현대차의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성장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2013년 현대차의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을 때 부산지역 자동차 산업도 함께 하락하였다. 이러한 성장 하락이 우려되는 것은 메이커의 회복 속도에 비해 지역 부품기업의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시장의 특수한 지배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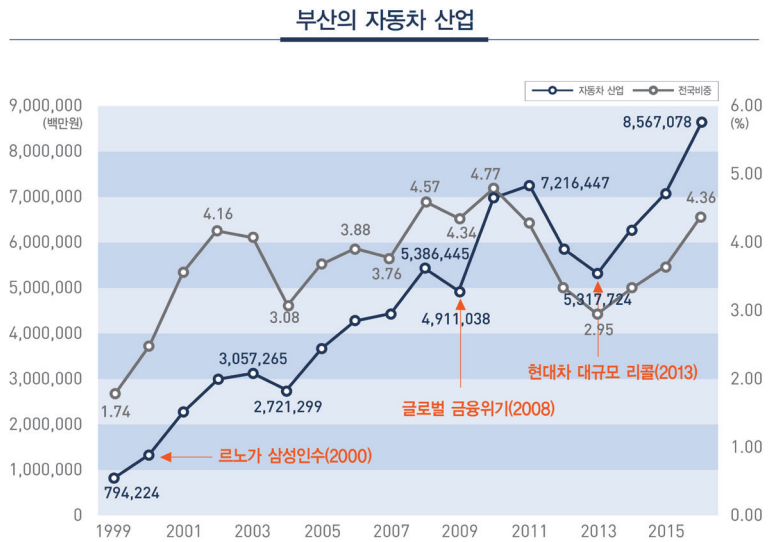
최근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친환경 수송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는 등 수송기기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신제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예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엔진차의 30% 정도의 부품만으로 완성되므로 과거와는 다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선박의 경우도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한 LNG선박과 같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내외적 트렌드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제조업을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지금의 제조업 수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그림 8> 부산 조선산업의 매출액 추이



<그림 9> 부산 자동차산업의 매출액 추이



(4) 부산, 신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부산의 산업생태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가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로 옮겨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송기기에 사용되던 내연기관이 모터로 바뀌는데, 이는 기계산업이었던 수송기기가 전기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원의 변화는 구동기관뿐 아니라 소재의 변화도 유도한다. 금속에서 경량

소재인 탄소, 티타늄 등의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신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와 같은 친환경 기술·산업 생태계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1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반의 전환

| 구분 | As Is | ➡➡ | To Be |
|-------|----------|----|--------------------|
| 사용 연료 | 화석연료 | ➡➡ | 친환경 연료(전기, 수소 등) |
| 구동 기관 | 내연기관(엔진) | ➡➡ | 전동기(인버터, 모터 등) |
| 주요 소재 | 금속 중심 | ➡➡ | 경량소재 중심(탄소, 티타늄 등) |
| 생산 공정 | 자동화 시스템 | ➡➡ | 스마트 팩토리(추진중) |

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부산은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키는 전략과 키우는 전략이 그것이다. 부산은 대도시의 특성상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대략 2대 8 정도로 서비스업의 규모가 큰데, 문제는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서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의 제조업도 중소기업 중심이나 자영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 창출력을 고려할 때 부산의 제조업은 최소한 지금의 규모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

대내외적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금의 제조업 생태계로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 부산의 제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제조혁신과 신제조업 육성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제조 공정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조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산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부산형 신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주력 제조업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갈등으로 불거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부산의 제조업도 신소재부품 분야를 특화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부산의 산업은 소재부품에서 시작하였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도 완성품보다는 소재부품에 특화된 기업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산

업사(史)로 인해 가공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능인력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이를 활용한 신제조업을 육성할 경우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최근은 산업 트렌드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산에 특화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3S(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창업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며, 기능은 스마트화 될 것이며, 제품의 형태는 무형의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3S 분야의 창업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신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며, 장기적으로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야들은 기존의 기업들이 아닌 신생 창업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시는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은 미흡하므로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11> 부산의 산업 육성 전략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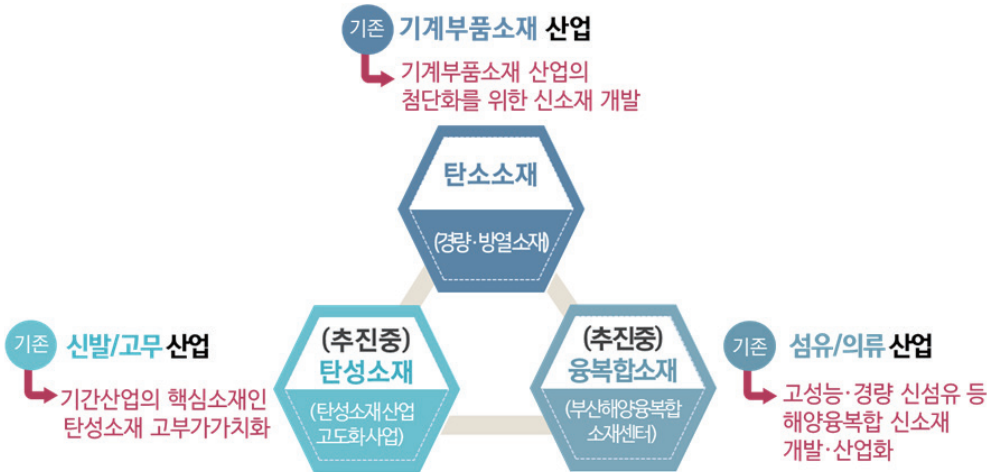
지키는 전략 >>> 주력제조업 고도화 → 스마트 혁신, 신제조업 육성
 키우는 전략 >>>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 3S(SW, 스마트, 서비스) 창업



① 新제조업으로 첨단 신소재 육성

본고에서는 부산의 신제조업으로 첨단 신소재 육성을 제안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첨단소재인 ①고기능성 고분자 소재, ②경량화 소재, ③탄소섬유와 같은 신소재를 부산의 새로운 제조업으로 우선 육성해야 한다. 세 가지 소재 중 고기능성 고분자 소재와 경량화 소재는 국가사업 유치를 통해 관련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의 제조업을 견인할 새로운 소재산업의 육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가장 폭넓게 활용 가능한 탄소 관련 소재에 대한 사업은 그간 추진한 사례가 없다.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중복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로 인해 전북 전주와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원소재 생산과 성형분야를 특화해 육성해 오고 있다. 반면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수요시장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산업의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동남권이라는 거대한 수요시장을 품고 있으며, 가공 기술에 대한 오랜 노하우가 있어 탄소기반 신소재 가공산업의 육성의 적지라고 생각된다. 특히 수송기기 분야에서의 탄소소재의 활용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탄소소재를 부산의 신제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역적 중복성도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복합 성형 분야의 특화로 해소할 수 있다. 실제 부산의 제조업에서 수요될 소재가 복합소재이므로 타 지자체와의 중복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신소재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면 소재 자체의 신시장 창출뿐 아니라 부산의 향토산업인 기계부품소재, 신발/고무, 섬유/의류 산업의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신제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② 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

제조업의 현상유지와 함께 부산 경제의 미래를 주도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금융, 해양 R&D(Research and Development)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체질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부산의 도시 이미지는 이벤트, 축제를 제외하면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관광 외에는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의 배경은 부산에는 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부산의 산업을 잘 아는 분들은 '부산에는 없는 산업이 없다'라는 말들을 자주한다.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풍부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개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블록체인을 규제자유특구의 대표 분야로 유치하여 육성 중에 있다. 기 유치된 금융 분야의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부산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꿈틀대는 정도로 산업으로 자리 잡기에는 보다 다양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한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新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창업거점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센텀시티, 서면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부산역 등 신규 창업지역으로 확대하여 창업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13> 新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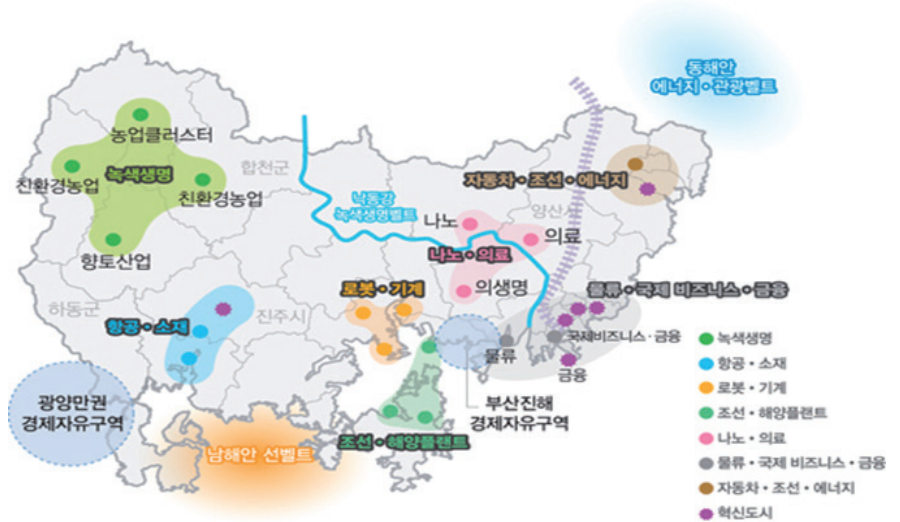
(5) 수도권에 대응한 부산의 광역협력권 중추기능 강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성장하였고, 현재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모든 혁신자원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언제부터 사용된 지는 몰라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이렇게까지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이 이렇게나 불균형해도 지속가능할까? ‘균형’은 사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로 매우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인 반면, ‘일극’은 ‘한쪽 끝. 또는 한 극단’으로 매우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이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단지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토의 균등한 활용이나 인프라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도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동남권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거점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동남권 지역은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남권의 위기의 지역이 되고 있다. 중후장대형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동남권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도미노적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강화와 함께 동남권 지자체간 협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과거 제조업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산업적 연계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 질서에 따라 인의적인 연계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울·경 3개 지자체는 시·도별 기능을 특화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동남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을 통한 지역 간 특화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간 특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남권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위해 부산은 중추기능 강화를 통한 동남권 허브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경남과 울산의 생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 외에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같이 부·울·경 접경지역에 공동 존(zone)을 조성하여 협력사업이 원활하도록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의 빠른 구축으로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동남권의 협력이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동남권을 넘어 국가 간 협력체계인 초광역 경제협력권의 구성이 절실하다. 동남권의 주력제조업은 중국, 일본과 공급망에서 밀접한 연결되어 있어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같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경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 간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협력권 구축을 시작으로 사회, 문화, 도시외교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할 것이다. 부산이 동북아 제조업 핵심도시 간 협력을 위한 거점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중개도시의 위치에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연계가 용이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권 강화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시장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림 14> 동남권 경제·산업 협력 방안



자료: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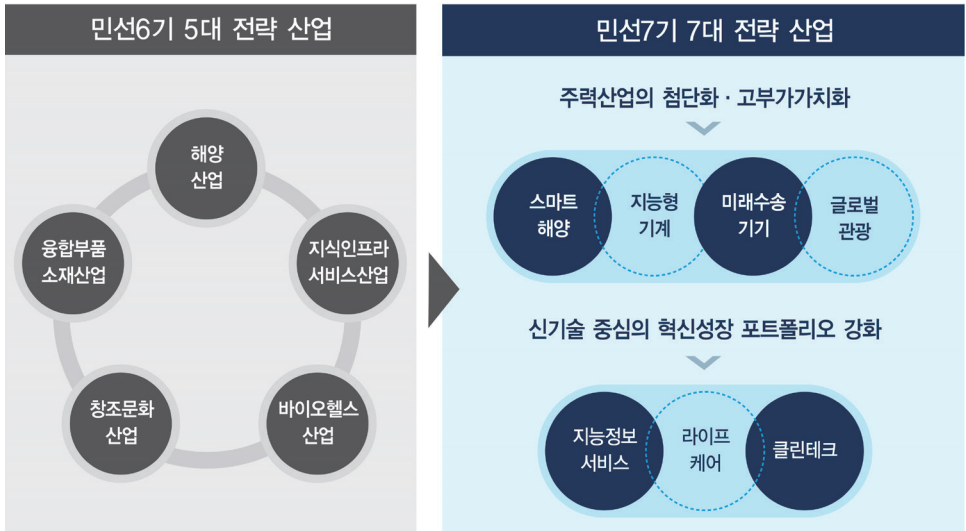
2. 新산업혁명 시대, 초광역 경제협력권 강화 방안 제언

1) 새로운 시대, 부산-후쿠오카 新협력 방안

초광역 경제협력권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남권-규슈 경제협력권 구성이 시급하다. 이후 중국의 제조업 거점도시와의 초광역 네트워크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도시 간 경제협력권이 완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한·중·일 초광역 경제협력권의 중추기능을 맡아야 한다.

일본 규슈(九州)는 후쿠오카(福岡) 등을 포함한 7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오카시는 일본의 서남부에 위치한 행정, 정보, 경제, 교육 중심 도시이자 규슈 최대의 비즈니스 거점 도시이다. 특히 후쿠오카시는 지리적으로 부산 지역과 인접하여 1990년 9월 27일 공무원 상호 파견 협정을 맺었으며 2006년 부산-후쿠오카 포럼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지리적 근접성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양 도시가 가진 경제·산업적 유사성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후쿠오카에는 자동차부품 등 부산의 주력산업뿐 아니라 로봇, 반도체 등 부산의 미래산업 관련 기업도 풍부하다. 이로 인해 양 도시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쿠오카시의 경우 부산으로부터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관심이 많다. 부산의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의 교육 수준이 우수하고 무엇보다 IT 분야의 역량이 우수하여 후쿠오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평가다. 이와 함께 창업 분야에서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서로가 가진 장점을 교류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초광역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그림 15>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현황



부산-후쿠오카간 초광역 협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미 충분히 합의가 이뤄진데 반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부산과 후쿠오카 양 도시간 협력은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변화가 심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지자체장을 하느냐

나에 따라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도 있는 반면, 형식적인 행사만 진행한 시기도 있다. 이는 양 도시간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지자체가 주도하지 않아도 교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간의 교류 협력은 대부분이 지자체와 대학 등 기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기별 부침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부산과 후쿠오카의 주력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에서는 물질 자원이 중요했던 반면,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생태계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의 정책적 지원의 효과가 낮은 반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부산-후쿠오카의 교류 협력을 상호간의 성장을 위하여 지속하기 위해서는 크게 인재교류, 기업교류, 정책교류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신기술 시장에서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므로 부산-후쿠오카 간 인재 교류를 우선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공정책의 효과가 낮으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업 및 민간 프로그램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창업과 관련된 인력과 정책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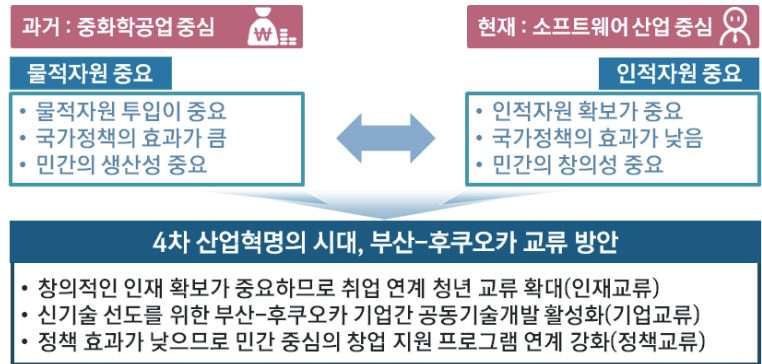
<표 2> 규슈경제권 주요 기업(매출액 기준 30개사)

(단위: 억 엔)

| 순위 | 기업명 | 업종 | 매출액 | 소재지 | 순위 | 기업명 | 업종 | 매출액 | 소재지 |
|----|---------------|---------|--------|-----|----|---------------|-----------|-------|-----|
| 1 | 九州電力(株) | 전력 공급 | 17,054 | 福岡 | 16 | イオン九州(株) | 슈퍼마켓 | 2,403 | 福岡 |
| 2 | トヨタ自動車九州(株) | 자동차 제조 | 10,079 | 福岡 | 17 | (株)ナフコ | 홈센터 | 2,299 | 福岡 |
| 3 | 東ソー(株) | 화학 | 5,286 | 山口 | 18 | (株)アトル | 의약품 판매 | 2,141 | 福岡 |
| 4 | ソニーセミコンダクタ(株) | 반도체 제조 | 5,079 | 熊本 | 19 | (株)新出光 | 주유소 운영 등 | 2,131 | 福岡 |
| 5 | (株)コスモス薬品 | 약국 | 4,085 | 福岡 | 20 | 九州旅客鉄道(株) | 여객, 철도 | 2,111 | 福岡 |
| 6 | TOTO(株) | 욕실기기 제조 | 3,876 | 福岡 | 21 | 南国殖産(株) | 건자재종합상사 | 1,972 | 鹿児島 |
| 7 | (株)アステム | 의료기기 판매 | 3,776 | 大分 | 22 | (株)翔薬 | 의약품 판매 | 1,934 | 福岡 |
| 8 | コカ・コーラウエスト(株) | 음료 판매 | 3,705 | 福岡 | 23 | (株)トクヤマ | 화학 | 1,848 | 山口 |
| 9 | (株)トライアルカンパニー | 할인점 | 3,514 | 福岡 | 24 | (株)安川電機 | 산업용 로봇 제조 | 1,832 | 福岡 |
| 10 | 日産車体九州(株) | 자동차 제조 | 3,511 | 福岡 | 25 | 小野建(株) | 건자재전문상사 | 1,766 | 大分 |
| 11 | ヤマエ久野(株) | 식품전문상사 | 3,201 | 福岡 | 26 | 沖縄電力(株) | 전력공급 | 1,743 | 沖縄 |
| 12 | ダイハツ九州(株) | 자동차 제조 | 3,070 | 大分 | 27 | 大分キャノン(株) | 카메라 제조 | 1,722 | 大分 |
| 13 | 宇部興産(株) | 화학 | 3,018 | 山口 | 28 | (株)サンエー | 슈퍼마켓 | 1,682 | 沖縄 |
| 14 | (株)九電工 | 전기설비 시공 | 2,811 | 福岡 | 29 | ダイレックス(株) | 가스 공급 | 1,638 | 佐賀 |
| 15 | (株)タイラベストビート | 유희, 오락 | 2,742 | 福岡 | 30 | 東京エレクトロン九州(株) | 반도체장비 제조 | 1,598 | 熊本 |

자료: WEEKLY BIZ(2019)

<그림 16> 부산-후쿠오카 교류 협력 방향



2) 부산-후쿠오카 간 新협력을 위한 정책 제안

본고에서는 부산-후쿠오카 간 교류 협력을 위한 3가지 교류방향에 맞춰 구체적으로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新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부산-후쿠오카 협력 전략을 사람·기술·시장으로 나눠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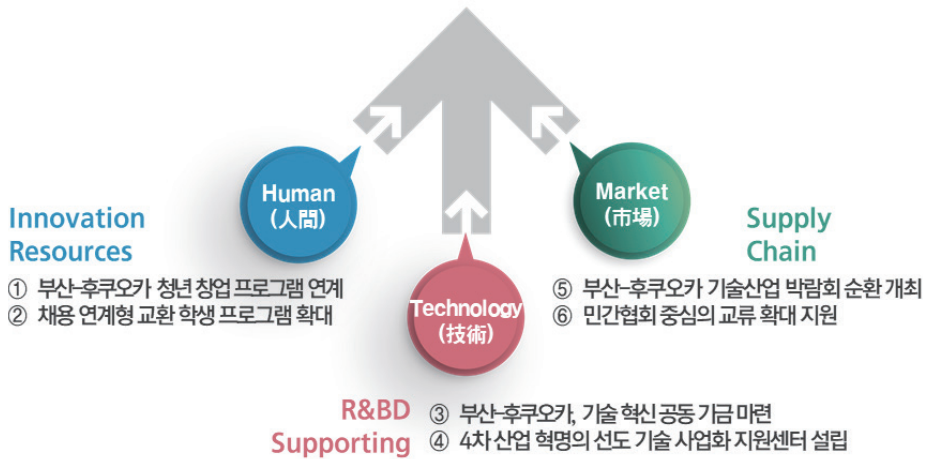
앞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하였지만, 먼저 사람에 해당하는 혁신 자원 (Innovation Resources)의 교류를 위한 부산-후쿠오카 청년 창업 프로그램 연계, 채용 연계형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양 도시간 이뤄져야 하며, 상호 추진 또는 계획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기술 분야인 기술개발 지원(R&BD Supporting)으로 부산-후쿠오카 기술 혁신 공동 기금 마련,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술 사업화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그간 부산-후쿠오카 교류협력이 지속되지 않은 배경에는 편당의 문제를 들 수 있다. EU의 경우 회원국의 R&D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공동 펀드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회원국 간의 공동 연구 등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후쿠오카 양 도시간 공동 R&D 펀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 도시의 혁신 기관이 가진 강점의 공유를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가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신규 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양 도시에 기 설립된 기관 중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부산의 경우 테크노파크 등에서 추진가능할 것이다. 양 도시가 본 펀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양 도시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의 공유를 통해 양도시가 가진 유사한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Supply Chain)과 관련하여 부산-후쿠오카 기술·산업 박람회 순환 개최, 민간협회 중심의 교류 확대 지원을 제시해 본다. 앞서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부산과 후쿠오카에 위치한 기업들의 업종에 유사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공급망 차원에서 공급과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류의 장이 필요하며 현재 이뤄지는 소규모 미팅이 아닌 부산-후쿠오카 내 기업들만을 위한 박람회를 순환 개최하여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의 장이 지속될 경우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다양해질 것이며 이는 추후 정치적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도 꾸준히 시도되었던 민간협회들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간담회 정도의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사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연계시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사업화 지원센터가 본 사업의 간사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 17> 부산-후쿠오카 교류를 위한 추진전략



1) 혁신자원 육성(Innovation Resources)

부산-후쿠오카 간 교류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혁신자원의 교류에 있다. 지리적 인접성과는 달리 사회, 교육 체계는 다르므로 인적교류를 통해서 부족한 영역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강점은 많은 대학을 통해

잘 교육된 초급 인력의 배출에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부분이 IT 기술에 익숙하여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은 직접 채용을 위한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후쿠오카는 최근 창업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쿠오카 다이묘 지역의 폐교에 설립된 Fukuoka Growth Next'의 경우 민관협력 창업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로 부산의 창업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서로가 가진 강점을 공유할 경우 실패를 줄이면서 성과는 높일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용이할 것이다. 부산이 가진 인적 자원과 일본의 내수시장이 창업으로 연결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산지역 기업의 일본시장 진입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우선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부산-후쿠오카 청년 창업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후쿠오카 간 청년 일자리 수급 균형을 위한 채용 연계형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부사업의 방향은 두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공유와 창업 교류이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간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창업이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창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은 부산에서 공급하고 제도와 시장을 일본에서 제공할 경우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부산-후쿠오카의 지속가능한 교류가 시작될 것이다.

2) R&BD 지원(R&BD Supporting)

인적교류와 함께 부산-후쿠오카 공동협력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교류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흐름도 빨라 가야말로 집단지성이 필요한 기술들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용한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는 속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높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다. 부산이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며, 그중 인접한 일본과

의 기술 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과 후쿠오카 간 기술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부산-후쿠오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유럽연합(EU)와 같이 부산-후쿠오카 기술 혁신 공동 기금 마련과 신기술 시장의 선도를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부산-후쿠오카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EU의 경우 회원국들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EU 모델을 만들었다. EU 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혁신정책 기금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준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혁신연합을 구성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기금과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펀드를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국 내 간사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부산-후쿠오카는 포럼 정도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간사기관이 있을 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도, 지원체제도 미흡하다. 이로 인해 행사 중심의 교류만 이뤄지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류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뿐 아니라 양 도시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후쿠오카 혁신 연합을 제안한다.



<그림 18> 혁신자원 육성 방안



<그림 19> 유럽연합 혁신 모델



| | | |
|----|--|---|
| 1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환경조성에 관한 저변 확대 ✓ EU 혁신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혁신 정책 발표, 공동연구 정책 수립, 과학 및 기술분야 공동정책 발표, 혁신정책 준비 • 혁신실행계획 수립·발표 |
| 2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정책 자금 조성 ✓ 핵심 자금 확대 조성 ✓ 오픈이노베이션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 전략 • 혁신적 유럽 만들기 제안서, EU 포괄적인 혁신전략 발표 • 유럽 혁신지역 조성, 유럽연합 혁신정책의 오픈컨설팅 |
| 3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연합 ✓ 오픈이노베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pe 2020 Strategy, 유럽 혁신 동반자 관계 구축, 혁신 연합 주력 사업 • The State of the Innovation Union 보고서, 과학, 연구, 혁신 수행 발표 |

3) 공급망 확대(Supply Chain)

마지막으로 부산-후쿠오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공유가 필수적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시장체제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숙명과도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²⁾'를 요구한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산업용 장비 등과 같이 특정 목적용 제품들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산은 후쿠오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이러한 시장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장측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부산과 후쿠오카 양 도시 기업들의 만남이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각 기업들이 가진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부산-후쿠오카 기업의 글로벌 판매망 확대를 위한 부산-후쿠오카 기술·산업 박람회의 순환 개최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민간협회 중심의 교류 확대 지원을 추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부산과 규슈 지역의 산업의 유사성이 높고 특히 후쿠오카에 위치한 기업들과 부산지역 기업들 간 업종이 비슷하여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교류가 용이하다. 다만 언어적 문제, 정치적

2) 실차시험 성적표 같은 것으로 최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부품업체에 트랙 레코드를 요구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순환 개최되는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식적인 장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만나고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양 도시간의 산업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기업 협회 간 교류를 강화하여 단순한 간담회 회원 수준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초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20> 공급망 확대 방안



나가며 : 한남해 경제권을 넘어 초광역권으로 경제영토 확장

우리나라와 일본은 애증(愛憎)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책 제목이 있듯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묘한 관계의 나라가 일본이다. 과거의 역사로 인해 살갑게 지내기도 어렵고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산업적 연계성으로 인해 멀리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여전히 과거의 역사는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일본이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인접한 일본, 그 중에서 후쿠오카를 포함한 규슈화의 초광역 협력의 아닐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Nordic Countries)들도 동북아와 같이 침략과 지배로 얼룩진 시기가 있었다. 1520년 덴마크는 독립을 요구하던 스웨덴을 침략하였고, 1814년 키엘 조약으로 노르웨이는 스웨덴의 영향 아래 놓였으며 그린란드, 아일랜드는 덴마크에 할양되었다. 노르딕 국가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건 20세기 초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근대의 일이다. 노르딕의 역사를 보면 우리처럼 가까이 하기엔 먼 나라가 될 수 있을 법도 한다. 그런데 노르딕 국가들은 EU 내에서도 상호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국가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표적 협력 사례가 '외레순' 클러스터이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를 잇는 외레순 대교를 건설하여 덴마크와 스웨덴 간 초광역 협력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과 후쿠오카도 역사를 뛰어넘어 미래를 위한 연결이 필요하다. 부산-후쿠오카가 외레순 대교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이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세안을 포함한 유라시아 게이트웨이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산-후쿠오카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남부지역을 잇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에 대응하여 동남권의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슈지역의 경제적 교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서 부산-후쿠오카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도시간 교류협력은 정치적 영향이 없도록 별도의 기금과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1> 신남해안벨트를 넘어 한일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앞에 와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방향 키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배가 뒤집어질 수도, 높은 파고를 넘고 수평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부산-후쿠오카는 높은 新혁명의 파고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배척이 아닌 협력의 관계가 필요하다. 부산이 동남권을 넘어 남해안 경제권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간 이해관계,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광역교통망과 같은 사업은 지역간 갈등이 작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해안권의 광역협력도 어려운 시점에서 후쿠오카와의 협력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3대 교류분야, 6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본고에서 제안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도 노르딕과 같은 초광역 경제 협력권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남해안벨트를 넘어 한일 초광역 네트워크의 시작을 부산-후쿠오카 포럼과 함께 본고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력 사업으로 이뤄내길 간절히 바란다.

배수현 프로필

(재)부산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과 부산광역시 도시기획보좌관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낸 보고서는 센터 중심 글로벌 ICT밸리 조성(2015), 부산지역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2016), 부산지역 주력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확대 방안(2017), 부산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2018), 부산광역시 균형발전계획 수립(2018) 등이 있다.

창간호를 펴내며

동서대가 『地域社會(지역사회)』잡지 창간호를 발행했다.

코로나19로 수상한 시절에 고고성을 올렸다.

부산 엄광산 기슭에 터 잡고 숲한 인재를 길러온 대학이

지역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뎠다.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밑거름이 됐다.

대학 간행물은 학술 연구지가 많다. 실리는 글도 전문성을 갖췄지만, 내용이 어렵기 십상이다.

독자층도 대학사회 테두리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地域社會』는 전문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공리공론(空理空論)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지향한다.

목적한 주제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하길 꿈꾼다.

창간호인 만큼 표지부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래 견주었다.

내용도 '지역연구 특집 1, 2, 3'과 '이슈 분석' 등을 통해 무게와 깊이, 넓이를 더했다.

필진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지닌 분들을 많이 모셨다. 평가는 냉철한 독자 제현의 몫이리라.

『地域社會』의 꿈은 무언가. 먼저 중앙집권주의가 득세하는 이 땅에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울곧게 전하는 신문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사회의 이슈와 현안을 발굴하고 해부하여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특히 우리 지역이 정보의 수신지로 머물지 않고, 정보의 발신 기지가 되는 데 일조를 했으면 더욱 좋겠다.

이 버거운 꿈들이 흰소리로 끝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첫 술에 배부르랴. 심호흡을 하며 우보천리(牛步千里)를 다짐해 본다.

장지태 본지 편집인



학교 발전기금 안내

『지역사회』는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가 연간 2회 발간하는 잡지로,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서대의 인재 양성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분께는 가정이나 지정하신 곳에서 발행과 동시에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서대 발전기금 계좌 농협 1275-01-004828

문의처 Tel. 051-320-1500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 추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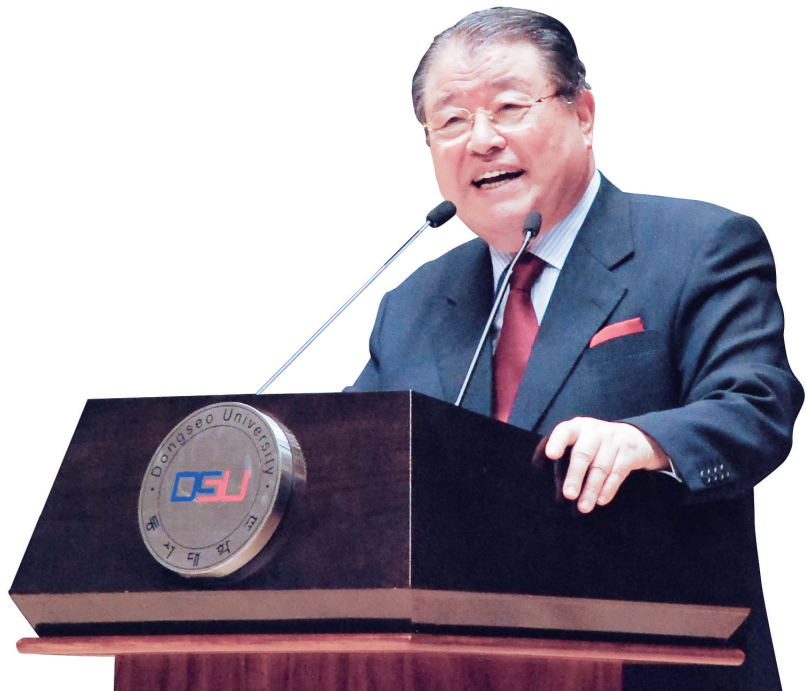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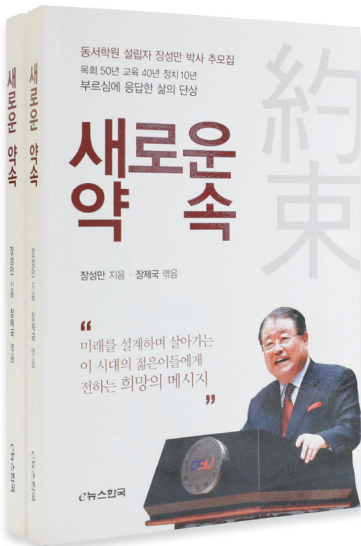
목회 50년 교육 40년 정치 10년

부르심에 응답한 삶의 단상

새로운 약속

장성만 지음 · 장제국 엮음

“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동서대학교에서 내일의 나를 꿈꾼다

미래형대학을 선포한 동서대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실현합니다
혁신적인 강의 시스템으로 융복합 교육을 구현하고
각자의 가능성을 열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T.H.E. Only O.N.E. 교육

개인의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교육과
체험과 융합을 통한 다양한 경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셀프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T

Talent
달린트 교육

H

Hybrid
융합 교육

E

Experiential
경험학습

Only

Only
브랜드
프로그램

O

Open
개방형
교육지원체계

N

Nurture
총체적
학생지원

E

Evaluation
데이터기반
평가관리